

제 147호

세계 농업
WORLD AGRICULTURE

2012. 11

『세계농업』은 국내외 해외농업동향 관련 자료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용택	선임연구위원	yongkim@krei.re.kr	TEL 02-3299-4233 / FAX 02-968-7340
	이혜은	연구원	flaubert@krei.re.kr	TEL 02-3299-4244 / FAX 02-968-7340
	최양규	인턴 연구원	ygchoi@krei.re.kr	TEL 02-3299-4178 / FAX 02-968-7340

목 차

PART 1 해외 농업·농정 동향

PART 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국제농업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과제: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김지영 | 39

일본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정승은 | 57

미국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이대섭 | 89

PART 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외식산업

세계 외식산업의 분야별 동향반현정 | 105

세계 외식산업의 현황과 특징최지현 | 129

세계 외식산업의 전망이동소 | 143

주요국의 외식산업 동향차원규 | 149

PART 4 세계농업 브리핑

주요 외신 동향163

●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농정 동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ASEAN + 1FTA 이상의 부가가치

□ ASEAN¹⁾의 구심력 유지를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지금까지 14개국의 산업계는 동아시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²⁾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ASEAN + 1FTA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과제를 얼마나 RCEP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동아시아의 생산·조달 네트워크 최적화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가 과제임.
- ASEAN 및 관계 각국 정부는 2012년 중 RCEP 교섭을 시작하기 위하여 참가 기준을 작성하길 서두르고 있음. 한편, RCEP의 경제적 합리성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국내 산업을 개입시키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 산업계에 RCEP의 개념 자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평가할 수 없는 모습이 부각되었음.
- RCEP이 2011년 아시아 태평양의 외부환경이 변하면서 「ASEAN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하려는 견해가 있음.
 - 중국의 한 연구자는 RCEP은 ASEAN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³⁾교섭이나 한-중 FTA와 한-중-일 FTA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제휴로 ASEAN이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역의 경제 제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함.
 - 인도네시아 상업성 통상협력과장은 RCEP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에 대항하는 국제협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ASEAN 역내 평가

- ASEAN 내에서도 「FTA 추진국」 위치가 부여되어 실제로 TPP 교섭에 참가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RCEP에 대하여 적극적인. ASEAN 10개국은 RCEP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3) Trans-Pacific Partnership.

교섭에 참가할 국가들과 이미 FTA를 발효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RCEP에 의한 수출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함.

- 말레이시아는 RCEP은 위협이 아닌 오히려 제품에 경쟁력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5개의 ASEAN+1FTA가 RCEP으로서 통합되면, 각각 다른 원산지규칙의 조정과 더불어 누적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누적 규정’을 통한 일부제품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장점을 강조함.
- 지금까지 ASEAN은 5개의 ASEAN+1FTA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해 왔지만, 실제로는 각각 ‘분단’되고 있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올렸음.

○ 지금까지 체결해 온 FTA에서는 관세 삭감 및 철폐가 되지 않은 품목도 있어, RCEP 교섭으로 ASEAN+1FTA나 2개 국가 간 FTA를 상회하는 관세 양허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음.

○ 베트남은 RCEP에 거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섭이 아니라고 경계함. 베트남 정부는 TPP 및 EU와의 FTA교섭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

- FTA로 미국, EU 등 선진국시장이 개방되어도 단순히 제품이 베트남에 유입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베트남에 있어서는 편리한 FTA라고 판단하고 있음.
- 베트남 섬유 업계는 옷감을 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RCEP으로 중국산 옷감을 사용하면, 일본이나 한국 등 RCEP 가맹 선진국에 적합한 수출 환경이 조성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음. 섬유산업이 중국제 옷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도 같은 입장임.
- RCEP실현으로 시장 확대에 기대가 큼. ASEAN 내에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일의 산업집적을 자랑하는 태국은 RCEP을 환영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산업에서는 일본에서의 신기술이나 신모델의 투입 타이밍과 ASEAN 및 주변국에서의 투입 타이밍 조절여부에 따라 판매 수량이 좌우됨.
- 신기술이나 신모델에 필수적인 부품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지금까지 태국에서 인도에 수출할 경우, ASEAN-인도 FTA(AIFTA)의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킬 수 없어 특혜관세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많았음.
-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RCEP이라면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다고 강하게 기대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RCEP은 인도의 참가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많음.

어떤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은 중국과 인도를 같은 FTA의 틀에 넣는 것으로 원재료나 부품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 삭감으로 연결된다고 환영함.

□ 인도의 입장이 중요

- 역외 6개국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과 이미 ASEAN+1FTA로 연결되어 있어 RCEP은 ASEAN에 있어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극적인 무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역외 6개국은 ASEAN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상호의 FTA에 의한 것이 아님. 실제로 FTA가 발효되어 있는 것은 인도와 한국 및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지극히 일부임.
- 이들 6개국이 연결되면, ‘RCEP의 경제효과는 5개의 ASEAN+G1FTA 이상’이라고 기대되지만, RCEP 교섭 시작이 다가오는 가운데 6개국의 산업계에서는 RCEP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아시아 각국에서는 농산품이나 식품·음료 등에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유업기업, 과일수출기업, 음료업체는 FTA 미체결 및 미발효인 일본, 한국, 인도 등으로의 수출로 관세가 삭감되면 크게 유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RCEP 교섭의 행방을 크게 좌우할 것은 인도임. 인도 정부는 RCEP에의 참가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부로서는 RCEP 참가에 의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함.
 - 산업계는 RCEP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경계하고 있음. 인도 수출조합연합회 총재는 중국의 덤핑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가 안이하게 RCEP에 참가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음
 - 인도 산업계에 중국과의 FTA 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없으며,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남서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중국은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덤핑을 되풀이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불신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도의 RCEP 교섭 참가 자체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함.
- RCEP에 의한 다국 간 교섭에서는 높은 수준의 FTA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음.

중국의 전문가는 5개의 ASEAN+1FTA의 수준에는 편차가 있어, RCEP이 이들 5개 FTA의 어느 것보다도 수준이 높아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함.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東アジアの地域包括的經濟連携(RCEP)をどうみるか」
(<https://www.jetro.go.jp> 2012.09)

우크라이나, 밀 수출 중단 계획

□ 식량안보 위협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밀 수출 중단

- 우크라이나는 11월 중순부터 밀 수출을 중단하는 것을 계획함. 올 여름 식량 상품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래로 무역 제한을 위한 주요 밀 생산국의 첫 번째 움직임임.
 - 이러한 움직임은 2007-08년 식량위기를 악화시킨 수출금지 조치에 관한 우려를 다시 제기할 것임.
 -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랍의 봄⁴⁾(Arab Spring)’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정부는 무역업자들에게 수출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알렸으며 이를 수출업자들의 상호협약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금지 통보임.
-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조지 주코스키(Jorge Zukoski)는 11월 15일부터 밀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힘. 키예프의 농업 장관은 수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은 없으나, 만약 수출이 증가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면, 대책을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함.
- 우크라이나는 세계 10위의 밀 수출국이며,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더불어 세계 밀 수출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음.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의 중요한 밀 공급 국가들은 올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음. 무역업자들은 현재 모스크바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10월 28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은 총선 직전에 있음. 가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주식인 밀과 빵에 대한 가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임.
- FAO 압둘레자 아바시안(Abdolreza Abbassian) 선임 경제학자는 어려운 국내 상황 때문에 국가들이 수출 제한을 고려할 경우, 내년 세계 시장 및 개인 소유의 곡물 부

4)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의 통칭임.

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수출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판매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기존 판매를 포함시킬지는 명확하지 않음.
 - 곡물 무역업자에 따르면, 11월 초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 제한 금지에 대한 규칙을 명확할 것임.
- 정부는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여 시장 간섭의 비난을 받길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정부는 여러 제안을 통해 무역업자의 상호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 자료: Financial Times(<http://www.ft.com> 2012.10.19)

유럽의회, 일본과의 FTA 촉진 협의

■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대책 강조

- 유럽의회는 10월 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일본과의 FTA교섭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음.
 - 동 결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유럽의회는 6월, 가맹국으로 구성된 EU각료이사회에 대하여, 유럽의회 의견의 기다리지 않고, 일본과의 FTA 교섭 시작을 결정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었음.
- 리스본 조약⁵⁾에 의해, 공동통상정책분야의 입법에도 유럽의회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음.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규칙 등 동 분야의 입법이 필요함.
 - 유럽의회 동의 없이 FTA를 이행하는 것은 곤란함. FTA의 잠정적용에는 유럽 의회의 동의는 법적으로는 불필요하지만,⁶⁾ 최종적인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됨.
 - 리스본 조약 발효이후, 유럽의회 영향력은 강해지고 있음. 유럽의회 전문 부회인 국제무역 위원회는 이미 10월 11일, 일본과의 FTA 교섭 시작을 촉진하는 결의를 하였음.
- 금번 채택된 결의는 비관세장벽이 현지 기업에 유리한 규제, 관행을 초래하고 있어 관세이상으로 제거가 곤란하다고 강조함.
 - EU산업계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없었지만, 만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삭감된다면, EU의 대일(對日)수출은 최

5) Treaty of Lisbon: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이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후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보통 리스본조약이라고 부른다. 조약의 내용은 유럽연합의 내부 통일을 공고히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띤다. 먼저 유럽연합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 대신 임기 2년 6개월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는 유럽연합 대통령직(상임의장)을 신설하고,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정책 대표직도 신설하였다. 의사결정 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 제도에서 이중다수결 제도로 변경된다. 이중다수결 제도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유럽연합 전체인구의 65% 이상,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7년에는 전면 실시된다.

6) 지금까지의 EU의 FTA는 EU측은 EU과 더불어 가맹 각국도 당사국이 되고 있다. 최종적인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EU뿐만 아니라 가맹 각국에서의 비준 수속이 필요하고,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분야의 규정에 한하여, EU내의 수속만으로 잠정적으로 적용한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EU FTA는 아직 정식 발효되지 않고 있지만, 2011년 7월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 71% 증가할 수 있다고 함.

- 유럽의회는 교섭 권한에 자동차분야의 비관세장벽제거를 위한 「명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특히 「zoning 규제」나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규제, 일본의 경차(輕車) 우대와 같은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전자기기나 우정(郵政)사업, 철도분야의 조달에서의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도 제거되어야한다고 언급함.

□ 일본의 대응이 불충분하면 교섭 정지 불가

- 금번 결의는 대일(對日) FTA교섭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검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검토 조항의 삽입을 요청함.
 - 일본이 EU의 우선적 요구를 만족하면서 충분한 야심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섭을 정지해야 한다고 함. 결의는 재검토 조항의 일환으로 영향 평가의 실시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 결의에는 어업과 고래잡이(捕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EU-일본 간에 심각한 차이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고래잡이, 고래제품 거래의 폐지 문제를 논의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결의를 정리하여 보고한 유럽자유민주동맹(ALDE) 의원은 일본과의 무역에 관한 결의 투표는 EU를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 1개와 자유무역 교섭을 위한 조치로 적당하지 않으므로 유럽위원회가 일본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함을 언급함.
 - 재검토를 상세히 하기 위해서는 교섭으로부터 1년 이내의 구속력 있는 재검토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을 제시하였음. 성공의 열쇠는 특히 자동차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한다는 약속을 일본이 지키도록 하는 것임.
- 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현재 7월에 제시한 교섭안(案)에 대하여 가맹국과 협의하고 있음. 11월 29일에 개최되는 EU 외무장관 이사회는 동 지령안 승인을 협의할 것임.
 - 한편, 10월 19일에 발표된 유럽이사회 총괄에서도 대일 FTA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내에 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섭 지령안의 협의를 요청하였음.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0.26)

일본,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원대책 가입 증가로 단가 재검토

■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보전형 직접지원대책 재검토

- 농림수산성은 지구 온난화방지 등을 위하여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 지원 대책’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단가 설정 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
 - 가입 4년째 이후의 농가의 지원 단가를 기본의 80% 정도로 억제하고, 남은 재원(財源)을 신규 가입자에게 배정할 예정임. 상기 대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 대책은 2014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며 가입자를 높이기 위하여 2013년에는 ‘퇴비 사용(施用)’을 전국 공통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음.
- 2013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서 동 대책은 작년과 같은 24억7,000만 엔을 계상함. 가입 4년째 이후의 농업자에 대한 지원 단가를 2014년도부터 내리는 것은 재원 가운데 환경보전형 농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농업자를 늘리기 위해서임. 가입 3년째까지는 정착 기간으로 보고 전액을 지불함.
 - 동 대책은 2011년도에 시작되었음. 화학 비료·화학농약을 50% 이상 줄이면서, 환경보전의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을 하는 농업자에게 10a당 최대 4,000엔을 지불함.
- 전국 공통 지원 대상에 2013년도에 투입하는 퇴비 사용(施用)은 탄소를 흙 안에 모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에 효과가 있는 대책의 하나임. 축산 분뇨나 볏짚 등 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현재는 10개 도현(道縣)이 도입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은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하였음.
 - 비용을 점검한 결과 퇴비 사용(施用)의 지원 단가는 현행보다 300엔 이하로 인하한 2,200엔으로 결정함.
 - 2013년, 현행에서는 전국공통의 지원 대상인 겨울 철 논외 물 관리, 무간(畝間)⁷⁾에 보리류 등을 심는 리빙 멀티(living multi), 초원재배 등을 지역특인(特認)⁸⁾으로 바꾸고 있음. 도도부현(都道府縣)이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4,000엔의 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함.

7) 고랑, 두둑과 두둑 사이.

8) 지역별로 특별하게 허락하는 것.

- 녹비(綠肥)⁹⁾ 등을 이용한 피복작물(被覆作物, cover crop)¹⁰⁾의 경작과 유기농업은 전국 공통으로 설정하고 있음. 단가는 4,000엔으로 그대로 두며, 단지 유기농업 중 통상적으로 약간의 비료·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은 1,500엔으로 인하한다고 함. 메밀이나 잡곡, 사료작물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동 대책의 재검토는 정부의 행정쇄신회의로부터 작년 11월 ‘환경보전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의 도입을 장려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농림수산성이 올해 5월부터 지식인 회의를 마련하여 검토한 것임.

※ 자료 : 日本農業新聞(2012.11.01)

9) 생풀이나 생나무 잎으로 하는 거름.

10) 토양을 비료의 유출 및 침식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과수 사이 또는 계절적 작물 사이에 재배되는 작물.

일본, 농림수산업성 보리와 대두 경작확대 대책 검토

□ 보리와 대두, 육종 및 수요증가 등 검토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장관은 19일 내각회의 후 회견에서 전작(轉作)¹¹⁾ 조성금에 해당하는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수전(水田) 활용교부금에 대하여 보리와 대두의 2012년도의 경작 계획 면적이 작년도를 밑돈 것과 관련하여 경작 확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
 - 현행 보조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용도에 따른 품종개발이나 수요의 발굴, 경작을 촉진시키는 시책 등을 조합하여 추진할 방침임.
- 보리와 대두의 경작 확대 대책은 자민당 정권시대를 포함하여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어 왔지만, 민주당 정권이 내세우는 식량 자급률 목표 50% 달성에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임.
 - 중장기 목표의 중점과제로서 2013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임. 민주당도 호별소득보상제도 검토팀(working team)을 구성하여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성 장관은 우량 품종의 육성이나 보급, 10a당 수확량을 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집단윤작시스템(block rotation)¹²⁾이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지역전체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동 교부금대상인 보리·대두의 경작이 감소한 요인으로서 토양 등의 관계에서 생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고 지적함. 동 제도에서 사료용 쌀이나 쌀가루용 쌀, 가공용 쌀 등 주식용 이외의 쌀 경작을 전작작물로 한 것에 대하여 전작이 약간은 쌀에 치우쳤다는 인식도 나타냄.
- 동 교부금에서는 신규 수요미 (쌀가루용·사료용·발효 조사료용)에 10a당 8만 엔,

11) 재배하던 농작물을 그만두고 다른 농작물을 재배함.

12) 논·전작(轉作)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구(地區)전체를 몇 개 블록에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집단전작(轉作)의 방법.

보리·대두·사료작물에 3만5,000엔, 메밀·유채의 씨·가공용 쌀에 2만 엔을 교부함. 대상이 되는 경작 계획 면적은 작년의 지불 실적과 비교하여 보리가 3,579ha, 대두가 4,062ha 각각 감소하였음.

- 한편 가공용 쌀은 5,460ha, 신규 수요미는 2,893 ha 각각 증가하였음. 단, 가공용 쌀은 작년에 약 1만 ha 감소하였고 신규 수요미는 작년보다 약 2만8,000ha 증가하였음.

※ 자료 : 日本農業新聞(2012.10.20)

미국, 온라인 소비자 불만 전자신고 양식 발표

■ 식품안전검사국, 온라인 소비자 불만 전자신고 양식 발표

-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소비자가 육류, 가금류 및 난제품(卵製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전자신고 양식(Electronic Consumer Complaint Form)’을 발표함.
 - 온라인 양식¹³⁾을 통해 소비자들은 질병, 알레르기 반응, 부상, 부적절한 라벨 표시 및 수입제품 관련 문제를 소비자 불만 감시 체계(Consumer Complaint Monitoring System, CCMS)에 보고할 수 있음.
- USDA 식품안전 담당국장 엘리자베스 하젠(Elisabeth Hagen)은 소비자는 미국의 육류, 가금류 및 난제품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함. 이 새로운 체계는 식품 공급의 감시를 강화하고, 식품 매개 질환(Foodborne illness)을 예방하며,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검사국에 문제를 보고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소비자 불만 감시 체계에 문제가 신고 되면, 소비자 불만 감시 체계는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거나, 식품안전검사국 검사관이 기존의 동일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게 됨.
 - 사례별로 식품안전검사국은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함.
- 식품안전검사국은 미국의 식품공급에서 공중보건위험을 발견하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01년에 설립됨. 신고 된 사례들은 우선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보건부, 또는 미국 농무부의 육류 및 가금류 제보 핫라인¹⁴⁾(Meat and Poultry Hotline)을 통해 식품안전검사국 지점으로 보고됨.
- 식품안전검사국에 문제를 신고하길 원하거나, 식품 안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소비자들은 육류 및 가금류 제보 핫라인에 무료로 통화할 수 있음.

13) <https://ccms.fsis.usda.gov>.

14) 주중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함.

- 식품 안보 가상대리인 ‘카렌에게 문의하세요(Ask Karen)’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¹⁵⁾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음.
- 소비자불만 온라인신고 양식은 식품안전검사국의 2011-2016전략 계획(Fiscal Year 2011-2016 Strategic Plan)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중요한 세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식품 매개 질환 예방,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이해 및 변화(Understand and Influence the Farm-to-Table Continuum), 소비자의 권한 확대와 사회기반시설 강화(Empower People and Strengthen Infrastructure) 등임.
- 식품안전검사국은 온라인신고 양식 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식품안보실무단(Food Safety Working Group)의 세 가지 핵심 원칙에 입각하여 중요한 공중보건대책을 마련함.
 - 검사·보류 정책(Test and hold policy) : 위해물질에 대한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육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노출이 줄어들 것임.
 - 라벨표시(Labeling requirements) : 생육(raw meat) 및 가공류 제품의 영양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
 - 공중보건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 포괄적인 자료를 통해 공중 보건추세와 식품안전검사국이 규제하는 약 6,300개 시설의 식품안전위반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사업 기준(Performance standards) : 가공류 생산업체가 병원균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함. 새로운 기준을 지난 2년 동안 시행함에 따라 식품안전검사국은 매년 약 5,000건의 캄필로박터(Campylobacter) 및 약 2만 건의 살모넬라 관련 질병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함.

※ 자료: USDA(<http://www.fsis.usda.gov>, 2012.09.27)

15) m.askkaren.gov.

CIS자유무역협정, 3개국 우선 발효

□ 당초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가 대상

- CIS자유무역권 창설 구상은 소련 붕괴 직후부터 있었음. 1991년 구(舊) 소련 구성 국가 중 발트 3국을 제외한 독립국가연합(CIS)¹⁶⁾이 결성되었으며 1994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Kyrgyz),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11개국이 자유무역권 창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¹⁷⁾
- 2003~2005년에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즈(Kyrgyz)에서 일어난 「색의 혁명」을 계기로 각국의 대(對)러관계가 변화되었음. 투르크메니스탄이 2005년에 준(準)가맹국 선언을 시작으로 CIS정상회의에 모든 국가가 참석하지 않았음. 2008년 8월에 발발한 러시아와 그루지야간의 분쟁을 계기로 그루지야가 2009년 8월 CIS를 탈퇴하면서 공동 보조가 약화되었음.
- 2011년 10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Kyrgyz), 몰도바, 타지키스탄이 CIS자유무역권에 관한 협정의 서명하면서 CIS권내(圈內)의 FTA발족에 희망이 보였음.
- 2012년의 4월에 러시아, 5월에 벨로루시, 8월에 우크라이나가 각각 국내에서 협정의 비준 수속을 완료함. 협정에 근거하여 선행 비준한 3개국만이 9월 20일에 협정이 발효되었음.
 - 아르메니아, 몰도바에서도 9월 의회에서 비준이 승인되었음. CIS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아르메니아는 10월 17일에 자유무역권에 가맹할 전망이나 몰도바의 가맹일은 미정임. 또한 카자흐스탄도 9월 26일에 하원 비준이 승인되었음.

□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도 참가

- 9월 28일에 우크라이나 알타(Yalta)에서 개최된 CIS정상회의에서 CIS자유무역권에

16)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7) 1992년부터 2006년에 걸쳐 CIS제국내의 2개국 간 FTA가 체결·발효되었음.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주최 측인 우크라이나 수상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12년 말까지 모든 협정 서명국의 비준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의 3개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권에 관한 협정의 서명을 보류해 왔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 6월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카리모프(Karimov)대통령과 회담한 결과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의 가맹을 후원하는 것에 합의함. 금번 CIS정상회의에서는 2012년 말까지 우즈베키스탄의 FTA서명 완료가 승인되었음.

□ 식품 등 일부 예외품목 설정

○ 금번 FTA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협정 가맹국간에는 수출입 시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출입의 수량규제를 하지 않고, 내국민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별로 일부 예외가 있음.

-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산(産) 정제당에 대하여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가 1톤당 340달러의 수입 관세를 부과함. 국가 및 원산국에 따라, 당류, 사탕무의 종자, 담배, 보드카(vodka), 에탄올이 예외 품목으로 수입 관세가 부과됨.
- 수출 관세, 수량규제,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이 있음. 이는 원산국의 결정은 2009년 11월에 성립된 「CIS에 있어서의 원산국 결정 규칙에 관한 협정」에 근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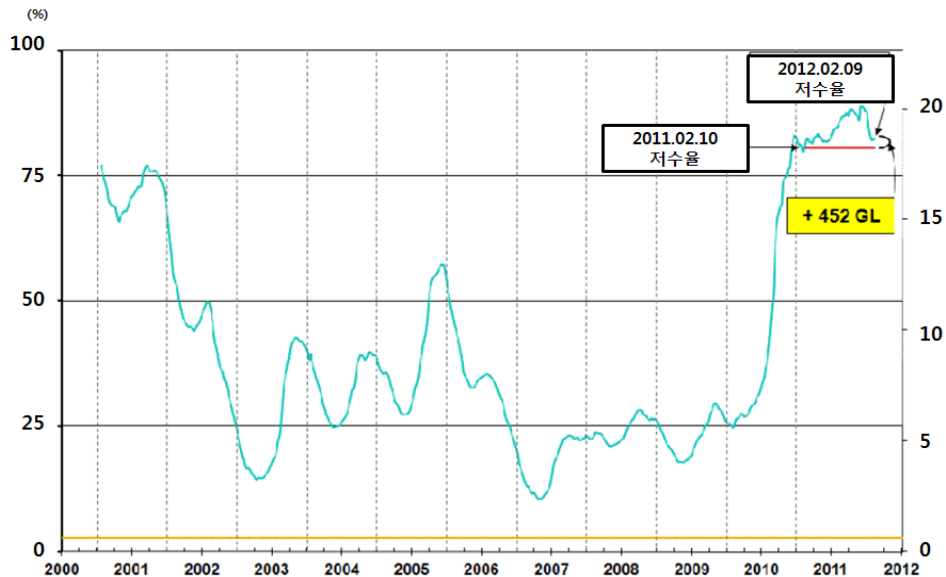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0.09)

호주, 수자원과 관개농업

□ 호주의 수자원 현황

- 관개를 위하여 사용된 수량은 73.6억 톤임.¹⁸⁾ 수원(水源)은 하천저류가 29.1억 톤으로 38%, 표류수(漂流水) 20.4억 톤으로 26%, 지하수는 25.2억 톤으로 32%, 기타 2.4억 톤임. 호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뭄이었으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음.
- 호주에는 500개가 넘는 대규모 댐이 있으며 총저수(貯水)용량은 838억 톤임. 수천 개의 농장 근처에 소규모 저수지가 있음. 댐은 거의 20세기에 건설되었으며, 대부분이 1950년부터 25년에 걸쳐 완성되었음.
 - 1950년에는 72억 톤의 용량이 25년 후인 1974년에는 665억 톤과 9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 현재의 수준에 달하였음. 그 후 22년간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인구당 저수용량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임.

그림 1 달링강(Darling River) 유역 댐의 총 저수량



자료: Weekly Australian Climate Water and Agriculture Update ABARES, 2012.

18) 2006-07, 2008-09, 2009-10의 3개년 평균, 2007-08은 데이터가 없음.

- 호주에서는 한 번 가뭄이 들면 몇 년 간 계속되며, 대홍수가 발생하면 몇 년은 물이 부족하지 않음. <그림 1>은 달링강(Darling River) 유역 모든 저수지의 경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12년분을 표시하고 있음.
 - 2004년 1월 40% 가까이 저류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25%까지 내려간 후 회복 경향에 있지만, 당초 저수량에는 미치지 못함. 2002년에 50%를 넘은 저수율은 8년간 한 번밖에 50%를 초과하지 않음. 최근 한 번도 만수(滿水)가 되지 않았음.
 - 2010년에는 홍수로 현재까지 이수분(利水分) 저수로서는 100%를 넘어 만수가 계속되고 있음. 즉 2~3년분의 물이 축적되고 있어, 가뭄이 와도 해당년도에는 심각한 영향은 없음.

□ 오주의 관개농업

- FAO의 자료에 따르면 관개 면적은 255만ha¹⁹⁾이지만, 실제 관개 면적은 2006년도부터 4년간 192만, 185만, 176만, 184만ha로 전환하고, 약 70%에 머물렀음. 이는 30%정도가 관개 시설은 있으나 물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는 것임.

표 1 작물별 관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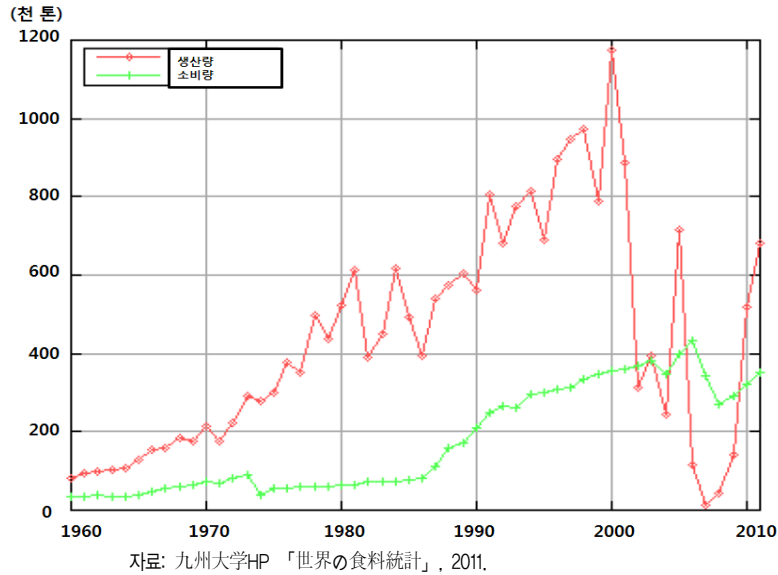
작물	경작면적 천ha	관개면적 천ha	관개비율 %
쌀	51	51	100.0
사탕수수	533	213	40.0
면화	304	270	88.8
과수, 견과류	165	122	73.9
식용채소	123	109	88.6
묘목, 화훼, 버섯	16	14	87.5
포도	163	147	90.2
초목 등	384,067	1,059	0.3
합계	445,149	2,405	0.5

자료 : 資料 : 玉井哲也, 「行政対応特別研究」 『オーストラリア』, 2009.

- 호주의 쌀 생산량은 2000-2001년에 절정을 이루어 164만 톤을 생산하였음. 가뭄을 겪은 해인 2002-2003년부터 3년간 34만 톤에서 55만 톤으로 약 1/3이하로 감소하였음.

19) 관개 농지면적 FAOSTAT.

그림 2 호주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



- 큰 가뭄을 겪은 2007년에는 1만 8,000톤까지 격감하였음. 그 전후 4년 동안 20만 톤 이하이었으며, 2000년의 1/10정도 생산되어 호주는 쌀 순수입국이 되었음. 2010년에는 73만 톤으로 회복하여, 2011-2012년 수확은 92만 톤이 될 전망이다.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 든 해와 풍작이 든 해의 수확량 차이는 90배 정도가 되는 해도 있었음.
- 농지면적은 제약 요인이 아니며 물 공급이 결정적인 사안임. 농지에 어떻게 물

표 2 관개 작목의 수생산성(水生産性)

작물	경작면적 천ha	관개면적 천ha	관개비율 %	관개수량 (水量)천톤	면적당 천톤/ha	사용 비율	관개생산액 A\$m	ML당 생산액 A\$
쌀	51	51	100.0	618,964	12.1	6.1	102	165
사탕수수	533	213	40.0	1,171,933	5.5	11.6	477	407
면화	304	270	88.8	1,819,316	6.7	18.0	908	499
과수, 견과류 등	165	122	73.9	608,138	5.0	6.0	1777	2,922
식용채소	123	109	88.6	419,249	3.8	4.2	1761	4,200
묘목, 화훼, 버섯	16	14	87.5	66,267	4.7	0.7	737	11,122
포도	163	147	90.2	591,945	4.0	5.9	1314	2,220
초목 등	384,067	1,059	0.3	3,672,438		36.4		
합계	445,149	2,405	0.5	10,084,596	4.2	100.0	9076	900

자료: 玉井哲也, 「行政対応特別研究」 『オーストラリア』, 2009.

을 공급하는지, 즉 관개 가능한 농지면적이 생산량을 결정하게 됨. 호주의 관개 농지에서 생산되는 작목에 대한 단위 수량(水量)당 생산액(수생산성(水生産性))은 다음과 같음.

- 쌀은 사용수량(使用水量) 1,000톤당 생산액은 165호주달러(A\$)로 사탕수수와 함께 최저수준임. 채소 등 원예작목의 1/30이하, 면화의 1/3정도밖에 되지 않음.
- 절수 관개 기술이 높다고는 해도 역시 쌀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여 물 비용이 상승하면 증산(增産) 인센티브는 낮아짐. 호주의 쌀은 적극적인 증산이나 일정한 생산목표가 있는 품목이 아니므로 남는 물로 다른 작목이 재배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실정임.

○ 물이 귀한 호주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수량(水量)으로 수량(收量) 얻고 싶어 함. 2004년에는 1ha당 12.1만 톤의 물 사용으로 단위수확량이 6.6톤/ha²⁰⁾이었기 때문에 1톤의 쌀에 약1,800톤의 관개용수를 사용한 것임.

○ 쌀 생산은 환경악탈형이지 지속가능한 것은 아님. 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 기후조건과 더불어 강수량 500mm이하의 사막 지대에서는 염류(鹽類)집적이 과관개(過灌漑) 등의 우려가 있음. 호주에서는 연작이 금지되어 있음.²¹⁾

□ 호주의 물과 환경문제

○ 달링강(Darling River)은 호주 최대의 유역으로 106만km², 호주 국토의 14%임. 유역 인구는 전국의 10% 정도이지만, 농기는 전국 약 40%, 관개 농지는 2/3이 존재함. 농업생산도 약 40%이며 특히 쌀과 과수(오렌지)는 거의 전량이, 밀의 50%는 강 유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 호주의 저수량은 838억 톤으로 그 중 달링강(Darling River) 유역전체에서는 226억 톤임. 2012년 1월의 저수량은 184억 톤으로 저수율은 82%로 10년 이내에서 높은 수준임.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473mm으로, 수량(水量)으로 보면 5,080억 톤이지만, 잠재 증발량은 2조700억 톤으로 추계되어 강수량을 훨씬 상회하는 건조지대임. 유출량(연평균)은 238.5억 톤으로 연간 물 사용량은 129억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률은 전유량(全流量)의 54%에 해당됨.

20) 호주농산물통계, 2011.

21) 3년에 1모작.

-
- 1995년의 각료협의회에 의한 CAP하구(말레이강 하구)에서 자연 상태로 바다에 쏟는 수량(水量)은 149억 톤이라고 추계되는데 유역에서의 관개용수 등의 취수는 20세기 이래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²²⁾
 - 1994년에는 107.8억 톤에 달하였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류영역의 유량저하로 습지대나 어종자원의 감소, 염해나 해조류의 이상발생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음.
 - 취수량을 제한하여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6월, 달링강(Darling River)강 유역각료협의회에 의해 “CAP”이 도입되었음. CAP은 1993-1994년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취수량의 상한을 마련하는 것임.
 - 국가수헌장(水憲章)(National Water Initiative)이 2004년 6월에 책정되었음. 목표는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물에 관계되는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수리권시장 확대’, ‘과잉한 수리권 할당을 해소’ 임.
 - 2007년 1월에는 하워드 수상(당시)에 의해 물 확보 국가계획(National Plan for Water Security)이 책정되어 100억 호주달러의 예산으로 관개 설비 투자, 관개 기술 개선, 환경유량 확보 등이 명문화되었음.
 - 또한 달링강(Darling River)강 유역의 물 과잉배분 문제의 대처, 물 관리 재편성, 지속가능한 사용 상한의 설정,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정비 등의 항목이 있음.
 - 물 관리는 원래 주(州)정부의 소관이었음. 유역이 4개 주에 걸치는 유역에 대해서도 제휴는 하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수리권(水利權) 부여도 주정부 소관이었음. 국가수헌장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보다 적절한 물 관리를 위하여 2007년 및 2008년에 연방수법(連邦水法)이 개정되어, 달링강(Darling River)강 유역청(MDBA)이 발족하였음.
 - MDBA는 유역계획을 책정하는 곳이며 그것에 근거하여 「실시 계획」 책정 및 실시는 각 주정부가 함.
 - 2011년 11월에 유역청(流域廳)은 유역계획 초안을 공표하여 공청회(public comment)에 의견을 듣고 있음. 각지에서 효율적인 물 시장 및 자유로운 거래, 환경보호와

22) 1988년부터 94년 동안 연평균 7.9%.

생태계의 확보²³⁾, 농업 등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 정비²⁴⁾는 계속한다는 내용을 설명회와 공청회를 등을 통해 알리고 있음. 2019년까지 농업용수의 사용량 삭감으로서 27억5,000톤을 제안하고 있음.

- 유역의 지표수 사용을 108억7,300만 톤으로 제한(장기평균, 연간)하는 것을 의미함.

※ 자료 : 農林水産政策研究所「世界の主要国・地域の農業、貿易を巡る事情、政策等に関する研究」(2012.10.09)

23) 특히 가뭄 시 대응.

24) 100억 호주달러 투자.

FAO, 2010~2012년 전 세계 인구의 12.5% 만성적인 영양실조

□ FAO, 2012년 식량안보('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2')보고

- FAO가 발간한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2』에서는 2010~2012년 기준으로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²⁵⁾는 8억 7천만 명이며 전 세계 인구의 12.5%에 해당한다고 분석함. 이들 중 8억 5천만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임.
- 1990년대에 비하여 2010~2012년 영양결핍 인구는 10억 명(18.6%)에서 8억 6,800만 명(12.5%)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2007~2009년 이후의 영양결핍 인구 감소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 선진국들의 영양결핍 인구는 2010~12년 기준 1,600만 명 수준이며 선진국 인구의 1.4%에 불과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영양결핍 인구는 8억 5,200만 명으로 개발도상국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음.
 - 2010~12년이 2007~09년 기간에 비하여 영양결핍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약 백만 명 가량의 영양결핍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경제 위기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영양결핍 인구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아프리카의 영양결핍 인구는 1990~92년 1억 7500만 명에서 2010~12년 2억 390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아시아 지역²⁶⁾의 영양결핍 인구가 1990~92년 800만 명(6.6%)에서 2010~12년 2,100백만 명(10.1%)로 증가한 지역임.
 - 아프리카 지역은 2010-12년 기준으로 북아프리카 지역²⁷⁾은 영양결핍 인구가

25) 영양실조(영양결핍)를 겪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kcal)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연중 평균적으로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 못하는 것을 의미함.

26) 서아시아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키프로스, 조지아(그루지야), 이라크, 이스라엘, 요단, 쿠웨이트, 레바논, 터키, 예멘 등의 국가이며 아라비아 반도 지역의 국가들임. 지역 구분은 UN이 하였음.

27)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국가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수단, 튀니지 등임.

400만 명으로 해당 지역 인구 중 영양결핍 인구가 2.7% 수준으로 매우 낮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²⁸⁾의 영양결핍 인구는 2억 3400만 명으로 인구의 26.8%를 차지함.

표 1 개발도상국의 영양결핍 실태 변화

단위: 백만 명, %

구분	1990-92	1999-2001	2004-06	2007-09	2010-12*
세계	1,000	919	898	867	868
	18.6%	15.0%	13.8%	12.9%	12.5%
선진국	20	18	13	15	16
	1.9%	1.6%	1.2%	1.3%	1.4%
개발도상국	980	901	885	852	852
	23.2%	18.3%	16.8%	15.5%	14.9%
아프리카	175	205	210	220	239
	27.3%	25.3%	23.1%	22.6%	22.9%
아시아	739	634	620	581	563
	23.7%	17.7%	16.3%	14.8%	13.9%
중남미	65	60	54	50	49
	14.6%	11.6%	9.7%	8.7%	8.3%
오세아니아	1	1	1	1	1
	13.6%	15.5%	13.7%	11.9%	12.1%

주 : 2010~2012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 FAO, 2012.

□ 소득의 증가, 식품소비의 변화를 가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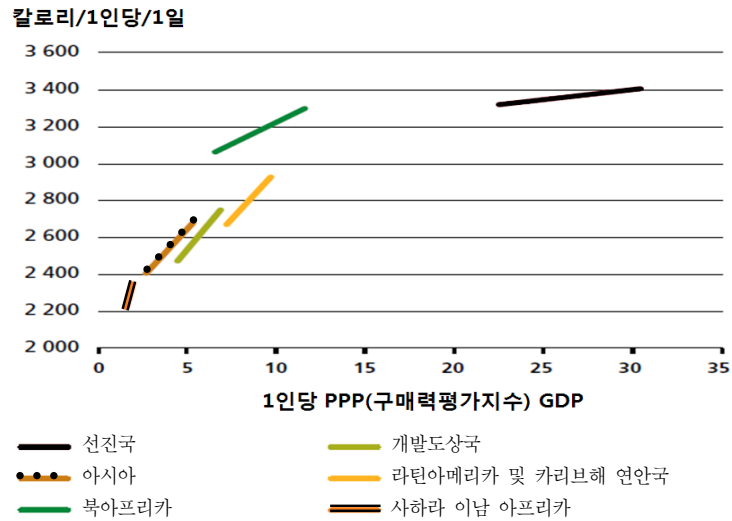
○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씩 성장하였음. 또한 동기간 동안 세계 1인당 1일 영양공급량도 210kcal(8%) 증가하였음.

- 개발도상국의 영양공급량 증가율은 275kcal(1인당, 1일)로 선진국의 86kcal 보다 높았음. 개도국 지역에서는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이 1인당 1일 영양공급량이 260~270kcal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사하라 이남 지역은 130kcal 수준에 불과하였음. 사하라 이남 지역은 경제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임. 추가적인 소득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영양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2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국가는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의 국가임.

그림 1 소득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 수요 증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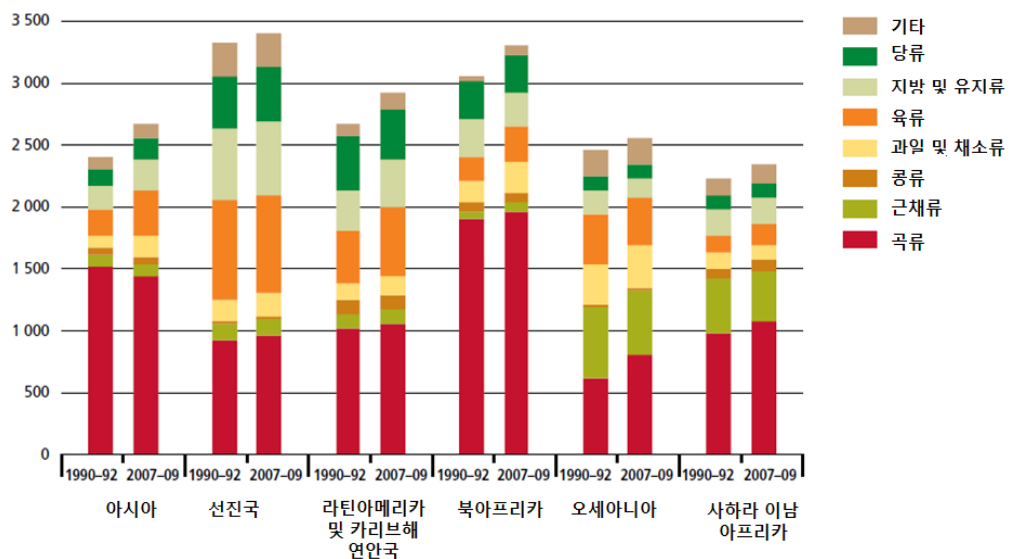


자료 : FAO, 2012.

○ 소득증가는 영양공급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소비 패턴도 변화시켰음.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곡물과 서류 소비량이 줄어든 반면 과일류, 채

그림 2 지역별 소득증대에 따른 영양공급량 및 공급원의 변화

총영양공급량당 비율(kcal)



자료 : FAO, 2012.

소류, 축산물, 어류 소비량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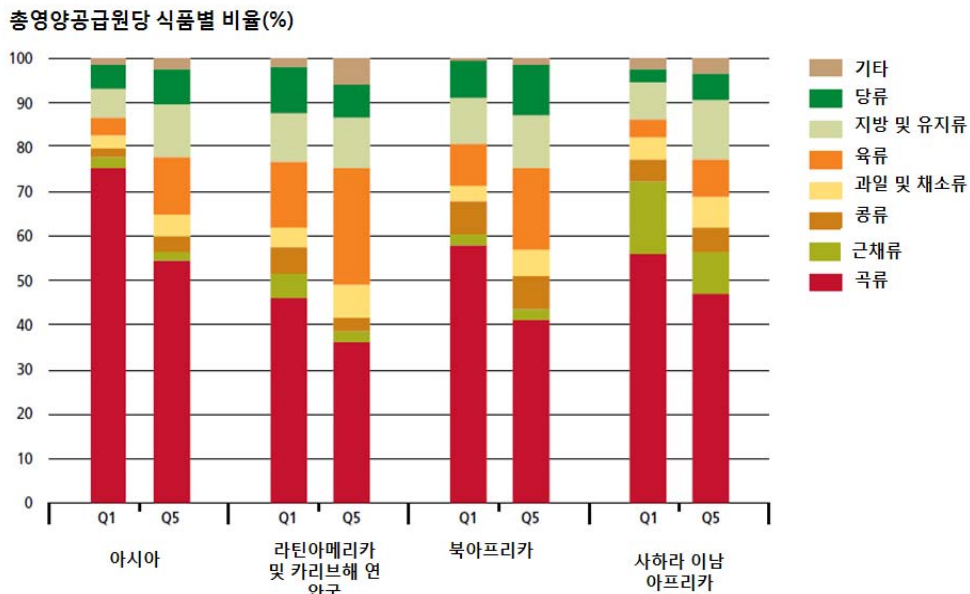
- 아시아에서는 곡물과 서류의 소비량이 줄고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의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곡물과 서류의 소비가 증가하였음.

○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득증대에 따른 영양공급원 비율의 변화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각 지역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분류하여 영양공급원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이 높은 그룹이 소득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곡물과 서류가 영양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축산물과 과일, 채소류가 영양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경제성장을 통하여 영양결핍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영양결핍 인구가 경제성장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그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전제되어야함.

- 영양결핍 인구는 식품 소비량을 증대시키고 소비하는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추가적인 소득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건강과 위생 교육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야 함. 특히 가정의 소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의 교육

그림 3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공급원 비율의 차이



주 : Q1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이고 Q5는 해당 지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임.
자료 : FAO, 2012.

참여는 이러한 소비 패턴을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함.

- 정부의 영양결핍 인구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자원 지원도 필요함. 정부의 지원은 식량안보 망 구축, 건강, 교육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과 같이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에도 필요함.

○ 2007년까지 경제성장은 영양결핍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지난 10년간 개도국들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만큼 영양결핍 인구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음. 따라서 경제성장만으로는 영양결핍 인구를 대폭 감소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식량안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함.

○ 저소득층과 저소득국가에서 농업의 성장은 기아와 영양실조를 감소시키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함. 왜냐하면 저소득층과 저소득국가에서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농업성장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됨.

-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농형태이며 이들의 성장은 영양결핍 인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며 기타 재화와 서비스에 소득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는 농업-영양-건강으로 연결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국민들이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함.

- 특히 아이들의 영양문제와 교육을 향상시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야 함.

○ 경제성장만을 통하여 저소득 국가의 저소득층이 영양결핍을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영양결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는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함.

※ 자료: UN식량농업기구 FAO(<http://www.fao.org> 2012.10.09)

EU, 일본산 식품규제 대폭 완화

□ 방사성 검사 분석 보고서가 필요한 품목 식감

- 식품연쇄·동물위생상설위원회(SCoFCAH)²⁹⁾는 19일, 가맹국의 투표로 9월부터 재검토를 계속하고 있었던 일본 수입 식품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식채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관보에 게재 후 3일후에 발효될 예정임. 단, 현행의 유럽집행위원회 실시 규칙 284/2012(PDF)이 10월말부터 실효(失効)되기 때문에 11월 1일에 발효되어, 201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소비자보호총국(SANCO)에 의하면, 유럽집행위원회 채택은 10월 26일, 관보게재일은 27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함.
- 금번 회의에서 대상 12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첨부할 의무화 한 방사선검사 분석 보고서를 후쿠시마현(福島縣) 이외의 11개 도현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을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후쿠시마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알코올 음료이외의 모든 품목의 방사선검사 분석 보고서 첨부이 필요하지만, 군마(群馬), 이바라기(茨城), 도치기(栃木), 미야기(宮城),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이와테(岩手) 등 8개현 및 도쿄도(東京都)에 대해서는 차, 버섯류, 어패류, 쌀, 대두, 팥, 일부 나물과 채소, 과일로 대상품목을 한정함.
 - 야마나시현(山梨縣)은 버섯류, 시즈오카현(静岡県)은 차, 버섯류에 한하여 방사선검사 분석 보고서가 필요함.
- SCoFCAH는 원전사고후의 제2수확기 4만 건 이상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기초로 방사선검사 분석 보고서의 첨부이 필요한 대상품목을 한정하는 것을 결정하였음.
- 현행 규칙에서는 일본 술, 소주, 위스키만이 수입 규제의 대상외가 되고 있지만, 기타 알코올음료도 포함하여 모든 주류, 후쿠시마현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의 대상 밖으로 함.

29) The Standing Committee on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

-
- 그 이유로는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연마(研磨) 및 발효 공정에 의해 방사선이 대폭으로 줄어들었으며, 일본 당국, 수입국 당국의 수속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들었음.

□ 임의검사 수출률 일률 5%로 저감

- 현행 규칙에서는 대상 12개 도현에서 산출된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EU에서의 통관 시 화물의 적어도 5%, 또는 대상 12개 도현에서 발송된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적어도 10%가 임의검사의 대상이 되었음.
 - 이것은 하한을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가맹국에 따라서는 이들 이상의 비율로 임의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였음.
- 최근 1년 동안 통관 시 임의검사에서 문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통관 시 임의검사의 추출률을 낮추는 것에 합의하였고, 모든 가맹국·모든 품목에서 일률적으로 5%로 규정하였음.
- 11월 1일 이후부터 수출 증명서는 신(新)규칙의 부속서 1이 유효함. 단, 신규칙의 발효일 이전에 일본을 출발한 식품 또는 수출 증명서의 발행일이 11월 1일 전의 것으로, 12월 1일 전에 일본을 출발한 식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칙(유럽위원회실시 규칙284/2012)의 수출 증명서도 유효함.
- 향후 재검토에 대하여 원전사고 후 제2수확기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쌀, 대두 등에 대해서는 2013년 3월에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가맹국은 3개월마다 모든 분석 결과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긴급경고시스템(RASFF)³⁰⁾을 통하여 유럽집행위원회에 보고 해야 함.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0.23)

30)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일본, 비료가격 2기 연속 가격 인하

□ 일본 엔고 및 원료가격 하락으로 비료가격 2기 연속 인하

- JA전농은 30일, 11월부터 2013년 5월 봄 비료의 주요품목가격을 발표하였음. 복합 비료의 기준상표인 고도화성(高度化成)은 현(顯) 도선 기준 공급 가격을 10월 까지의 가을 비료대비 0.7% 인하되어 2기 연속 가격이 인하 됨.
 - 기타 품목도 대부분 엔고와 함께 비료 원료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을 반영하였음.
- 고도화성(高度化成)은 6~10월의 가을 비료가격도 전기 대비 0.3% 인하됨. 2기 연속의 인하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0% 가격 인하되었음.
- 복합 비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등 제조 경비의 상승분을 흡수하도록 업체에 요구하였고, 주원료의 가격하락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하였음. 단, 유기화성(有機化成)은 기준 상표 가격은 변함없지만 유채의 씨 찌꺼기 등 유기원료의 가격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부 상표는 가격을 인상하였음.
 - 수입 요소는 가을 비료와 비교하여 2.4% 내렸음. 인도의 매입 중지과 중국이 여름철에 수출 관세를 내린 것 등으로 국제시황이 여름에 하락하였고 엔고도 반영된 것임. 국산요소는 업체로부터 가격 인상 요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과인산석회(過磷酸石灰)는 1.1% 내렸음. 원료인 인광석 가격이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것임. 염화칼리는 엔고나 해상운임의 하락 등으로 2.5% 내렸음.
- JA전농은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비료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료 원료가격은 앞으로도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시비(施肥) 비용 삭감을 위하여 토양 진단에 맞춘 저성분비료(低成分肥料)나 노동력 절약형 시비(省力型施肥)의 보급 및 물류합리화 등의 대책을 강구함.

※ 자료 : 日本農業新聞(2012.10.20)

제50회 호주-일본 경제합동위원회

■ 참가자 300명 초과

- 호주와 일본은 1957년 7월에 호-일 통상협정을 체결하였음. 1950년대는 호주 각지에서 풍부한 자원매장량이 확인되고 1960년대에 철광석 및 석탄 등 광물자원의 대일(對日)수출 금지가 해제 되면서 양국 간 무역 거래가 활발해짐.
 - 1962년 8월, 호주에 호일(豪日)경제위원회가, 1963년 2월에는 일본에 일호(日豪)경제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제1회 일호경제합동위원회는 1963년 도쿄에서 개최 되었으며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옴.

■ 양국 20년, 10억 호주달러의 사회기반시설 정비

- 금번 합동위원회의 주제는 ‘변화되는 아시아의 인구구상’과 ‘혁신적인 미래 발전’이었음.
 - 호주의 NSW주(州)는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 확보 면에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환경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향후 20년을 내다본 사회기반시설 정비 계획을 책정하여 10억 호주달러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역내국과의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임.
- 연방정부가 발표 예정 중인 백서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호주」의 편집 책임자인 호주의 전(前)재무차관은 ‘직면하는 글로벌과 국가적인 과제-번영과 지속가능한 장래의 구축’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함.
 - 아시아는 성장의 속도가 빠르며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모두 관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 호주는 아시아와 효과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강연 후 토론 중 호주의 전(前)재무차관은 에너지나 식량안전보장 등 호주와 중국 양국 간에서 상호보완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EPA에 대해서는 다국 간 협정이 바람직하며 두 국가 간에 잘못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차후에 지속적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협정이 되어야 함.

- 일본-호주 EPA에 대하여 주일 호주 대사는 지적재산 등 고도의 내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졸속한 대응이 아닌 일본과 호주 쌍방에 유익하여야한다고 지적함. 또한 호주주재 일본 대사는 널리 많은 사람에게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도 요구된다고 언급함.

□ 일본-호주 쌍방의 강점을 살린 시장 개발이 효과적

- 매킨지 재팬의 파트너는 기초강연에서 아시아의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일본-호주 간 아시아에 있어서의 협력 사업의 아이디어로서 (1) 경제기반구축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PPP(관민 파트너십)³¹⁾로 실시, (2) 물량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질을 유지한 식품 공급, (3)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 통신 및 농업 개혁, (4) 대학간 상호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함.
- 패널 토론에서는 인구 증가에 의한 도시화의 가속화, 고령화에게 대응한 마을 만들기, 인구구성의 변화가 먹거리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일본의 기술개발과 같은 쌍방의 강점을 살린 시장개발이 효과적이라는 것 등이 소개되었음.
- 동태적 인구 변화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출생률 감소·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일대 개혁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일호협력과 국제금융기관의 펀드나 보증 제도의 활용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함.

□ 젊은 세대가 참가하는 제3국에 대한 협력 검토

- ‘혁신적인 미래 발전’에서는 이후 몇 십년간에 걸쳐 물 공급, 식량생산 및 에너지 창출이 중대한 공생 과제로서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과 친환경 도시 등이 소개되었음.
- 리오틴토 철광부문의 최고책임자는 혁신적인 조직 운영으로서 사용되는 언어는 전달 수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학교법인 리쓰메이칸(立命館)의 부총장은 미래의 젊은 세대도 참가를 독려하며

31)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일본-호주의 강점을 살려, 향후 50년 제3국 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오주 총리, 오주-일본 EPA 체결에 기대 표명

- 전체 회의에서는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대응 및 향후 전진을 위하여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함.
- 양국이 하는 공동 사업의 확인이 적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에딩턴 회장은 제3국에서의 사회기반시설 협력 이외에 헬스케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사회기반시설 소위원회 위원장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부이사장은 두 국가 간 관계는 보완 관계에서 협동(協動) 관계로 바뀌어 도전하는 시대로 들어갔으며 제3국에 대한 협력이 다음 50년의 주제라고 지적함.
- 일본대사는 일본총리의 친서를 대독하였음. 친서에는 일본-호주 EPA교섭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일본-호주 쌍방이 협력하여야 하며, 동아시아의 지역 포괄적 경제 제후(RCEP)교섭 초기에 협력하고, 환태평양 파트너십(TPP)교섭 참가를 위한 협의에도 호주와 긴밀히 서로 연락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호주총리는 아시아의 세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호주 간 FTA를 체결해야 하며 양국 간 투자가 증가하고, 자원과 농업 무역도 활발하여 FTA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언급함. 식량안전보장으로 연결되고, TPP에 가맹할 준비도 되었다고 언급하며 체결에 장애가 되는 것을 낮추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두 함께 행동할 것을 언급함.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0.18)

자료작성 : 이해은 연구원, 최양규 인턴 연구원

●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국제농업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과제: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일본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 | 정승은

미국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 | 이대섭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과제: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과 교수)

1. 서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국제개발협력 또는 해외 원조는 2차 대전 이후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이후 국제개발협력 레짐(regime)¹⁾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으며 최근 한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하면서 주요 공여국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UN의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²⁾의 천명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학문적으로 다루려는 진지한 노력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본고에서는 역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과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지난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해외 원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절대적 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원조가 수원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해외 원조는 수원국의 개발에 매우 제한적

* (jiyoung.kim@ewha.ac.kr).

1)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을 말한다. 레짐은 인간의 행태나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틀을 제공함.

2) 천년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1)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2)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4)아동 사망률 감소, 5)모성 보건 증진,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의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어떠한 원조 목표와 방법을 도입하여 원조 활동을 해왔으며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을까? 앞으로 국제 원조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저자는 특히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이들 중 많은 국가들은 빈곤과 정치 불안, 저성장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여러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원조를 받고 있는 수원국에 속하며 대다수의 경우 수십 년간 해외 원조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높은 해외 원조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대 아프리카 원조 활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 동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덧붙여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제고는 최근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그림 1>은 1960년부터 2011년까지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전체 공적개발원조³⁾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공적개발원조의 양은 1960년대 이래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초반 정체를 기록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하다가 90년대 들어 급격한 하향 곡선을 보였다. 이후 2000년대 초기 부터 현재까지 ODA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같이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양은 시기별로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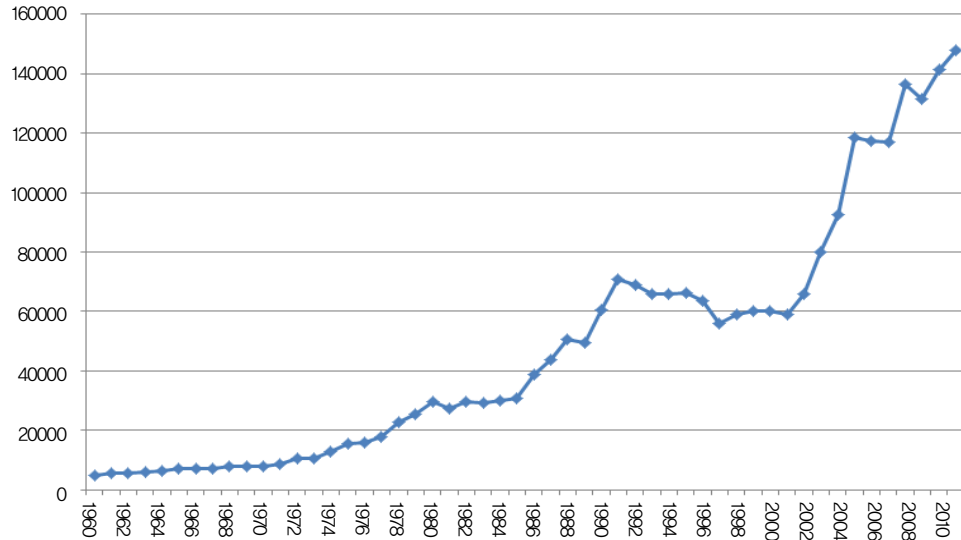
그렇다면 각 시기별로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레짐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국제정치 환경과 발전 이론은 무엇이었을까? <표 1>은 국제개발협력 변천사를 시기별 주요 국제정치 환경과 주요 발전 모델을 틀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⁴⁾

3) OECD DAC은 다음과 같이 ODA를 정의한다. 1)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게 지원되어야 하며, 2)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3)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

4) 시기별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대한 정보는 주로 Riddell(2007)과 Lancaster(2007)에 근간한다.

그림 1 DAC 공여국의 총 공적개발원조, 1960 - 2010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주 : 연간 총 ODA 양은 양자간 ODA와 다자간 ODA를 합산하여 계산됨.
자료 : OECD.Stat.

표 1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시기	1940년대 - 1950년대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현재
국제정치환경	- 탈 식민지화 - 양극체제로의 전환 시작 - UN의 탄생	- 냉전	- 80년대 후반 냉전체제 붕괴 시작	- 냉전종식 - 내전 등 국가 내 분쟁 증가 - 테러리즘
주요 국제개발이론	- 근대화이론 - 케인즈주의	- 국제주의 - 다자주의 (세계은행, ILO, UN)	- 신자유주의 경제개발이론	-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대두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특징	- 유럽 재건을 목표로 한 Marshall Plan -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 미국과 소련의 동맹 강화를 위한 정치적 성격의 원조	- 빈곤 감소 - 'redistribution-with-growth' - 'basic needs approach to development' - 환경, 교육, 젠더 등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 해소 - NGO 역할 강화	- 거시경제의 균형을 강조한 경제 성장에 초점 - 개도국의 여러 사회개발 문제(빈곤 포함)에 대한 관심 약화	- 거시경제 안정에 기반 한 경제성장 (신자유주의) - 빈곤 - 인간 안보(Human Security) - MDGs - 부채 감소 - 원조의 효과성 제고

2.1. 1940년대 - 1950년대

2차 대전 종식 후 1940년대와 1950년대 국제 사회는 탈 식민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였다. 이 시기 국제 정치 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또한 2차 대전 종식 후 국제사회는 UN(United Nations)을 포함, 여러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국제 사회의 질서의 확립과 협력, 평화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개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국제 개발 이론에는 근대화 이론과 케인즈주의(Keynsianism)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 이론은 유럽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간단히 소개하자면 가난한 국가들도 유럽 국가들의 경험과 발전 과정을 따른다면 근대화된 발전된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근대화(modernization)는 ‘유럽화(Europeanization)’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이론에 근간하여 이 시기 많은 개도국들은 앞다투어 서구 유럽의 개발 모델을 도입하여 실행하려 했다. 근대화 이론과 함께 이 시기 케인즈주의도 정책 입안가들에게 경제개발 모델로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지만 신고전주의와는 달리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인정하며, 이에 따라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케인즈주의의 영향으로 이 시기 많은 유럽 국가들은 복지 국가를 지향했으며 이러한 케인지안(Keynsian) 전통은 6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개도국의 빈곤 개선과 여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논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

가난한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오늘날 국제 개발협력 레짐의 기원을 거슬러 보면 1948년 미국의 마셜 플랜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원조, 특히 마셜 플랜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원조는 2차 대전 후 붕괴된 유럽의 경제를 되살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또한 UN이 창설되면서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개념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시기 미국의 마셜 플랜을 제외하고 개발 원조는 매우 미미하였고 실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개발 원조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또한 50년대 이후 냉전이 가시화되면서 양 강대국들은 동맹을 강화하고 상대 진영의 팽창을 제한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원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2. 1960년대 - 1970년대

1950년대 이후 국제 정치 환경은 냉전의 가속화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 진영 간의 대립 체제는 소련과 미국의 정치적 원조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그림 1>에서와 같이 60년대와 70년대 공적개발원조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동 시기 많은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승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영향으로 70년대 초기까지 국제사회는 원조의 역할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원조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반영되었다.

이 시기 국제개발협력 레짐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론적 배경으로는 유럽에서 발전된 국제주의(Humane Internationalism)와 국제개발기구, 특히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UN의 성장에 기반을 둔 다자주의를 들 수 있겠다. 국제주의(Humane Internationalism)는 개도국의 여러 인권 침해 문제와 빈곤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Humane Internationalism 사상은 세계은행의 ‘성장과 함께 재분배(redistribution-with-growth)’ 접근법과 ILO의 ‘개발에 있어 기본적 욕구 실현(basic needs approach to development)’이라는 방향 설정으로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렇듯 당시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성장 뿐 아니라 빈곤층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개발 원조를 지향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빈곤층에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성장 및 빈곤 해소를 강조했다. 이는 오늘날 국제개발협력 사회가 천명하는 MDGs와 ‘pro-poor growth’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협력 레짐에서의 개발 NGO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수원국의 인권 문제를 포함, 여러 사회 개발 문제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발 원조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레짐 형성에 기여했다.

2.3. 1980년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 불황과 원조에 대한 비판적, 회의적 시각 증대로 인해 <그림 1>에서와 같이 80년대 초반 원조는 급격히 감소한다. 1980년대 등장한 가장 주요한 경제개발이론은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에 의하면 자유시장 경쟁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경제개발 모델이며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해야하며 민영화를 단행해야 하고, 여러 수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케인즈주의(Keynsianism)와 달리 신자유주의 경제개발 모델에 의하면 복지분야의 정부 지출을 축소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국의 레이건(Reagan) 정부와 영국의 대처(Thatcher) 정부가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적극적 수용하였고,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 경제개발 모델은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주요 이론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신자유주의 모델은 가장 주요한 발전 모델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포함, 국제정치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개발 모델은 개발협력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개도국의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거시경제의 균형을 강조한 경제 성장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공여국들은 소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조의 조건으로 수원국들에게 앞에서 논의한 여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개발 논리에 입각한 수원국 거시경제의 균형 및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공여국의 원조 정책은 개도국의 빈곤 문제와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공여국의 관심 약화라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2.4. 1990년대 이후

1980년대 후반 냉전 체제는 붕괴되었고 이는 공적개발원조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그림 1 참조>. 냉전 시기동안 정치적 목적의 원조 활동을 벌여왔던 양 강대국이 냉전의 붕괴로 더 이상 대규모 원조 활동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전반기 ‘원조 의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조가 오히려 수원국의 개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세계 평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냉전 이후 내전과 테러리즘이 더욱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리즘은 미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사건 이후 미국은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를 증가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경제 모델이 빈부격차를 가중시키며 환경 문제, 금융 위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개도국들에 대한 국제금융기구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발협력 사회는 UN과 World Bank를 필두로 개발과 안보, 인권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주요 개념인 인간 안보, 인간 개발 등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90년대 이후 가장 특기할 만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동향은 80년대에 사라졌던 빈곤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으며 모든 공여국들이 개도국의 인권과 사회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MDGs를 위해 원조를 증액하거나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점

이다. 특히 2000년 UN 정상 회의에서 참가국 모두는 2015년까지 1일 수입이 1달러 미만인 빈곤층 비율을 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또한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원국의 빚 누적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오늘날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수원국의 빚 탕감과 축소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DAC의 원조 효과성 관련 고위급 회담에서 파리 선언⁵⁾이 채택되었고 이후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해 왔으며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원조 효과성 관련 제4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그 동안의 원조 효과성에 대한 여러 제안들을 정리하고 원조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원조 효과성을 넘은 개발 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194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개발협력의 레짐 변화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주요한 동향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NGO의 역할 증대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70년대 이후 개발 NGO는 민간 차원의 지원 뿐 아니라 ODA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에서도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도적 지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90년대 이후 자연 재해, 전쟁 등의 피해자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전체적으로 원조의 지원 방식은 단기적 프로젝트형에서 장기적 프로그램 원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프로젝트형 원조가 지속성 및 효과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에 기인한 것이다.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레짐 변천의 주체가 주로 공여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940년대 이후로 국제개발협력 레짐을 이끌어 온 주요 행위자는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원국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였다. 사실 2011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고 수원국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취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 회의에서 수원국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였으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발협력 국제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산회의에서도 공여국들은 미리 준비한 여러 정책 결정들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공여국 주도의 접근방법(donor-driven-approach)은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5) 파리 선언이 채택한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2)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3)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4)결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활용 및 의사결정(Managing for Results) 5)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화 책임성 강화(Mutual accountability).

3. 대(對)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동향

<표 2>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 지역별 1인당 GDP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다. <표 2>에 기초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2001-2005년 시기의 1인당 GDP가 1975-1980년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들의 2000년대 초기의 생활수준이 1970년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2000년대 1인당 GDP가 1970년대와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는 지구상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유일하며 이러한 아프리카 경제의 저성장은 다른 지역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두드러진다. 또한 경제 성장률 지표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의 만성적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중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1990년대 중기 이후가 지나서야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인간 개발 지수 하위국가들(low human development)’로 분류되며 이들 국가들은 빈곤 문제를 포함,

표 2 지역별 1인당 GDP와 경제 성장률, 1975-2005

지역	1975-80	1981-85	1986-90	1991-95	1996-2000	2001-05
1인당 GDP (미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928	1,844	1,782	1,648	1,668	1,768
동아시아, 태평양	905	1,227	1,686	2,407	3,399	4,595
라틴아메리카, 카리비안	6,020	6,295	6,315	6,450	6,978	7,205
중동, 북아메리카	4,179	4,180	4,055	4,326	4,651	5,197
남아시아	1,132	1,268	1,505	1,745	2,110	2,530
저소득, 중소득 국가	2,278	2,560	2,881	3,045	3,513	4,219
성장률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06	-1.60	-0.21	-1.64	0.79	1.79
동아시아, 태평양	5.26	6.12	5.76	9.10	5.63	7.06
라틴아메리카, 카리비안	3.31	-0.95	-0.43	1.61	1.53	1.21
중동, 북아메리카	-0.20	2.41	-1.20	1.18	1.91	2.78
남아시아	1.03	3.14	3.89	3.01	3.59	4.65
저소득, 중소득 국가	2.79	1.99	1.93	1.56	3.23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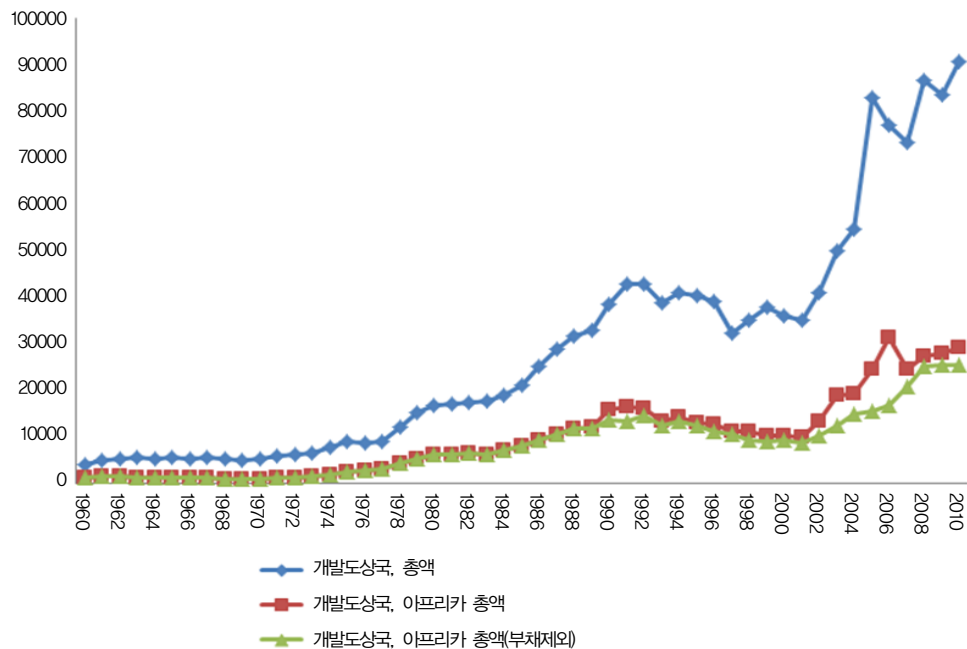
자료 : Jorge Saba Arbache and John Page (2008, 91쪽).

교육기회 제한, 질병, 환경오염, 안보문제 등 여러 개발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아프리카의 여러 개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원조를 어떠한 형식으로 지원해 왔는가? 시기별 대 아프리카 원조는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최근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동향은 무엇인가?

<그림 2>는 아프리카에 대한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 아프리카 원조는 7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1980년대 초반 정체를 기록했으며 80년대 중반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히 하락, 2000년대 중기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이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은 위 <그림 1>의 DAC 공여국의 개도국에 대한 시기별 원조 패턴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양적 변화를 거듭해왔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전체적으로 2000년대 초기부터 ODA가 증가한 데 비해 대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중기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 DAC 공여국의 대 아프리카 ODA, 196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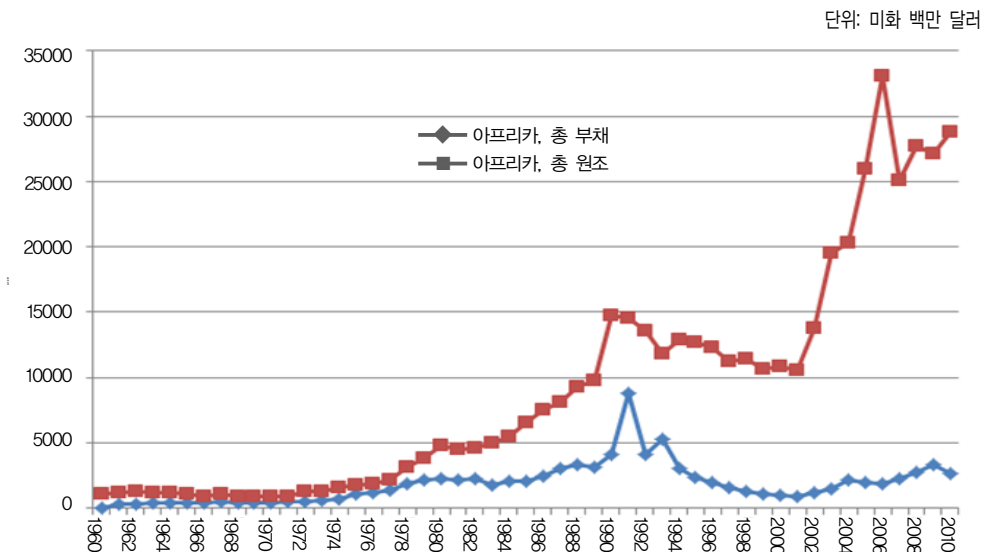
단위: 미화 백만 달러, 현재가



주 : DAC공여국 전체의 ODA 순지출(Net Disbursement)을 기준으로 함.
자료 : OECD.Stat.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에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였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들의 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식민 통치 국가들은 이전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 경제적 착취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 또는 문화적, 역사적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을 실행했다. 또한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70년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국제주의(Humane Internationalism)의 영향과 UN과 World Bank 등 국제개발기구의 역할 강화에 기인한 인도주의적 목적도 대 아프리카 개발 원조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공여국들이 프로그램 원조를 강화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개도국들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를 통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형태로 많은 원조를 지원받기 시작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대 아프리카 유상원조(借款)는 7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90년대 이후 양자 공여기관들의 무상원조가 늘어나면서 무상과 유상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아프리카 수원국들은 주로 다자 공여기관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유상원조를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아프리카 수원국들이 이러한 공적 차관을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문제가 발생

그림 3 DAC 공여국들의 대 아프리카 양여금과 차관, 1960-2010



자료 : OECD, Stat.

하게 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공적 차관은 아프리카의 많은 가난한 수원국들에게 이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국 90년대 이후 여러 아프리카 수원국들은 소위 ‘부채과잉의 덫(debt trap)’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시기 원조의 급격한 감소는 이들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심각한 빈곤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고조, 신자유주의 경제 개발 모델에 대한 회의적 시각 대두, 9/11 이후 빈곤과 안보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의 이유로 2000년대 이후 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증가하게 된다. 1994-95 시기 DAC 양자 원조 전체 29%에 불과했던 대 아프리카 DAC 양자 원조가 2004-05에는 전체의 1/3로 급증했다⁶⁾. 또한 기술한 바대로 80년대부터 대 아프리카 원조 형태 중 무상원조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 무상원조의 비율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차관 방식의 ODA가 아프리카 여러 수원국들에게 빚과 이자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국제개발협력 사회의 공통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DAC 양자 공여기관은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원조를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 중반 이후 대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최근의 대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의 확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먼저 최근 대 아프리카 ODA 증가는 상당 부분 채무 변제(debt relief)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실제 채무 변제액을 ODA에서 제외한다면 최근의 대 아프리카에 대한 ODA 증가액은 훨씬 줄어든다. 채무 변제액 외에도 1990년대 이후 더욱 급증한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행정 비용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 아프리카 수원국에게 지원된 ODA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 외에도 90년대 이후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동향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양자 공여기관의 비중 증가를 들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원조, 특히 IMF와 World Bank를 통한 여러 프로그램식 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주요 공여국들은 국제기구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수원국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양자주의 원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현재 양자 공여기관에 의한 대 아프리카 원조는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1991-2000 기간의 60%보다 현저히 높아진 수치다⁷⁾. 또한 전통적 공여국 외에도 새로운 공여국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의하

6) Punam Chuhan-Pole and Brendan Fitzpatrick, 2008, 200쪽.

7) Punam Chuhan-Pole and Brendan Fitzpatrick, 2008, 201-202쪽.

면 2004-05 시기에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한 해 1.0~1.5 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1989~1992년의 310 백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액수다⁸⁾. 오늘날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공여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은 인프라 건설 중점, 수원국 내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원조 실행 절차의 간소화 등 기존의 전통 공여국과 차별화되는 소위 중국식 원조를 펼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4. 대(對)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아프리카 여러 개도국들에 대한 개발협력을 지속해 왔으나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원조는 아프리카 수원국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시키는데 실패했다. 본 장에서는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을 해외 원조 자체가 가지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 수원국의 문제, 그리고 공여국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은 비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전체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데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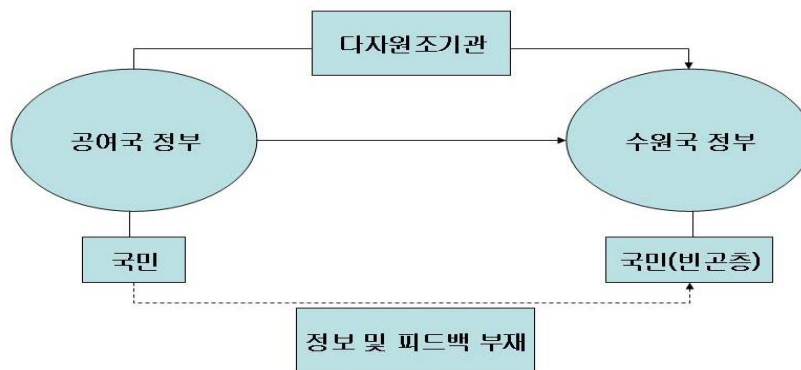
4.1. 국제개발협력 시스템의 문제

먼저 아래 <그림 4>는 국제개발협력 시스템을 간략히 도식화 해 본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특히 ODA는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 정부에게 원조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공여국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직접 수원국 정부에게 전달하거나(양자 원조), 다자 원조기관을 통해 수원국 정부에 지원한다(다자 원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ODA 과정에서 불투명한 원조 집행, 부패, 비효율적 원조 사업 지속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Jakob Svensson(2008)의 information feedback loophole의 개념을 도입하여 ODA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공여자인 공여국 정부의 국민과 수원국의 국민, 특히 빈곤층 간의 원조 관련 정보 및 피드백 부재가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적 성과를 방해하는 시스템 차원의 주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공여국의 국민은 대부분의 경우 자국 정부의 ODA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며 수원국의 대다수 국민들 또한 자국 정부가 받은

8) Punam Chuhan-Pole and Brendan Fitzpatrick, 2008, 202~203쪽.

ODA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공여자와 수원자 간의 정보 교환 루트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공여기관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원국 국민들의 평가와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공여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원조 사업들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특히 아프리카 많은 개도국들의 경우 안정적 정치 체제의 부재로 말미암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다수의 아프리카 정부들은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 계층(특정 인종, 지역민 등)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ODA는 공여국 국민들이 목표한 바와 같이 수원국의 빈곤층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어지는 수원국 차원의 문제 논의 시 아프리카 수원국 내의 정치 문제에 대해 좀 더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4 국제개발협력 ODA 시스템



4.2. 수원국 차원의 문제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는 수원국 차원의 문제점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다양한 연구들은 정치 불안정(내전 등), 지리적 문제(내륙 국가 문제 등), 취약한 인프라 및 인적 역량, 비효율적 정부, 정치적 리더십 부재 등을 지적한다. 특히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서는 아프리카 국내의 정치적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정치는 국가와 국민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강력한 정치 리더십의 부재,

취약한 국가 역량, 신온정주의(neopaternalism), 부패, 정부의 집중화, 취약한 시민사회와 현지 비즈니스, 할거주의(sectionalism), 후견주의(Clientilism) 등이 아프리카 정치의 특징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 근대 베버적 국가(Weberian State)가 부재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부조리한 정치사회 구조는 해외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과 빈곤층 삶의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으며 실제로 여러 공여 기관들도 수원국의 정치 문제를 가장 큰 원조 실패의 요인으로 지적해 왔다.⁹⁾

4.3. 공여국 사원의 문제

2005년 채택된 파리 선언 중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활용 및 의사결정(Managing for Results)은 특히 공여국의 원조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수 십 년간 여러 공여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해 왔고, 그 결과 아프리카를 포함, 많은 수원국들은 다수의 공여기관들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다. 문제는 특정 수원국의 다양한 공여 기관들 간에 서로의 원조 활동에 대한 협의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여러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수원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다양한 공여 기관들이 각기 다른 형식의 서류 절차 및 원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부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또한 유능한 행정 인력이 매우 부족한 아프리카 개도국들의 경우 이들이 모두 공여기관과 관련한 서류 처리에 차출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더욱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각기 다른 공여 기관들에 의한 유사한 원조 활동의 중복 문제와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파리선언을 통해 공여국들 간 원조 활동의 조화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 정책과 일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얼라인먼트(Alignment) 원칙을 파리 선언에 포함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공여국이 써 온 역사라 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피드백과 참여 부재는 국제개발협력의 비효율성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함께 국제 원조사회는 수원국의 개발 정책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원조

9) Nicolas van de Walle (2001)에 의하면 이러한 아프리카 국내 정치의 상황에서 해외 원조는 필요한 정책 개혁을 늦추고 취약한 정권의 권력을 유지시킴으로서 neopatrimonialism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활동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원조, 특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반 한 경제발전 모델은 아프리카 사회 전반은 물론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수원국 국내의 정치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일방적으로 시장경제 개혁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원조의 실패와 개혁의 실패를 야기했다¹⁰⁾. 시장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아프리카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체제로의 개혁은 당연히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표 2>에서와 같이 시장경제 개혁 시기 이후에도 아프리카 경제는 오랜 시간동안 침체를 거듭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여 기관의 원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공여 기관들은 많은 경우 수원국 현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분석 없이 공여국들이 수원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조 활동을 해 왔으며 원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여국들은 원조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평가에 그리 많은 중점을 두지 않은 채 원조 활동을 해왔고 이는 비효율적 원조 사업의 지속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5년 파리 선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그 간의 공여국 중심의 원조 활동을 수원국 중심으로, 수원국의 참여를 통해 원조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2012년 현재까지 새로운 원조 방식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전의 공여국 주도의 원조 방식으로는 수원국의 지속적 개발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국제개발협력 사회가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레짐 하에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ODA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들이 한국 ODA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5. 결론

200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선언하였고 실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원조는 증가 추세다.¹¹⁾ 그

10) Nicolas van de Walle, 2001.

러나 여전히 한국 전체 ODA의 50% 이상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원되며 아프리카에는 전체의 12% 정도만이 지원된다. 2010년 현재 한국의 주요 아프리카 수원국은 탄자니아, 앙골라, 세네갈, 에티오피아, 르완다, 가나, 콩고, 튀니지, 이집트, 모로코 등이다.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아프리카의 주요 수원국들 중에는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는 한국의 아프리카 무역 파트너 20위권에 속한 국가들이고 앙골라는 6위의 주요 수출국이며 콩고는 5위의 주요 수입국이다. 이는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매우 중요한 목표로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집트,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로코, 그리고 가나는 모두 미국과 밀접한 전략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서 한국의 ODA 정책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매우 긴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가 매우 변동적으로 실행되어 온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튀니지의 경우 2000년에 1,200만 달러가 제공되었으나 이듬해 200만 달러로 급격히 축소했다.

표 3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양자 원조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단위: 미화 백만 달러

년도	유상원조(차관)		무상원조		아프리카에 대한 ODA
	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	전체	
2000	19.6 (22.6)	84.9	3.9 (9.0)	43.0	-
2001	2.9 (2.1)	132.8	3.3 (5.3)	56.0	264.6
2002	0.2 (0.1)	162.6	7.1 (11.4)	61.6	278.7
2003	12.4 (10.0)	119.5	6.9 (4.6)	129.0	365.9
2004	16.5 (10.6)	150.0	11.8 (5.6)	196.3	423.3
2005	23.8 (14.8)	155.3	15.7 (7.5)	208.7	752.3
2006	25.4 (17.4)	143.5	23.4 (12.1)	193.1	455.2
2007	14.9 (12.3)	113.9	42.3 (15.7)	270.0	699.0
2008	32.5 (15.5)	206.9	54.5 (19.8)	274.9	803.0
2009	31.4 (11.3)	272.9	53.3 (19.1)	275.9	815.5
2010	39.1 (7.2)	358.3	67.6 (14.9)	454.1	1162.7

주1) :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연도별 금액 중 아프리카에 지급된 액수임.

주2) : 유상 원조의 경우 한국화를 미국 달러로 전환하여 저자가 계산함. 환율은 해당 년도의 환율을 적용함.

자료 : 유상원조 데이터는 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통계 2011에 기반함; 무상원조는 KOICA 데이터베이스에 기반 함.

11) 본 장의 내용은 저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Kelechi A. Kalu and Jiyoung Kim (2012)의 연구 결과에 기인한다.

<표 3>은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양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추이를 보여준다. <표 3>에서와 같이 대 아프리카 한국의 무상 원조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유상 원조가 아프리카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ODA 중 상당 부분은 구속성 원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비단 아프리카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전반적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다.¹²⁾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는 전통적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공여국 중심의 원조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종종 강조하는 ‘수원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과는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중반 들어 아프리카의 변화¹³⁾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진정한 장기적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12) OECD DAC의 한국에 대한 특별 보고서(2008)에 의하면 한국 ODA의 98%가 구속성 이거나 부분적 구속성 원조의 형태로 지원된다.

13)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McKinsey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아프리카 전체의 GDP는 \$1.6 조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와 브라질의 GDP를 더한 액수이다. 또한 2008년 현재 아프리카의 총지출은 \$860 억을 기록했다. 이렇듯 McKinsey 보고서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들이 2000년 중반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및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Report, Lions on the move: The progress and potential of African economies.
http://www.mckinsey.com/Insights/MGI/Research/Productivity_Competitiveness_and_Growth/Lions_on_the_move.

참고문헌

- Arbache, Jorge Saba and J. Page. 2008. "Patterns of Long-Term Growth in Sub-Saharan Africa" in Delfin S. Go and John Page eds. Africa At a Turning Point? Growth, Aid, and External Shocks. The World Bank.
- Chuhan-Pole, Punam and B. Fitzpatrick. 2008. "More and Better Aid: How Are Donors Doing?" in Delfin S. Go and John Page eds. Africa At a Turning Point? Growth, Aid, and External Shocks. The World Bank.
- Kalu. Kelechi A. and J. Kim. 2012. "Post-Busan Challenges for South Korea's Africa Relations" Korea Observer Vol.43, No.2.
- Lancaster, Carol. 2007.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ddell, Roger C. 2007.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vensson, Jakob. 2008. "Absorption Capacity and Disbursement Constraints" in W. Eaterly ed. Reinventing Foreign Aid, The MIT Press.
- van de Walle, Nicolas. 2001. African Economies and the Politics of Permanent Crisis, 1979-19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일본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

정 승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면서

일본은 상당한 예산규모로 1954년부터 반세기가 넘게 공적개발원조(ODA)¹⁾를 지원하고 있는 전통적 공여국으로 꼽히며 경제위기와 고령화 등의 내부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ODA규모로는 세계 5위안에 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경제번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본 ODA는 ‘열린 국익’이라는 뚜렷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여타 공여국과 구별되는 일본 ODA만의 ‘하드웨어 인프라구축’, ‘아시아 집중 지원’, ‘유상원조 중심’ 등의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저개발국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체 ODA예산 중 7.8%(2010년 기준)를 지원하며 미국과 함께 농업분야 절대적 공여국으로 꼽히며 상당한 규모로 농업분야 ODA에 지원하고 있다. 오랜 공여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시행착오와 변화를 겪어오며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ODA에 대한 연구는 선진 공여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양적·질적 ODA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본 내용은 OECD자료와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농림수산성 자료 및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tmddms7777@gmail.com, 02-3299-4253).

1)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이며,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개발원조’를 ‘개발협력’ 또는 ‘ODA’, ‘원조’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일본 ODA의 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농업분야 ODA에 대한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 개발협력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조직과 절차 및 제도 등의 체계, 정책과 전략, 그리고 실적에 대한 조사를 정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농업 분야 개발협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연왕

2.1. ODA의 배경 및 목적

일본은 1954년 콜롬보플랜(Colombo Plan)²⁾을 계기로 기술협력 중심의 ODA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시기 일본 ODA는 전후배상의 의미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과 경제협력협정과 배상원조를 시행하였다. 다시 말해 저리의 유상차관형식의 원조와 배상외교에서 비롯하여 전후의 피해국가에 대한 외교적 관계개선을 위한 도구로써 ODA가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활용되었다³⁾(Lancaster, 2010). 경제협력의 틀 안에서 시작된 일본의 ODA는 국제사회로부터 상업주의적 경제원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일본 ODA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ODA정책 및 전략 그리고 원조형태, 협력대상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 1 일본의 공여역사

구분	시기	ODA기조
제1기	2차 세계대전 이후 ~ 1960년대 초반	일본의 수출시장 확대와 중요 원자재 확보를 통한 경제이익 중시 - 아시아 중점 지원
제2기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중반	일본 경제의 장기적 이익중시 - 상호원조 전제, 유상원조 중심, 권역 다양화
제3기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후반	개도국 발전을 통한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의 중요성 인식 - 양적확대와 질적 개선의 노력하에 인프라개발, BHN, 인재양성 원조
제4기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국제공헌과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 중시 - 양적 확대를 통해 세계 제1의 원조공여국(1989년)

자료: 강철규, 홍진이(2009) 참고하여 필자 재정리.

2)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협동적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약.

3) Needing to recover itself, Japan "organised itself to provide those reparations to benefit not just the recipient country but its own business community" (Lancaster 2010).

국제사회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일본 ODA는 원조의 순수성(good intention)과는 구분된 일본만의 ODA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Lancaster, 2010), 일본 ODA 체제는 분산형, 다부처제의 다원화된 구조로 되어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관료주의적 요소가 원조 실시체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OICA, 2011). 또한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일본의 공여역사를 통해서도 일본 ODA는 경제 지향적 목적이 기저(underlying)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ODA의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때 ODA 목적성을 구분하여 보다 정당한 ODA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ODA는 인도적 목적 외에 다양한 공여 목적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여국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략형 원조’국은 국제관계와 자국의 안보유지 등 정치·외교적 목적이 우선이 되는 유형이고, 둘째, ‘상업형 원조’국은 무역관계, 시장개척, 자원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이 중요기준이며, 마지막으로 ‘인도주의형 원조’는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빈곤 퇴치를 고려하여 ODA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Hook, 1998; 정상희, 2010). 일본은 ODA대강과 ODA중기정책에 ‘ODA를 통해 일본의 안정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어 ‘상업형 원조’의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일본 ODA는 경제성장전략의 도구로서 수출촉진, 개발수입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뚜렷이 설정된 ODA목적성은 일본 ODA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김복희(2002), 정상희(2010) 외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단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지원, 아시아 중점지원으로 손꼽히는 일본 ODA의 특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ODA가 지향하는 목적성에 따라 정책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일본만이 가지는 ODA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경제 하부구조 사업 중심 즉, 다리, 댐, 도로와 같은 인프라 중심의 지원이다. 이는 실상 일본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 확보를 위한 의도와 자국의 경제적 실리가 바탕에 있다. 또한 아시아편중 지원 특징은 경제적 이익측면에서 안정적 자원수급처를 개척하고 시장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원조 이면의 목적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1960년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후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차츰 국제사회로부터 공여국으로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다원화된 개발협력체계에 대해서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DAC의 동료평가(2004)에서는 무상원

조 운영에 대해서 원조전략과 정책개발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권고 받았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시도와 개혁을 통해 정책적으로 실용주의적 노선 이면에 ODA의 양적 확대를 통한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2. ODA의 일반연왕

2.2.1. 세계

일본은 최대 공여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ODA/GNI비율은 0.20%⁴⁾(2010년 기준)로 DAC국가 중 20위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지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책임감 있는 공여국으로서 역할확대의 부담과 함께 자국실리 및 경제협력보다는 원조 목적성에 부합하는 선한 원조로의 변화를 권고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내부적 반성에 기인하여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와 체계의 틀을 발전시켜가며 2008년에는 ODA 질적 제고를 위한 대대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일본 개발협력 체제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원화된 구조의 문제를 갖고 있었으나 체제개혁을 통해 통합을 이루었다. 따라서 일본의 변화과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절에서는 추진 체계, 법, 제도, 절차 순으로 일본의 ODA개혁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ODA는 유·무상 이원화의 불안정한 체제를 국제협력기구⁵⁾(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로 단일화하여 체제를 완비하였다. 외무성(MOFA), 통상산업성(MITI), 재무성(MOF), 경제기획청(EPA)등의 부처가 전문화된 역량을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2004년 DAC의 동료평가에서 무상원조 운영에 대해 원조 전략과 정책개발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2006년 다자차원의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협력국이 외무성내에 설치되고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의 개정안이 2008년에 발효되면서 신JICA(the new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한 통합과 일원화를 이루게 된다<표 2 참조>.

일본정부의 ODA운영체제 일원화의 노력으로 2006년 JICA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10월 새롭게 New JICA(新JICA)가 세워져 기존의 유상원조 담당의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기능과 기술협력, 외무성의 무상원조를 모두 총괄하는 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 JICA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개혁 이후 신

4) JICA(2011).

5) 본고에서는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국제협력기구’ 또는 ‘JICA’로 축약하여 표기한다.

표 2 JICA 체계 개혁 전후의 체계 및 역할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신JICA ODA체계 및 역할
조직	역할	
외무성	- ODA 정책 총괄 및 조정 - 무상원조 관리 - JICA, JBIC 감독 - UN기구 협력업무	
JICA	- 기술협력 - 외무성의 무상원조 업무 지원	
JBIC	- 차관, 유상원조 담당	
MOF(재무성)	- JBIC 기금관리 - 국제금융기구 협력 업무	
통상산업성(MITI), 경제기획청(EPA)	- 무역과 투자, 아시아 경제협력관련 업무	
기타 정부부처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등)	- 초청연수 프로그램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 기술원조	
민간부문	- 정책협의, 프로젝트 수행 - 연구, 정책 조언 등	

자료: OECD(2004);JICA(2010)

JICA의 조직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1 참조>.

ODA전략 부분은 해외경제협력회의를 통해 총리 주도하에 관방장관, 외무성 장관, 재무성 장관, 경제산업성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정책기획부분은 2006년 외무성의 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 아래 국제협력국이 설치되어 종합외교정책국, 지역국이 협력하여 외무성의 기획입안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 개편이 되었다. 특히, 2009년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2006년 설립)의 국별원조전략(기획)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원조정책협의부서(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coordination division)를 새로이 설립하여 무상⁶⁾과 유상⁷⁾ 그리고 기술협력⁸⁾ 원조유형의 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별, 분야별 맞춤형 원조계획이 가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ODA시행부분에서 가장 큰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신JICA체제로 유·무상 자금협력이 통합되고 외무성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외무성 ODA부서와 일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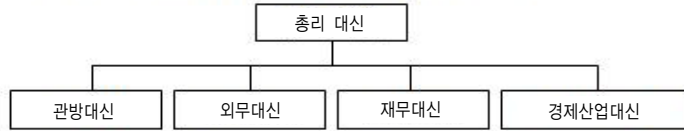
6) 무상자금협력: 변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합의된 특정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공여하는 형태로 주로 저개발국과 재정이 나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보건 및 의료등의 기초생활분야, 기초교육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룬다. 무상자금협력은 일반 프로젝트 무상자금협력과 일반대중·인간안전보장, 무상자금협력 등이 실시된다.

7) 유상자금협력: 저리의 장기변제의 완료된 조건으로 개발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엔차관이라고 통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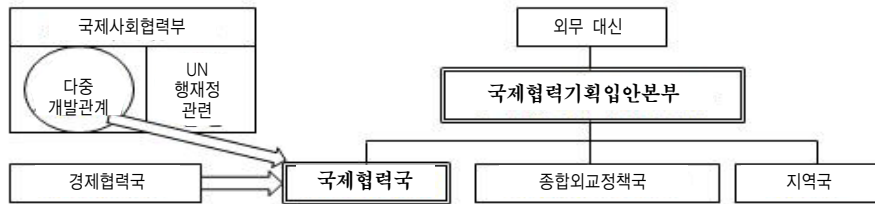
8) 기술협력: 저개발국의 국가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대책, 보건 및 의료, 교육 등의 기초적인 기술분야와 고도의 통신기술, 지진 및 홍수 등의 재해에 대한 긴급원조 등에 걸쳐 다양하게 지원되며 주로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으로 실시된다(MOFA, 2011).

그림 1 신(新) JICA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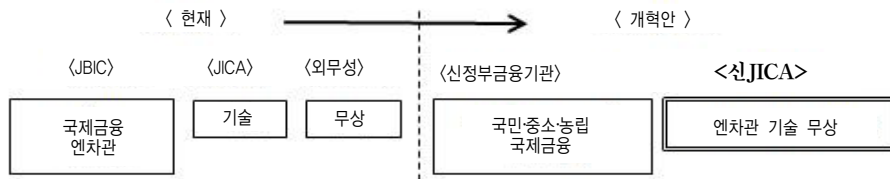
전략부분 : 총리 아래 각료급의 「해외경제협력회의」 설치



정책의 계획 및 입안부분 : 외무성의 기획·입안능력을 강화



시행부분 : 엔차관, 무상, 기술협력의 시행을 JICA로 일원화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Web Site.

제협력은행(JBIC)을 단일화하여 JICA가 무상과 유상원조, 기술협력 지원을 총괄하고, 외무성은 원조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다만 지진 피해 등에 대한 긴급원조 등 신속,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무상원조(1,000만 엔 미만)의 경우 외무성이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또한 일본의 특징적인 조직체로 국가별 ODA TF(Task Force)를 들 수 있으며, 국가개발전략 수립 및 사업실행 시 현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현장중심의 ODA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이래로 7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ODA를 위한 기반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전략, 정책, 시행 부분에 대한 외무성 기구의 조직개편과 신JICA의 체계개혁은 일본 ODA의 전략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표 3 참조>, JICA는 2003년 독립기관으로 분리된 후 외무성의 1차, 2차 중기목표에 따라 두 차례 개혁을 통해 2008년 10월 통합에 이르렀다. 개혁의 주요 목표는 현장중심운영, 인간안보, 효과성 및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는 기초 아래 이루어졌다. JICA의 조직은 총 24부 5실

표 3 JICA의 조직 개혁 과정

개혁목표		내용
1차 개혁 1차 중기목표(2003-2007)	- 현장중심운영 - 인간암보 도입 - 효과성,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 본부구조조정/팀제도 도입 - 신인사제도 도입 - 현장사무소 권한이양 추진
2차 개혁 2차 중기목표(2007-2012)		- 국내사무소 조직검토 - 운영체계 간소화 - 통합최종준비 - JICA 국내사무소 철수 - JICA교육센터 구조조정

자료: JICA(2011) 2011 annual report.

2국 1연구소 체제로 개편되었고 새로이 지역국, 주제기반의 부서로 재조정 되었다. 기존의 아시아(2개국)지역국에서 세분화하여 동남아시아, 대양주,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로 나누어 편성하여 각 지역국은 현지 지역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기능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장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전반적으로 신JICA의 개혁은 원조방식의 통합으로 집행효율을 높이고 일본 ODA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신JICA를 통해 유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총괄하게 되어 분산되어있던 원조 기능이 통합되고 자금협력사업과 기술협력의 연계사업 등의 무상통합지원의 유연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원조시행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JICA를 중심으로 외무성과 13개 부처가 조율되고 총괄적 ODA집행조직을 통해 원조정책 운용과 집행을 의사결정과정정이 단축되며,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직 통합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예단하기는 이르며, 긍정적 시너지 효과 이면에 여전히 JICA 내부적으로 유상과 무상의 조화와 협력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표 4 ODA 관련 제도

시기	내용
1992	- ODA대강
1998	- 중앙성청등개혁법 제정
1999	-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ODA중기정책 확정
2003	- ODA대강 개정 - 1차 중기목표(The first Mid-term Objectives)(2003-2007)
2005	- 신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ODA중기정책(Medium-Term Polic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6	- JICA법 개정
2007	- 2차 중기목표(The Second Mid-term Objectives)(2007-2012)
2008	- 2차 중기목표 개정

자료: JICA, 2011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조직개편을 통한 일본의 ODA개혁은 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ODA법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ODA대강(ODA Charter)과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ODA중기정책, JICA법 등이 있다. 주요 ODA제도와 개혁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개발협력에 대한 제도적 개혁은 1992년 ODA대강(ODA Charter)의 제정 이후 1998년 21세기를 향한 ODA 개혁 간담회를 통해 일본정부는 ODA개혁안 발표하고, 1999년 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의 통합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발족하여 차관협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ODA중기정책(이하 ODA중기정책)’을 확정하고 2000년에는 국별원조계획(Country Assistance Policy, CAP)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등 ODA 전략 및 정책적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이후 2002년 ODA개혁 심의위원회의 ODA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정과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2003년 ODA대강을 개정하고 ODA질적 개선을 목표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의 새천년개발목표), 평화구축, 인간안보 등의 새롭게 변화하는 ODA패러다임을 담은 개정된 ODA대강을 기반으로 2005년 새로이 ODA중기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2006년 외무성 내 국제협력국을 설치하여 JICA법을 제정하는 등 외무성을 비롯한 ODA시행기관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표 5 일본 ODA대강의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구분	개정 전(1992년)	개정 후(2003년)	2010년
주요원칙	유엔헌장원칙 준수하여 3가지 사항 고려 ODA지원 1. 개도국 요청사항 2. 경제사회현실 3. 양자관계	인간안보 개념	
중점과제	- 빈곤 - 지속적 성장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처 - 평화구축	- 국내외 정세 감안하여 빈곤과 평화구축을 중심으로 신축성 있게 지원 - 중점과제 중 빈곤퇴치가 우선적 과제로 명시	- MDGs달성 - 평화구축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시행방안	- 무상원조, 유상원조, 기술원조 간 조화추진 - 국제기구, 개도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NGO협력) - 일본의 개발경험 및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 개발경험 활용,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 최대한 활용 - 각 개도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기술 개발 하여 전파	- 중기프로그램 및 국별 프로그램 확정, 유·무상 및 기술원조 집행 - 관련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외무성이 조정역할 수행 - 민간참여 확대 및 홍보강화 - 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 및 부패 방지 대책 강구	- 개도국과의 상호작용 확대 - 민간기업 연계강조 - 선택과 집중 - 구체적 성과지표 설정 및 공표 - 프로세스개선 - 현지 ODA TF강화 - 평가의 독립성 강화 - 신흥원조공여국과의 협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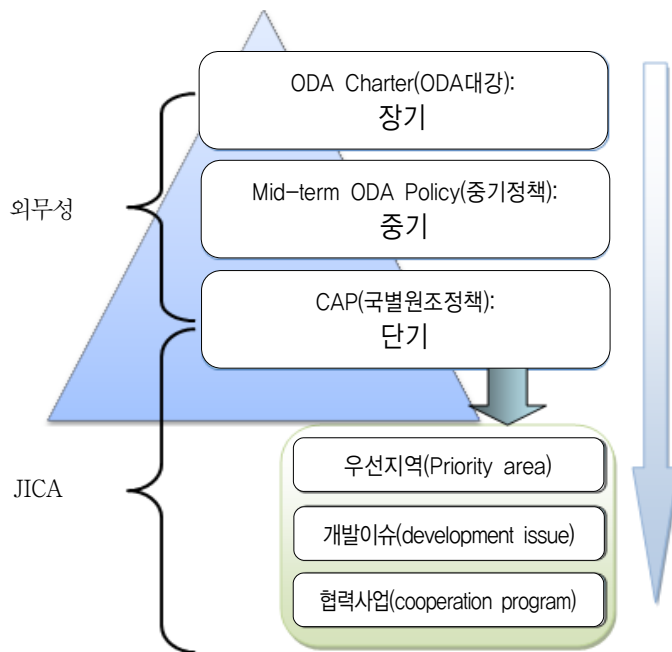
자료: 정상희, 2010.

주요한 ODA제도로서 ODA대강의 개혁 전후 내용을 비교한 정상희(2010)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원칙, 중점과제 및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인간안보에 대한 강조, MDGs 달성을 목표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ODA 정책방향(ODA scheme)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ODA 정책기조가 기저에 있어 자조와 실리주의 목적에 따라 여전히 ODA의 본래목적보다 국가이익이 앞서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⁹⁾.

2.2.2. 정책 및 전략

일본 ODA정책은 ODA대강에 준하며, 2003년 개정된 ODA대강에 따르면 ‘이 대강을 바탕으로 ODA 중기정책이나 국가별 원조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준한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도모’한다고 명시한다. 외무성 주관으로 ODA대강¹⁰⁾의 장기정책, 중기정

그림 2 일본 ODA 정책 구조



자료 : 일본 ODA 백서(2011); ODA evaluation guideline(2011)를 참고하여 필자 재작성.

- 9) 궁극적으로 일본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HRD, 인프라 외에 새로운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가의 이익을 ODA목표로 명시함 (정상희,2010).
- 10) 일본은 대외원조법을 제정하지 않고, ‘일본 ODA대강(신 ODA대강)’을 통해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만 밝힘(Eyinla, 1999 재인용)

책, 국가별 원조정책(CPA)의 단기정책으로 나뉘어 단계별로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JICA는 단기 국가별 원조정책을 수립하여 개발목표(중기 및 세부목표)를 우선지역과 개발이슈에 따라 국별, 분야별 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최근 외무성 보고를 통해 일본의 ODA 정책을 단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발원조의 상위개념은 개발협력과 국제협력이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본을 포함한 세계 공동의 이익추구가 ODA의 목표이며 정책방향임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ODA초기의 경우 아시아 지역 중심의 배상외교를 통한 지원이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활발히 국제사회에 지원을 늘려가며 활동하던 시기로 1980년대 말까지는 양적확대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저개발국 지원이 강조되었다. 본격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실용주의 외교 전략에 따라 ODA와 민간자본의 잉여, 무역의 삼위일체를 정책방향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ODA 질적 제고를 위한 개혁이후 ODA대강과 중기정책을 골자로 한 정책변화는 보다 전략적으로 글로벌이슈를 반영하며 발전하고 있다.

먼저 ODA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ODA기본이념, 원칙, 중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공헌을 통해 일본의 안정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 인권의 안전보장, 공정성의 확보,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연계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침 하에 빈곤삭감, 지속적 성장, 평화구축 등의 사항을 중점과제로 규정한다. 특징적으로 원조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정부 전체의 일체성과 일관성 있는 원조정책의 입안을 강조하며 중기정책과 국가별원조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부처간의 연계와 정부와 실시기관간의 연계, 정부협회의 강화, NGO 등의 원조 관계자와의 연계를 중시하며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ODA 중기정책은 2003년 개정된 ODA 대강을 기반으로 2005년 재검토를 거쳐 새롭게 신 ODA 중기정책이 수립되었다. 중기정책은 ODA대강의 원칙과 중점과제 및 우선과제, 시행방안에 대한 3~5년의 중기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원조 실시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수원국의 개발수요(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수요의 조사·분석의 강화, 원조정책의 입안과 검토의 중요성 강조, 협력국과의 제휴강화, 투명한 정보공개와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개발협력정책 중 단기정책은 JICA의 주도하에 국별협력정책(CAP)을 수립하고

개발협력목표(중기 및 세부목표)를 우선지역과 개발이슈에 따라 국별, 분야별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별협력정책은 협력대상국에 대한 세부개발전략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수요 등을 포함하는 전략문서로 볼 수 있으며 매년 5년을 주기로 수정된다. 2009년 이래로 28개 국가의 국가별 원조프로그램(Country Assistance Programs)이 수립되었으며, 2010년 ODA검토보고서¹¹⁾(ODA Review Final Report)를 통해 우선지역과 국가방침을 더 구체화하고, 국가별 원조정책에서 국가별 원조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을 위한 지원방침을 강조하고 정책과 계획의 일관성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정책과 전략문서는 아니지만 최근 일본의 ODA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으로 ODA검토보고서를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ODA 변화는 2010년 오카다 외무대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ODA검토보고서를 통해 ODA대강의 수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지금까지 일본의 ODA에 대한 반성과 왜 ODA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차 검토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어 반세기의 공여역사의 실제적인 도전과제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일본의 국제협력가운데 ODA를 개발협력으로 규정하고 그 이념을 열린 국익의 증진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ODA의 당위성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념을 실시하는 중점분야를 세 가지로 집약하여 빈곤, 식량과 평화에 대한 투자를 통한 MDGs달성에 대한 공헌, 지속적 경제성장의 지원 등 ODA대강 및 중기정책에서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을 재차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정책 및 전략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정책입안에 대한 개선안과 적극적 홍보와 개발재원확보 등의 다양한 논의들이 있으나, 실제적 시행주체인 JICA에 대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ODA의 정책, 전략적 측면 그리고 실행측면까지 아우르는 도전과제와 개선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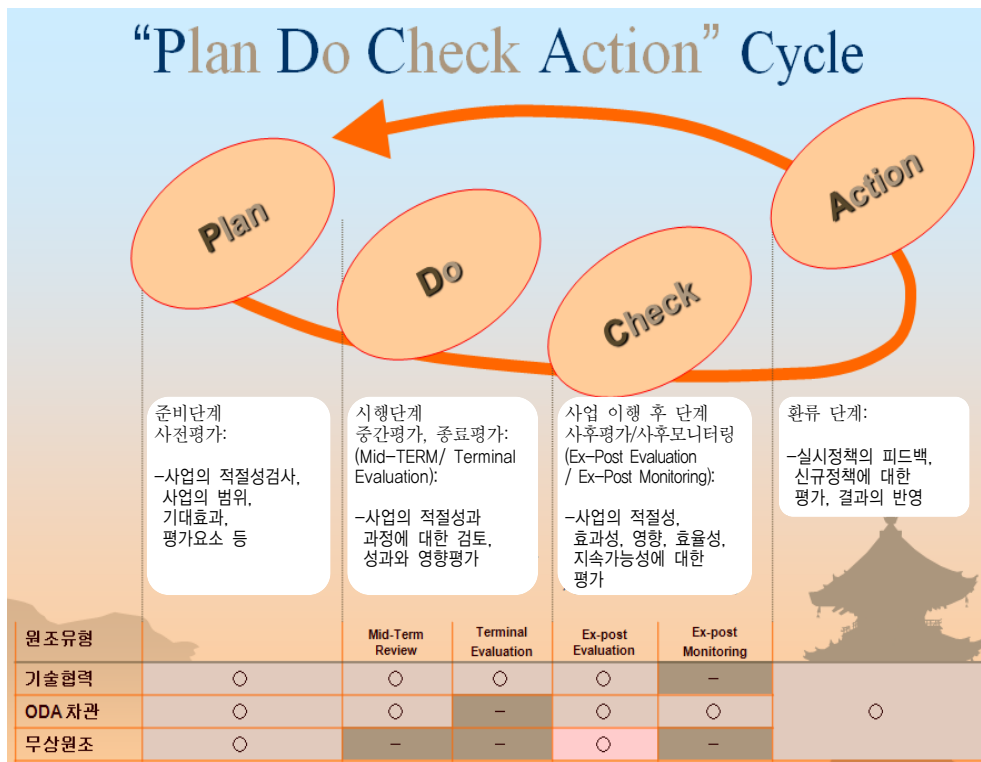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첫째, JICA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JICA는 자체연구소를 활용하여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향후 5년간 예비사업을 포함한 프로그램 및 개발과제별 사업을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과 협의하여 국가별 협력전략에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JICA의 추진 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개발협력

11) 2010년 6월 외무성주관의 OD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최종보고(ODA Review Final Report: Living in harmony with the world and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는 오카다외무대신의 지휘하에 ODA를 보다 전략적,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시작하였다.

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신속화와 PDCA사이클¹²⁾을 철저히 구축하여 현지실시체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특히 엔(Yen)차관 집행 프로세스의 경우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하고, 협력대상국이 익숙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부분은 기타 공여국과 차별화되어 있다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PDCA사이클 <그림 3>에 대해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등의 환류(feedback)를 사업계획안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 실시를 위해, 프로그램접근(Program-based Approach, PBA)의 강화와 결과중심(Result-based Approach, RBA)의 접근을 중시하며 한정된 재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JICA는 국가별로 작성되는 개발협력전략의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마다 중점분야와 협력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간결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선별

그림 3 일본 ODA실행체계(PDCA 사이클)



자료: JICA, 2012 "New JICA and Project Evaluation".

12) 2005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PDCA 사이클'은 기획(Plan)과 정책입안(Do), 평가(Check), 결과 반영(Action)까지의 실행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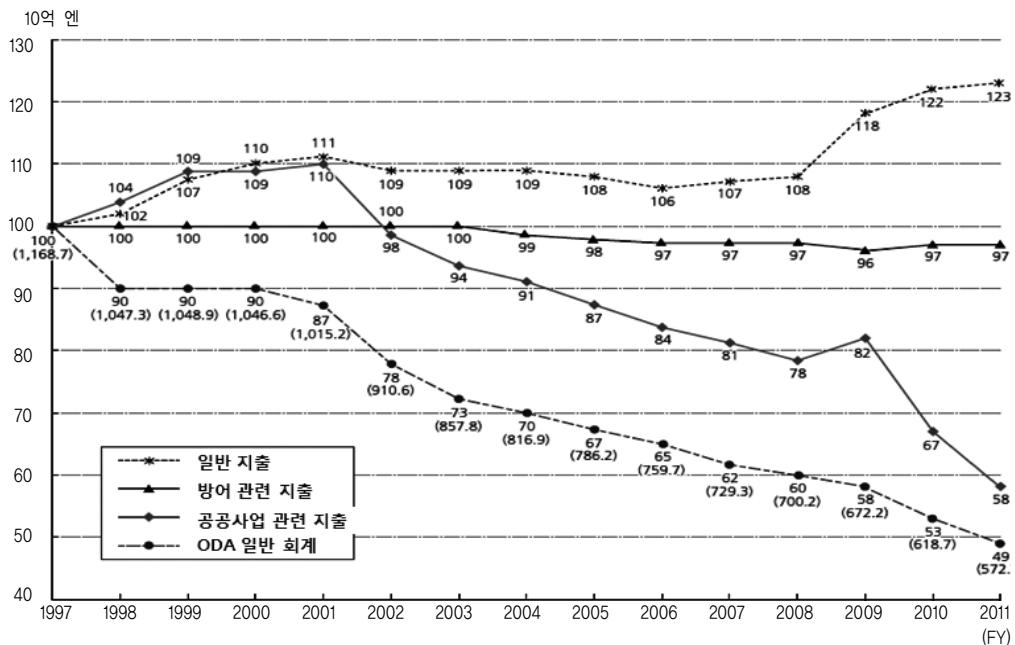
하여 이에 집중하는 국별협력전략과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발굴 방식은 기존의 협력대상국 요청위주의 사업 발굴이 아닌, 협력대상국과의 정책협의를 토대로 개발협력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방식은 유·무상협력 및 기술협력의 원조방법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시체계정비는 JICA 뿐만 아니라 현지실시체제의 정비도 의미하며, 이를 위해 현지의 현장협의체의 활용을 통한 현장주의강화를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외교공관, JICA, JBIC의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협의체(ODA Task Force)의 기능강화는 수원국의 정확한 수요(Needs)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원조정책 입안과 수단에 대한 정책을 본부와 협의하는 등 정책적으로 현장중심의 효과적인 ODA시행을 위한 현장협의체의 기능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2.3. 실적

일본 ODA 예산은 최대 집행기관인 외무성을 포함하여 10개의 성과 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외무성의 ODA예산은 국제협력기구(JICA)가 담당하는 무상협력예산과 국제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림 4 일본 ODA 예산 추이 - 외무성(MOFA) 외교백서 2011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ODA배증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ODA 증액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계획 하에 ODA 확대를 실천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잡으며 꾸준히 ODA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2000년 이후 국내 재정 악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일본의 ODA는 내부의 정치·경제의 영향 하에 ODA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ODA예산은 국내 정치·경제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며 아래 <그림 4>를 통해 최근 10년 간의 ODA예산 삭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6>을 통해 2010~11년 ODA예산을 살펴보면 외무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청의 ODA예산 또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살펴보면 2010년 보다 2011년에는 조금 간극이 해소되고 있다. 2011년 JICA를 통한 차관지원의 예산 하락 폭이 다소 크나 그 외 무상협력의 경제개발지원 및 기술협력은 전년대비 1~4%대

표 6 정부의 부처별 ODA예산(일반회계)

단위: 백만 엔, %

구분	2010 예산	2011(예산)	2010/2011(%)
내각본부 (National Police Agency)	27	14	-48.5
금융청 (Financial Services Agency)	119	105	-12.2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773	721	-6.7
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236	133	-43.5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13,378	416,989	0.9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132,934	94,663	-28.8
문부과학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33,132	28,697	-13.4
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8,599	6,685	-22.3
농림수산업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956	3,482	-12.0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3,126	19,072	-17.5
국토교통성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471	360	-23.6
환경성 (Ministry of the Environment)	1,994	1,827	-8.4
합계	618,746	572,749	-7.4

자료: 외교백서 MOFA, 2012.

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다자원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담금 및 의무적 거출금에 대해서는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이 지속적으로 ODA예산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OECD/DAC의 제40회 고위급회의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구국가들의 ODA 규모 증대에 대한 몬테레이 협약 준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일본은 규모의 확대보다 효과성에 대해 강조¹³⁾하였는데, 이는 일본 내 부적 갈등요인 고령화, 재정적자 등으로 ODA양적 확대에 대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ODA배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의 ‘실리주의 원조’의 특징이 여실이 드러난다. 배상외교에서 시작된 1960년대부터 아시아 집중지원 공여국으로서 일본의 ODA 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매우 두드러지며 80년대 후반은 40% 넘게 지원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30%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MOFA, 2010). 2010년 실적을 기준으로 분야별 지원추이를 살펴보면, 무상협력지원은 공공사업(47.2%), 농림수산분야(9.7%) 순이며, 기술협력은 기타 분야를

표 7 일본의 일반회계 ODA예산¹⁴⁾

단위: 억 엔(Mi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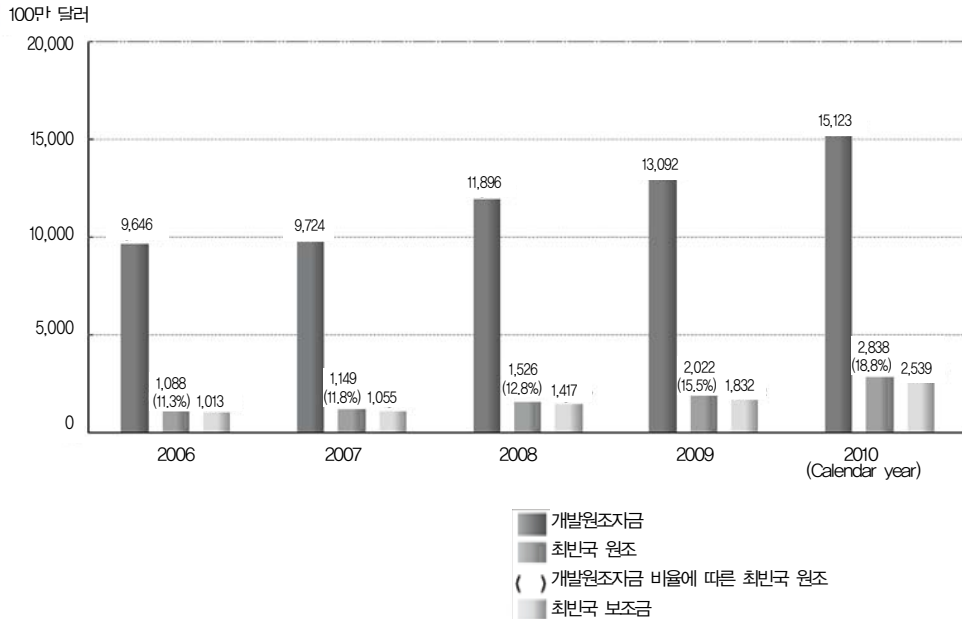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예산	2009/2010 증감비율	예산	2010/2011 증감비율
가. 증여	514.3	-5.6	508.3	-1.2
1. 양자 무상원조	425.4	-7.7	410.3	-3.5
1) 경제개발 지원과 기타	154.2	-4.2	151.9	-1.5
2) 기술협력	269.7	-7.2	256.9	-4.7
3) Transfer to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	1.6	-33.3	1.6	-
4) JICA 예산 (loan aid section)	-	-100.0	-	-
2. 다자기관 출연 및 출자	88.9	5.6	98	10.2
1) UN 및 기타 다자기구	61.1	4.5	68.3	11.9
2) MDBs 외 기타	27.9	8.3	29.7	6.5
나. 차관				
JICA(loan aid section)	104.4	-18.0	64.4	-38.3
총액	618.7	-7.9	572.7	-7.4

자료: MOFA, 2011.

13) OECD 위원회 리포트, 2002.7.(개발원조위원회- “OECD/DAC, 제40차 고위급회의 개최”).

14) 10개성과 2개기관의 ODA예산임.

그림 5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추이



제외하고 공공사업과 행정지원 그리고 농림수산분야 지원이 두드러진다. 또한 유상협력은 경제인프라분야의 운송(41.1%), 가스 및 전기(26.7%)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며, 농림수산분야는 2.6%를 차지한다.

일본 ODA의 지역별 추이는 일본의 ODA초기 목적성과 관련이 깊다. 평균지원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94.4%가 아시아에 지원되었고,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권역별 다양화를 시도하였지만 2010년 53.1%를 기록하며 여전히 아시아 집중지원의 기조를 살필 수 있다. 반면 1990년대까지 한 자리 수에 머물렀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이남지역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MOFA, 2011). 또한 지속적인 ODA예산 감축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전략,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 1990년대 152개국의 협력대상국을 2000년대는 140여 개국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 기준 145개국에 지원하고 있다.

<그림 5>를 통해서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무상협력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06년 1,088백만 달러에서 2010년 두 배에 달하는 2,838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총양자 원조총액 대비 비율도 2006~07년까지만 해도 11%내외였으나 2010년 18.8%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의 농업분야 ODA 현황

3.1. 농업 ODA 일반 현황

3.1.1. 농업 ODA 체계

농업분야 ODA는 주로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각 부처의 개발협력사업은 부처 고유 ODA예산으로 추진된다. 신 JICA체계에서는 기존의 기술협력사업 외에 외무성으로부터의 무상자금협력 사업과 국제협력은행(JBIC)으로부터의 유상자금협력¹⁵⁾을 승계하여 JICA가 담당하고 있다. 단 기존의 13개 성·청이 담당하던 기술협력사업¹⁶⁾은 각 성·청의 특성 및 축적된 노하우 활용 필요에 따라 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농림수산분야의 주요 부처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은 기관 간 협력이 긴밀하여 외무성의 사업¹⁷⁾에 농림수산성이 적극 참여한다.

농림수산분야 ODA를 시행하는 기관은 JICA, 농림수산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JICA는 양자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협력(T/O)과 유상원조 그리고 무상원조를 지원한다<그림 6 참조>. 신 JICA이후에 JICA가 JBIC¹⁸⁾의 유상원조를 통합운영하고 있어 국가별, 분야별 프로젝트 사업을 유·무상 그리고 기술협력 연계사업으로 새롭게 발굴해가려고 노력하며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업분야와 같이 농림수산성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ODA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JICA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야별 각 부처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지역에 대한 통합지원전략 등이 부재하여 이는 JICA가 대상국가에 대한 국가지원전략(CPA)에 기초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농림수산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성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 외에도 JICA로부터 위탁 받아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파견조사와 같은 전문가 활용의 개발조사는 민간기업 및 단체, 정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농업분야의 경우 농림수산성과 JICA, 외무성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JICA와 정부부처간의 분절 및 중복사업의 갈등은 야기하지 않는다.¹⁹⁾ 농림수산성은 주로 JICA의 기술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실행하거나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JICA는 이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신청 사업을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매

15) 엔차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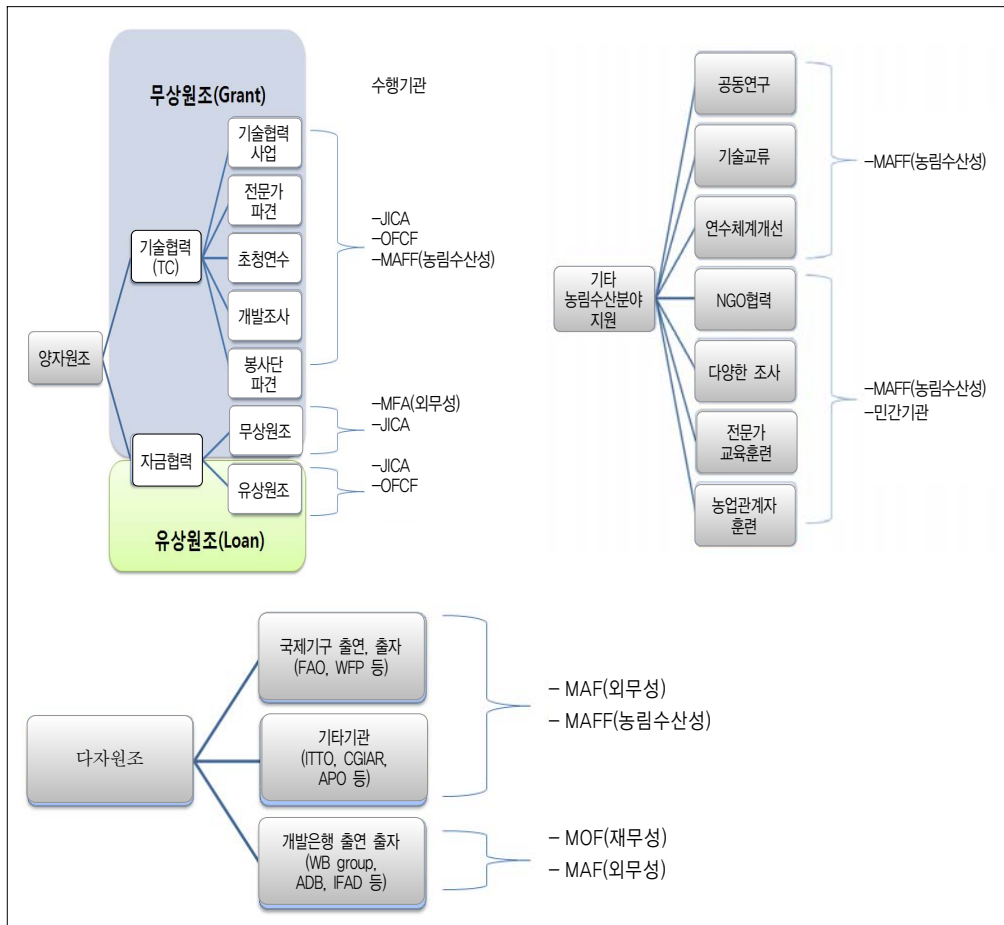
16) 기술협력 총 사업의 약40% 차지, 2008년 기준.

17) 대부분 JICA사업.

18) 일본국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9) 2012년 4월 JICA, 농림수산성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 근거함.

그림 6 농림수산분야 ODA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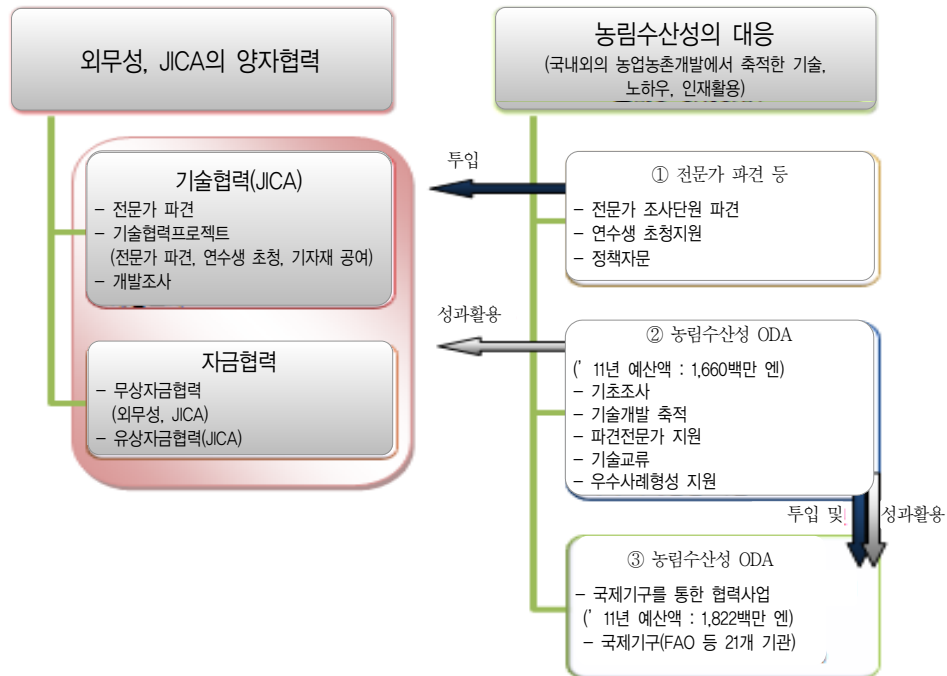


자료: JICA,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참고 필자 작성.

뉴얼을 작성하는 등 실제 사업수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외무성은 재무상의 협의와 사업관련 검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7 참조>.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성의 개발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외무성, JICA와는 별도로 수원국 개발조사, 연구 성과 정리 등 JICA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정리 등의 연구사업과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전문화된 분야의 지원으로 특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①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정책자문 등의 기술협력사업과 ② 농림수산성의 ODA 위탁사업(기초조사, 기술개발성과정리, 전문가파견, 기술교류 등), ③ FAO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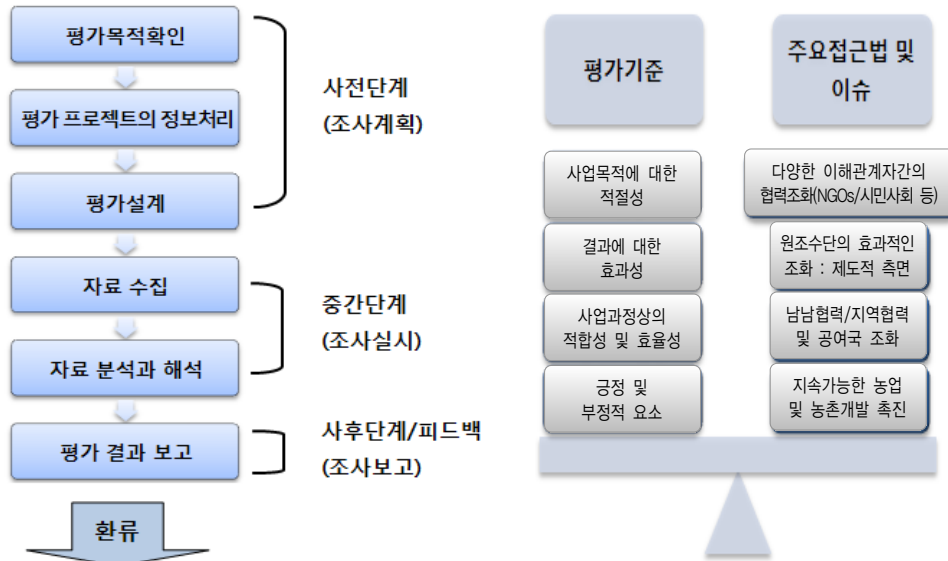
그림 7 농림수산물 ODA체계



일본의 경우 섹터별 개별 추진방식 및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농림수산물분야 ODA의 추진방식 및 절차는 실시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농림수산물분야는 주로 외무성(JICA)의 재원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농림수산물성의 부처 고유예산을 근거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별도 체계에 따르게 된다. 먼저 JICA의 농업분야 사업추진체계는 국가별 지원전략(CPS)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지원방향과 중점지원방향을 정하고 대상국에 따른 ① 지원전략(Assistance Strategy) 수립, ② 사업 형성, ③ 심사, ④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5단계에 걸쳐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한다. 농업분야 ODA 실시체계는 'PDCA 사이클'과 동일하며, 사전단계(계획, 조사) → 중간단계(실시) → 사후단계(평가) → 피드백의 시기별 단계를 가진다.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및 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절차<그림 8>과 OECD/DAC에서 권고하는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술적인 평가방법으로 분야별 평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JICA의 개별 프로젝트 평가는 이에 따른다.

그림 8 농림수산분야 평가 절차 및 평가프레임



자료: JICA, 2011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최근 2011년 4월에 발표한 ODA 평가 가이드라인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별, 사업별 프로그램평가는 외무성의 평가기준²⁰⁾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며, OECD/DAC의 평가기준²¹⁾도 준수함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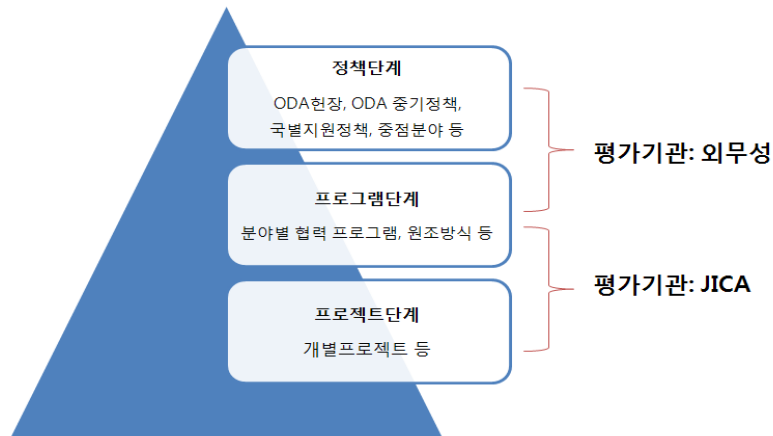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단계별 구분에 따라 평가의 수준을 달리하는데, 외무성은 정책과 프로그램단계까지를 평가하고 JICA는 보다 세부적인 프로젝트단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시간 순서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4단계로 이루어진다<그림 8 참조>.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JICA는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평가그룹, 외부전문가평가위원회 및 평가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JICA의 프로젝트 사업은 평가팀과 프로젝트 사업실행팀이 공동수행하며, 평가검토위원회, 외부전문가평가위원회, 사업평가그룹, 사업부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평가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었는데 1998년 정부기관개혁에 대한 기초법안에도 명시하고 있으며, ODA활동에 대한 평가는 외무성의 책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무성은 연간보고서에 ODA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10년 ODA검토보고서에서는 평가의 중요성과 개선에 대

20) 정책의 타당성, 결과의 유효성, 프로세스의 적절성.

21)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특히 환류를 통해 계획·입안에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평가 절차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9 외무성과 JICA의 평가 범위 및 체계



자료 : MFA, 2007 '농업부문평가' .

3.1.2. 농업 ODA 정책 및 전략

농업분야 ODA정책은 ODA대강(2003)과 중기정책(2005) 및 환경과 빈곤 등 전 지구적 이슈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ODA대강은 MDGs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개발과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등이 주요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ODA대강을 기반으로 수립된 중기ODA정책(2005)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ODA시행계획을 더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개발전략(Country Assistance Programs, CAPs), 경제협력프로그램(ECPs), 국가별 ODA TF(Task Force)에 기반한 국가 전략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ODA대강과 중기정책은 JICA(와 JBIC)의 분야별 지원정책 및 전략에 기초가 되며 실제로 국가개발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MOFA, 2007)²²⁾. 특히 중기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과제는 농림수산분야의 목표 및 중점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중기정책의 우선과제인 빈곤과 사회개발, 인적역량강화지원, 식량문제와 환경이슈해결은 농림수산분야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있다. 빈곤감소와 농업·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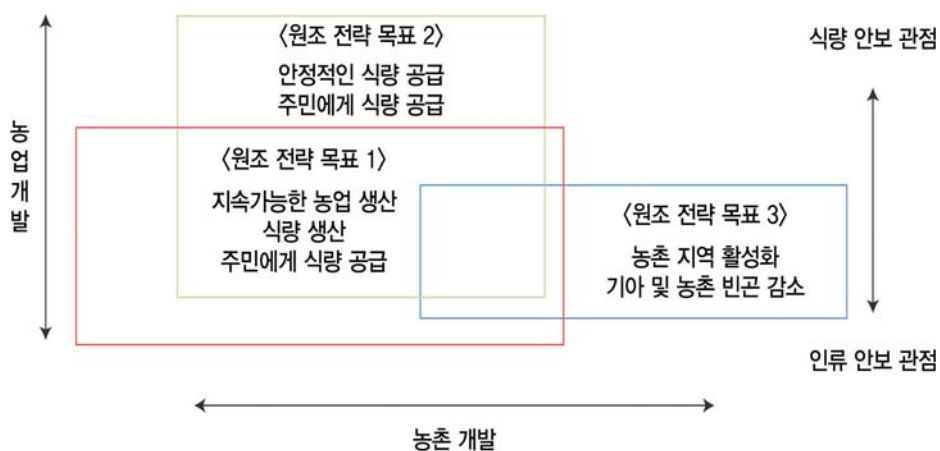
22)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Evaluation of Japan's ODA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7.

개발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하위세부목표로 농업생산성개선, 식량안보, 생활환경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ODA 중기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농촌개발협력의 정책방향은 개도국 빈곤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농업관련 정책 체계 구축지원, 농림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 농업 생산기술의 보급 및 연구 개발, 주민조직 강화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다.

<그림 10>은 일본의 농업 및 농촌개발지원의 전략적 특징 및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ODA백서(2011)에 따르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농업과 농촌개발을 강조하고 이는 MDGs의 빈곤퇴치의 달성목표와도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안보의 중점기조 또한 농업분야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식량안보와 인류안보의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개발을 통한 세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분야 협력은 ① 농촌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② 농촌지도자와 농업연구자와 같은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③ 농업협동조합의 증진, ④ 농업인프라 개발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농촌개발 목표는 ① 경제적 역량 강화(농촌소득개선, 농외소득개선, 인프라개발 등), ② 인적 역량 강화(보건과 기초교육 개선), ③ 환경보전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역량 강화, ④ 정치적 역량 강화(중앙행정능력 개선과 지방행정능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세부 중기목표도 설정되어 있다.

농림수산업성 또한 정부의 ODA정책기조에 따라 ODA대강과 중기전략을 따르며 농업분야 ODA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자연재해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 식량

그림 10 일본의 농업·농촌개발지원 전략 목표



자료: JICA, 2011.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해결, 재난복구 중심의 지원기조로 농림수산성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일본의 농업·농촌개발의 기본 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안정적인 식량공급, 농촌지역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농업정책체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농업생산네트워크, 유통체계 구축지원, 지역단위 농업생산기술 전파,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빈곤퇴출을 위한 대책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농림수산분야의 정책 및 전략적 개혁의지와 변화과정을 정리해보면, 정책적 기조는 ODA대강과 중기전략의 큰 틀에 기초하여 협력국에 맞는 국가별 지원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전략적 계획 하에 발전해왔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 및 전략(policy-level approaches)이 실제 사업(project)에 적절히 반영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2007년 외교부가 시행했던 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4개국²³⁾ 사례를 통해 농업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였는지를 ODA규모, 농업생산성 개선, 식량안보 등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의 지속가능한 접근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된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의 접근방식이 부재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정책 및 전략은 JICA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국가개발전략(CAP) 및 국가개발전략프로그램(CAIP)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특히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는 보다 종합적이고(holistic)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기반의 ODA TF(Task Force)의 역할 강조와 역량강화를 통해 CAP의 개선을 위한 활용 뿐 아니라 인간안보측면에서의 인적역량강화와 협력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1.3. 농업 ODA 실적

농림수산분야는 양자 그리고 다자지원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양자원조는 외무성 재원의 JICA의 무상협력과 농림수산성의 기술협력, 다자원조는 외무성기반의 FAO²⁴⁾, WFP²⁵⁾, CGIAR²⁶⁾ 등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금과 농림수산성의 출연금을 통해

23) 태국, 방글라데시, 가나, 페루.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JICA와 농림수산성의 차관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표 8 참조>.

표 8 농림수산분야 ODA 프로젝트(유형별 및 기관별)

구분			프로젝트 내용
증여 (양자)	무상협력	외무성(JICA)	- 일반프로젝트형식의 무상협력 - 수산분야: 수산관련 산업과 관련된 경제사회개발 지원 - 식량원조 -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 지원(Grant Aid for Underprivileged Farmers)
	기술협력	외무성(JICA)	- 인적자원개발에 기반한 프로젝트 - 봉사단파견 - 전문가파견 - 개발조사 - 사업평가 등
		농림수산성	- 글로벌 식량증산과 투자 촉진 -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원 - 산림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에 대한 지원 -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지원
차관 (양자)		JICA	- ODA 일반예산에서 자금지원 형태로 지원: 차관 프로그램
		농림수산성	- 수산협력 차관지원
다자 기구		외무성	- FAO, WFP를 통해 전 지구적 식량문제 등 빈곤퇴치를 위한 지원 - CGIAR을 통해 농림수산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 기타 UN기구 및 다자기구 지원
		농림수산성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World Food Programme (WFP),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 South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er (SEAFDEC), Mekong River Commission (MRC), umbrella organizations of the Contributions to 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ecretariat,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STD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United Nations University, 글로벌식량안보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등 지원

주 : 프로젝트 내용은 농림수산분야 사업에 한정하여 외무성(JICA)과 농림수산성의 사업만을 필자 임의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 MOFA(2011).

2011년 외무성의 외교백서에 따르면, 외무성은 JICA를 통해 일반프로젝트 형식의 무상협력지원과 식량원조 및 수산분야에 프로젝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은 외무성(JICA)과 농림수산성의 지원 사업이 구분되어지는데, 먼저 외무성재원의 JICA는 인적자원 개발에 기초한 프로젝트와 개발조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의 지

24)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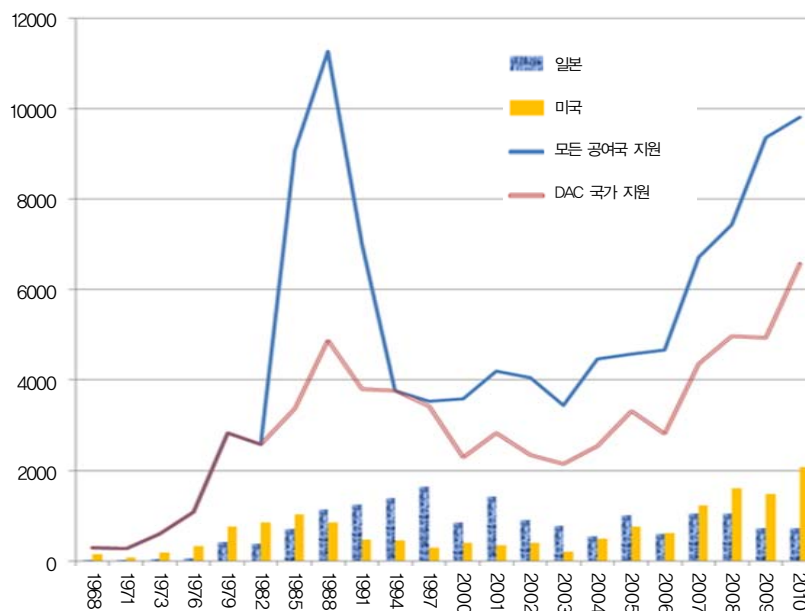
25)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26)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원이 이루어지고, 농림수산성은 개도국의 농림수산분야 개발, 어촌개발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① 글로벌 식량증산과 투자 촉진, ②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원, ③ 산림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에 대한 지원, ④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지원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차관지원은 일반적인 자금지원협력이며, 다자기구 역시 농림수산 관련 국제기구인 FAO, WFP, CGIAR 등에 대해 식량안보 및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해 출연 및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농림수산분야 ODA의 상당액이 DAC 국가들로부터 지원되며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다가 1990년대 원조피로현상과 함께 전체적으로 공여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당시는 양자 및 다자원조 모두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빈곤층이 만연해있는 농촌에 대한 개발 그리고 MDGs달성을 위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공조의 노력을 다하며 조금씩 증가추세를 지속해가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국제사회의 농림수산분야 ODA 현황



자료: <http://stats.oecd.org/qwids>.

<표 9>를 통해 1980년~90년대는 미국과 일본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면에서 절대적 공여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조가 감소하고 있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

지 일본은 타 공여국과 달리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농림수산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통해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당시 지원총액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한 총 규모 대비 비율도 평균 7%대를 유지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중점지원기조를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국내경기 불황에 의해 ODA지원총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평균 9%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9 일본의 농업ODA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간평균			총액 대비 농업 ODA 비율			총액			총액 대비 농업 ODA 비율		
	1979-81	1989-91	1999-01	1979-81	1989-91	1999-01	2004-05	2006-07	2008-09	2004-05	2006-07	2008-09
호주	13.8	27.3	46.9	2.7	8.5	7.2	85.7	88.7	144.2	6.9	5.6	5.9
오스트리아	-	-	4	-	-	0.9	22.9	23.4	26.2	8.5	6.8	6.7
벨기에	-	0.3	68.1	-	0.3	6.3	119.5	142.1	162.6	12.9	13.3	12.3
캐나다	80.9	80.4	18.3	21.6	5.2	1.1	220.3	127.3	270	12.7	7.2	10.9
덴마크	53.8	38.2	57.6	15.9	9.4	6.8	237.2	92	139.1	15.5	9.8	12
핀란드	-	60.5	3	-	15.4	1	81.4	54.9	116.9	17.7	12.7	14.7
프랑스	131.2	247.9	141.7	7.9	10.5	3.6	189.8	502	535.7	4.9	9.7	8.4
독일	373.5	145	134.1	7.9	3.8	2.9	353.4	474.7	395.3	6.8	7.4	4.8
이탈리아	10.6	150.7	27.6	21.5	10.5	2.2	32.3	57.2	154.8	4.6	7.4	18.1
일본	661.4	736.5	481.1	10.1	7.7	7.3	893.9	1168.8	965.2	9.1	11.2	7.8
네덜란드	223.1	130.7	96.2	19.5	11.4	2.2	191.2	186.1	160.6	7.3	4.6	4.2
노르웨이	37.2	23.4	43.6	14.9	4.4	4	125.5	126.3	253	8.6	6.5	10.2
스웨덴	12.9	244.2	28.7	2.6	13.1	2.7	114.7	146	88.7	7.8	9.1	5.8
스위스	38.6	68.9	62.5	26.6	12.2	7.9	95.2	111.1	120.5	11.1	12.4	13.5
영국	75.9	102.4	107.2	4.7	8.5	2.9	197.4	263.4	506.3	6.2	6.5	7.5
미국	1042.1	549.2	383.2	12.5	6.6	3.1	712.4	1018.7	1555.2	3.6	5.5	6.9

자료 : <http://www.oecd.org/dac/aidstatistics/49154108.pdf>; <http://stats.oecd.org/qwids>.

<표 10>을 통해 2010년 일본의 농림수산분야 실적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총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기술협력이 21%이며, 유상협력은 약 2.6%를 지원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증여비율이 낮고 엔화차관이 높은 지원 실적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고려와 개선의 움직임은 있다. 신ODA대가를 통해 사회 인프라, 농업, 교육 등의 원조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엔화차관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증여나 조건이 완화한 소프트론(soft loan)²⁷⁾이 유연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10 2010년 농림수산업 분야 ODA

단위: 억 엔, %

구분			건수	총액	%
농림수산업	무상원조	농업일반(General Agriculture)	2	23.89	－
		농업기술(Agriculture Engineering)	2	13.17	－
		식량증산 지원(Assistance to Increase Food Production)	9	27.75	－
		산림보전(Forestry Prevention)	2	8.34	－
		어업(Fisheries)	3	26.39	－
		전체	18	99.54	11.0 ¹⁾
	기술협력	농업(Agriculture)	107	53.09	14
		축산(Animal Industry)	14	5.56	1
		임업(Forestry)	31	15.67	4
		어업(Fisheries)	21	8.28	2
		전체	173	82.6	21 ²⁾
	유상원조	농업(Agriculture)	1	50	0.9
		임업(Forestry)	1	88	1.6
		어업(Fisheries)	－	－	－
		농장(Farming)	－	－	－
		전체	2	138	2.6 ³⁾

주 1): 무상원조 전체 총액 대비 농림수산업 분야 비율.

2): 기술협력 전체 총액 대비 농림수산업 분야 비율.

3): 유상원조 전체 총액 대비 농림수산업 분야 비율.

자료 : JICA, 2011 재구성.

일본은 농업분야에 전통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지원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상위공여국으로 꼽힌다. 농림수산업 분야의 주요 협력대상국은 ODA전체 실적 규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19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최대 수원국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한국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2위 수혜국으로 꼽힌다. 필리핀과 인도, 태국도 꾸준히 5위안에 드는 중점 수혜국으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보다는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며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리적 접근성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실리주의적 지원이 었보인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특징적이다.

27) 연화차관(軟貨借款).

표 11 일본 농림수산업 분야 ODA 10대 수원국

단위: 약정액 기준, 백만 달러

	1965-1969년	1970-1979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10년
1 인도네시아	334.6	인도네시아	1706.12	인도네시아	4507.2
2 한국	274.51	한국	964.46	중국	10392.02
3 인도	255.11	필리핀	699.36	인도네시아	10114.18
4 필리핀	204.31	방글라데시	537.99	필리핀	5347.13
5 파키스탄	145.44	미얀마	522.45	중국	6297
6 타이완	76.96	태국	502.61	인도	5302.43
7 미얀마	53.8	인도	468.46	인도	3933.25
8 태국	31.4	이집트	409.62	인도네시아	3365.56
9 브라질	19.13	파키스탄	400.14	태국	5209.75
10 스리랑카	17.78	말레이시아	328.56	인도네시아	3365.56

자료: <http://stats.oecd.org> 필자 재정리.

4.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 농업분야 사례를 통한 과제 도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절대적 공여국으로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경제변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열린 국익’이라는 뚜렷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여타 공여국과 구별되는 일본만의 개발협력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프라 중심, 아시아집중 지원의 기조 하에 실리주의외교에 입각한 개발협력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전략의 도구로서 수출촉진, 개발수입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정치·경제적 원조방향은 DAC가입 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양적 그리고 질적 제고를 통해 개도국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체 ODA예산 중 7.8%(2010년 기준)를 지원하고 있으며, ODA예산을 하향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ODA는 여전히 7~8%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 하에서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추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야별 지원규모 순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2>와 같이 나타난다. 지원 분야의 변화추이를 통해 일본 농림수산업 분야 ODA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OECD/DAC의 분류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업 분야 ODA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프로그램지원에 해당하는 긴급식량원조와

식량원조/식량안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분야이며, 긴급식량원조는 2005년 2,616백만 달러에서 2009년 3,225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소 하락하여 2,62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지원 규모가 큰 분야는 다부문의 농촌개발을 꼽을 수 있으며, 이어서 농업 개발과 농업용수자원의 지원이 두드러진다. 인프라 중심의 일본 ODA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정우진(2010)의 연구에서 2002년~2007년 일본은 농업용수자원에서의 지원규모가 가장 큰 1위국으로 절대적 공여국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공여비중이 큰 상대적 공여 국가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의 ODA규모가 적잖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업에서의 지원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ODA는 지구촌 빈곤의 문제를 깊이 고려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이에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구촌 빈곤감소를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12 일본 JICA의 농업분야 실적(CRS코드별)

단위: 약정액 기준, 백만 달러 현지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긴급식량 원조	2616.2	긴급 식량원조	2233.6	긴급 식량원조	2065.1	긴급 식량원조	3739.1	긴급 식량원조	3225.0	농촌개발	2967.6
2	식량원조/ 식량안보프 로그램	1615.2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1538.2	농촌개발	1774.0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1778.9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208.1	긴급 식량원조	2626.4
3	농촌개발	1134.0	농촌개발	1528.3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1431.4	농촌개발	1544.9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2160.4	농업개발	2470.7
4	농업개발	908.8	농업용수 자원	780.0	농업용수 자원	1090.3	농업용수 자원	1349.2	농촌개발	1967.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844.0
5	농업용 수자원	823.4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759.4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029.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143.1	농업개발	1690.9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1657.8
6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777.6	농업개발	729.7	농업개발	973.8	농업개발	867.1	농업용수 자원	895.1	농업용수 자원	1164.3
7	임업개발	484.7	농업연구	463.6	농업연구	755.8	농업연구	779.2	농업연구	478.6	임업정책/ 행정/관리	800.3
8	농업연구	338.7	농업지도	447.1	임업개발	540.0	농업관련 기자재	453.8	식량생산	437.4	농업연구	602.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332.5	임업개발	362.6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401.3	식량생산	432.2	임업정책/ 행정/관리	350.1	경제작물/ 수출작물	340.3
10	식량생산	224.6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204.5	농업금융 서비스	383.5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396.9	농지개발	340.4	식량생산	285.1
11	농지개발	174.3	식량생산	202.6	경제작물/ 수출작물	282.7	임업정책/ 행정/관리	361.2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305.0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283.7
12	농업관련 서비스	163.1	임업정책/ 행정/관리	188.3	임업정책/ 행정/관리	194.2	임업개발	343.0	농업금융 서비스	265.2	농업관련 서비스	213.5
13	임업정책/ 행정/관리	158.2	농지개발	182.5	농지제도 개혁	177.1	경제작물/ 수출작물	250.3	어업개발	261.7	어업개발	201.7
14	어업정책/ 행정/관리	128.3	축산	170.6	식량생산	172.2	어업개발	199.2	농업관련 서비스	257.5	농업금융 서비스	156.7
15	축산	120.6	경제작물/ 수출작물	136.4	농업관련 기자재	146.2	농지개발	192.0	임업개발	214.5	임업개발	140.2

또한 체계와 제도의 측면에서 일본의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신JICA로 일원화(유·무상 통합)됨에 따라 정책일관성 향상과 개발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다양한 부처의 이익을 내세워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체계개선에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처의 분야별 개발경험을 존중하고 개발협력시행기관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는 점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처 간 분산시행의 개선안을 모색하는데 충분히 고려할 만한 교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역량강화의 실천적 성과를 보여준 ODA TF 활용은 현장화의 도구로써 협력대상국에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지 ODA TF팀을 통한 CAP의 정책수렴과정은 국제사회의 ODA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의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2003년 실시된 DAC의 동료평가에서 제기된 개발협력 인력강화에 따른 현장에의 권한 분산, 현장의 자원, 전략의 적극 이용에 대한 권고사항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단, 현장화의 기본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긴밀한 정책협의를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분야별 상주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전문가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외교공관 및 KOICA 현지사무소 등의 현장협의체를 활용하여 현장중심,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철구, 홍진이. 2009. 일본 국제원조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행정논총 제47권 3호.
권 올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혜옥. 2010. “독일과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유럽지역전공, 연세대학교.
정상희 외. 2011. 『선진 원조 집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별 비교』. 한국국제협력단.
정우진. 2010.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
한송이 외. 2009. 『타 원조기관의 ODA평가제도』. 한국국제협력단.

Carol Lancaster. 2010. Foreign Aid

Hook, Steven W. Perter J. Schraeder, and Bruce Taylor.(1998). "Clarifying the Foreign Aid Puzzle: A Comparison of American, Japanese, French, and Swedish Aid Flows", 『World Politics』 50:294~323.

JICA. 2011. ODA Evaluation Guideline. JICA.

_____. 2012. New Jica And Project Evaluation. JICA

MOFA. 2011.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4. DAC Peer Reveiw. OECD.

참고사이트

<http://www.jica.go.jp>

<http://www.maff.go.jp>

<http://www.oecd.org>

미국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

이 대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일반 연왕 및 추진 체계

미국은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통해 수립된 목표는 미국의 안전보장, 경제적 이익확보, 인도적 차원의 개도국 경제 지원으로 설정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2차 대전으로 발생한 유럽지역 피해복구 및 빈곤감소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혜택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의 USAID¹⁾의 협력은 기술 및 자본 지원으로 식량, 영양, 인구조절, 보건, 교육 및 인적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80년대에는 시장 중심의 무역의 활성화를 주요 개발협력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저개발국 무역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였다. 90년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저개발국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단일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여러 사업을 묶어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형식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2000년대부터는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으로 이 두 나라의

* 본 내용은 현재 본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전략 분석」 과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ldaeseob@krei.re.kr, 02-3299-4169).

1)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정부 수립, 인프라 건설, 사회 안정망 구축 등 다양한 국가 재건 사업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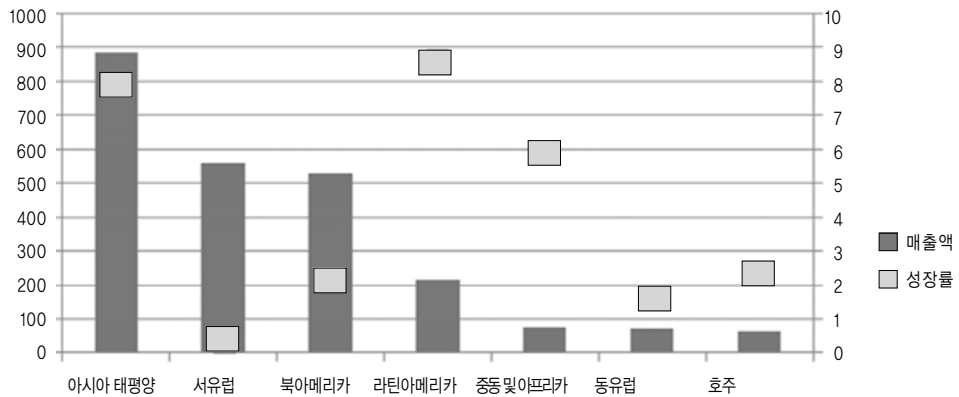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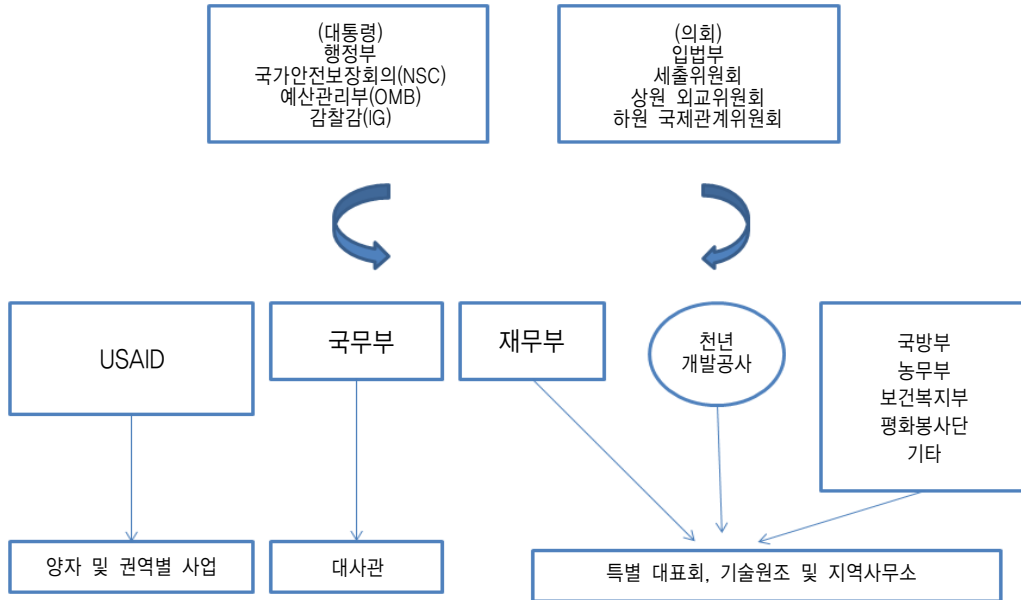
미국 국제개발협력의 거시적 기본 틀을 설정하는 전략으로는 ‘개발을 위한 신탁약(New Compact for Development)’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있다. 특히, USAID는 개발을 위한 신탁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밀레니엄 개발협력 기금(Millennium Challenge Account, MCA)’을 설치하여 이를 통한 개발협력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MCA의 운영을 위해 ‘밀레니엄 개발협력 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가 신설되었다(허장, 2009).

미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은 경제성장, 농업, 무역, 보건, 민주주의 확립, 긴장완화, 인도주의 등에 우선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개발협력전략은 국가안보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테러와 군비확장을 촉진시켜 결국에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실용적 논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논리를 배경으로 부패와 빈곤에 빠진 저개발국에 대한 미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저개발국이 테러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개발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빈곤탈피라는 이념적 측면과 미국 외교안보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관부처는 국제개발처(USAID)로 국무부 산하이지만 반독립적인 기관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원을 운영한다. USAID의 역할은 농업, 보건, 아동구호, 교육, 환경 등 인간의 기본욕구와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USAID는 국무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ESF)을 안전보장에 대한 관점에서 개도국의 정치·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한다.

미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일반적으로 국무부의 대외전략 가이드라인에 따르지만 그 실시체제는 분권화되어있다. 국제개발협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다양하며 각 조직간 수평적, 수직적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중 농무부(USDA)는 총 ODA자금 중 1998년 2.3%, 2002년 5.8%, 그리고 2005년 14%로 급증하였으나, 2009년 농업 및 식량안보에 관한 기관(Feed the Future, FTF)을 창설하여 미국이 지원하는 국제

그림 1 미국 개발협력 추진체계



자료: OECD/DAC, Peer review of the United States, 2006 재인용.

기관·기구의 사업들을 새로운 틀 속에서 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FTF는 세계 기아와 빈곤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규모가 큰 개발협력사업 추진과 지속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세계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농업부문의 포괄적 성장 가속화와 영양상태의 개선(특히 여성과 아동)을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GNI대비 개발협력 예산은 2008년 0.19%에서 2010년 0.21%로 증가하였다. 이는 OECD/DAC 회원국 평균인 0.31%보다 적지만 규모면에서는 334억 달러(2010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ODA 자금이다. 2010년 미국은 개발협력의 총 예산 중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18%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미국 개발협력 통계(2006-2010)

단위: 백만 달러, 약정액 기준

부문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1000: 총액		24287.4	24724.2	31266.7	29206.4	33382.2
450: 부문별 총액		16860.5	18620.5	23264.5	21225.4	24066.0
100: I. 사회인프라&서비스 총액		10591.6	12707.6	16014.0	15367.3	16082.3
200: II. 경제인프라&서비스 총액		3261.1	3121.8	4482.0	2680.5	3431.9
300: III. 생산부문 총액		1258.9	1631.7	1940.5	1817.8	2381.9
310: III.1. 농림수산업		624.3	1223.0	1606.2	1487.7	2083.6
311: III.1.a. 농업		600.0	1214.0	1495.2	1396.8	2063.5
312: III.1.b. 임업		19.8	0.7	2.1	6.4	1.3
313: III.1.c. 어업		4.5	8.2	108.9	84.6	18.8
320: III.2. 광공업 및 건설 총액		317.2	220.2	145.3	110.7	138.4
321: III.2.a. 산업		73.6	215.6	121.0	107.4	137.6
331: III.3.a. 무역정책&규제		316.4	187.5	186.2	153.9	159.7
332: III.3.b. 관광		1.0	1.0	2.6	65.4	0.2
400: IV. 다부문/크로스커팅 총액		1748.9	1159.5	828.0	1359.7	2169.8
410: IV.1. 일반환경보호		240.2	320.2	317.8	278.2	902.9
430: IV.2. 기타 다부문		1508.7	839.3	510.2	1081.5	1266.9
43010: 다부문		1340.6	404.5	478.3	1077.0	1206.3
43030: 도시개발 및 관리		1.7	1.5	..	0.0	0.2
43040: 농촌개발		33.5	75.6	1.1	0.5	1.8
43050: 비농업개발		..	..	..	..	..
43081: 다부문 교육훈련		18.4	308.6	7.8	0.0	0.0
43082: 연구/과학기관		114.5	49.1	23.0	3.9	58.5
500: VI. 프로그램원조		1312.0	930.6	1096.9	926.2	681.5
600: VII. 부채와 관련된 지원		1686.5	103.6	217.9	176.9	26.9
700: VIII. 인도적 지원		2776.3	3155.8	4418.7	4700.6	5612.2
910: IX. 공여국의 행정비용		1134.8	1394.3	1707.0	1494.3	2162.9
930: XI. 난민에 대한 원조(선진국의 개도국 난민)		516.7	512.7	555.0	675.6	825.4
998: XII. 비특정분야		0.7	6.7	6.9	7.4	7.3

자료: www.oecd.org, ODA 통계, 2012.

미국의 ODA 예산은 266억 달러(88%)가 무상원조로 집행되며, 유상원조는 약 12%가 집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무상원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OECD/DAC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및 인구와 관련된 분야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서비스분야에 분야별 총액의 80%이상 집중 지원되고 있다. 농업·농촌분야의 지원은 생산분야 및 다분야,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분야별 총액의 약 8.7%가 지원되고 있다.

표 2 미국 분야별 개발협력 지원 현황

'10년 분야별 현황	금액	비율	'10년 농림어업 현황	금액	비율
분야별 총액	24065	100.0%	농림수산분야 총액	2083	100.0%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16082	66.83%	농업	2063	99.04%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3431	14.26%	임업	1.2	0.06%
생산분야	2381	9.89%	수산업	18	0.86%
다분야	2169	9.01%			

자료: www.oecd.org, ODA 통계, 2012.

농업·농촌부문은 농업개발과 농업용수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있고,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연구개발, 금융서비스 등의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임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지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농림수산분야 ODA 예산의 약 3%가 지원되고 있다.

표 3 미국의 농림수산업 분야 개발협력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약정액 기준

부문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1000: 총액		24287.4	24724.2	31266.7	29206.4	33382.2
450: 부문별 총액		16860.5	18620.5	23264.5	21225.4	24066.0
300: III. 생산부문 총액		1258.9	1631.7	1940.5	1817.8	2381.9
310: III.1. 농림수산업 총액		624.3	1223.0	1606.2	1487.7	2083.6
311: III.1.a. 농업		600.0	1214.0	1495.2	1396.8	2063.5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69.4	332.4	95.7	189.4	386.0
31120: 농업개발		5.7	263.6	325.5	588.4	1066.0
31130: 농지개발		..	0.0	9.4	..	0.1
31140: 농업용수자원		212.7	67.3	249.9	208.6	257.4
31150: 농업관련 기자재		0.1	5.0	0.5	1.1	0.0
31161: 식량생산		2.2	10.8	274.2	0.5	7.9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2.2	4.0	4.8	7.6	8.9
31163: 축산		0.8	1.0	0.9	1.4	1.5
31164: 농지개혁		..	..	..	21.3	..
31165: 농업개발		151.1	350.2	376.9	277.9	268.8
31166: 농업지도		0.9	1.0	8.5	9.4	0.0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2.9	69.9	8.8	6.9	6.4
31182: 농업연구		42.2	8.7	15.6	4.0	20.0
31191: 농업 관련 서비스		0.4	8.6	104.9	35.1	18.4
31192: 작물보호제, 수확후 보호 및 해충관리		0.3	22.3	10.0	6.1	0.7
31193: 농업 금융 서비스		0.3	59.6	4.0	18.7	19.9
31194: 농업 협동조합		8.8	8.3	2.7	1.0	1.6
31195: 축산 진료		..	1.2	2.8	19.2	0.1
312: III.1.b. 임업		19.8	0.7	2.1	6.4	1.3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4.0	0.6	1.0	5.7	0.6
31220: 임업개발		15.9	0.1	0.5	0.7	0.7
31261: Fuelwood/charcoal		..	..	..	0.0	..
31281: 임업 교육/훈련		..	..	..	..	..
31282: 임업연구		..	..	0.5	..	..
31291: 임업 서비스		..	..	..	..	..
313: III.1.c. 어업		4.5	8.2	108.9	84.6	18.8
31310: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4.0	1.0	0.1	0.1	0.2
31320: 어업개발		0.4	4.1	79.7	0.5	18.7
31381: 어업 교육/훈련		..	..	..	..	..
31382: 어업연구		..	0.0	..	..	..
31391: 어업 서비스		..	3.1	29.1	84.0	..
43040: 농촌개발		33.5	75.6	1.1	0.5	1.8

자료: www.oecd.org, ODA 통계, 2012.

2. 농업·농촌부문 추진 전략

역사적으로 영국, 일본 그리고 최근 중국의 경우가 농업부문의 성장이 산업성장과 경제개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경험을 통해, USAID는 농업·농촌개발이 저개발국의 빈곤 감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통한 최고의 성장 동력이라 인식하고 있다. USAID의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자연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축으로 저개발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USAID의 농업·농촌 관련 국제개발협력 전략은 식량 및 농업개발 정책(Foo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이 2000년대 이전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국의 식량 자립도를 증가시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으로는 1) 농산물 유통, 생산, 무역 등의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증가시키며, 2) 식량안보에 취약한 계층의 소득 및 고용 확대를 통한 식량소비의 촉진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USAID는 농업전략²⁾을 수립하여 새로운 환경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협력의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1) 빈곤과 기아를 감소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2) 생산자를 위한 국제무역의 기회를 확대하며, 3) 선진국과 저개발국사이의 지식 및 기술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훈련, 교육, 지역수준의 기술보급을 활성화하고, 4)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을 촉진하는 것이다.

USAID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 분야는 1) 농산물 시장, 금융, 유통 및 무역의 일련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대상국 농업정책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2) 대상국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3) 대상국 농업 실정에 적합한 진보된 기술 습득 및 적용, 농업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한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4) 대상국 농민과 제조업자를 포함한 민간 기업의 역할 확대와 미국 민간기업의 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5) 대상국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초 식량(주식) 공급을 위해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지원, 식량지원, 농기업 신용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산물 시장 및 무역에 대한 지원은 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작용하는 시장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특작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과 계절 진폭 및 수급의 안정적 조절에 따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식량안보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USAID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구

2) USAID Agriculture Strategy: Linking producers to markets.

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조직의 역량을 배양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 공공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식품시장의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식량안보 강화 및 영양 개선분야는 FTF³⁾를 제외하고 논의하기는 어려운데, FTF는 2009년 이탈리아 라퀼라 G8 정상회의에서 세계 식량위기에 대해 대규모 예산과 더불어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농업개발과 식량안보에 3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타국은 185억 달러 지원을 약속(총 220억 달러)하면서 창설된 국제기관이다.

FTF의 첫 번째 목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업부문의 포괄적 성장 가속화로 1)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2) 시장 및 유통과 무역과 관련된 정책, 인프라,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으로 시장과 유통을 확대하며, 3) 농촌 소득원의 다양화 및 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과 소농을 대상으로 지역별 식량지원을 확대하여 취약한 농촌지역의 회복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또한 두 번째 목표인 영양상태 개선은 공동체 단위 사업을 통한 저영양 상태 예방, 섭취하는 음식의 질 개선 및 다양화, 공동체 단위 사업과 연계된 보건체계를 통하여 영양 서비스 제공방식의 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FTF의 중점 지원대상국가(Focus Countries)은 총 20개 국가로 아프리카 12개국⁴⁾, 아시아 4개국⁵⁾, 중남미 4개국⁶⁾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기준으로는 지원의 필요성, 파트너십 수립 가능성, 농업이 선도하는 성장 잠재력, 권역 내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성장과 진보를 위한 자원 동원력을 검토한다. 특히, 파트너십 수립 가능성은 정치적 안정성, 거버넌스의 질, 전반적인 경제정책 환경,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전략 유무 등을 고려하였고, 기타 농촌빈곤 정도, 농업생산성 및 시장개발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기술보급 분야는 전 세계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저개발국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인적 개발, 정책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장려하여 저개발국에 혁신 기술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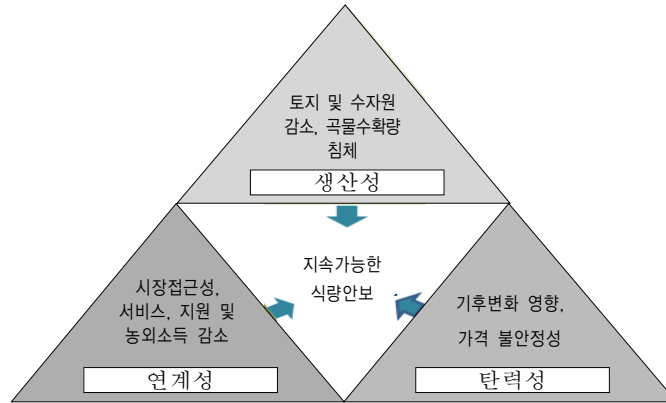
3) 미국 내 관련기관들은 세계기아식량안보(Global Hunger and Food Security, GHFS) 조정관이 정책 및 예산을 조정하고, 2명의 부조정관(개발담당, 외교담당)과 국가별 FTF 조정관은 주재국 대사가 지명함.

4)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리베리아, 말리,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5)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타지키스탄.

6)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림 2 식량안보를 위한 개발협력 추진 전략도



한편, USAID의 투자 전략은 기초투자(Foundational Investments)와 핵심투자(Core Investments)로 구분하여, 기초투자는 국가투자계획(Country Investment Plan, CIP) 수립을 위한 기술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 등을 연계한 정책개혁 및 역량제고를 병행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투자(Core Investments) 단계는 FTF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개발 및 영양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2단계는 수립된 CIP의 기술적 수준 등에 대한 관련 당사자 및 대상국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 규모를 검토하여 핵심투자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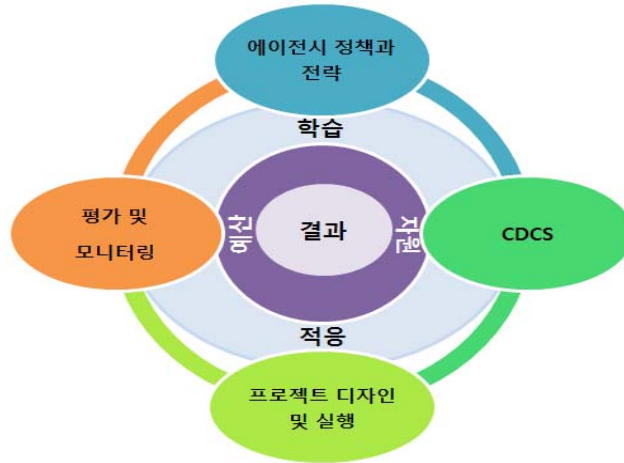
3. 추진 방식 및 절차

USAID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형성의 전제조건은 사업에 적합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국별 개발협력 전략 및 FTF 추진 전략을 포함한 USAID 정책 체계의 7대 중점개발목표⁷⁾와 연계되는 사업 시행이 전제조건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USAID의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은 전제조건에 부합하는지, 대상국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과 일치하는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추진되는 사업의 계획 및 내용을 협의하는 절차인 프로젝트 디자인 단계와 실질적인 사업의 실행, 그리고 사업관리와 사업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

7) 식량안보강화, 글로벌 보건체계 구축, 기후변화 영향감소 및 녹색성장 촉진,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민주주의 안정화, 인도적 지원 제공, 분쟁 예방 등.

그림 3 개발협력 사업 추진도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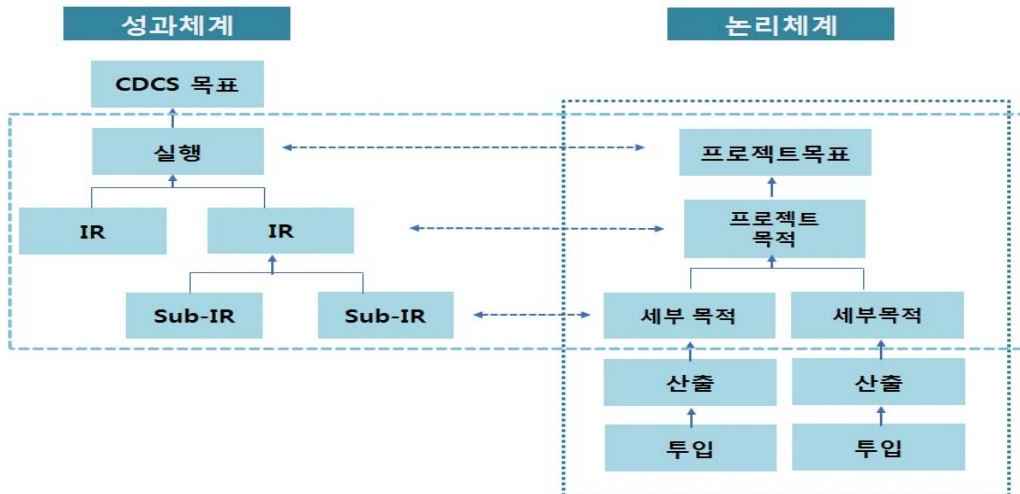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USAID의 개발협력 사업은 세 단계로 형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사업 구상, 두 번째는 분석, 세 번째는 승인 단계이다. 구상단계에서는 사업설계팀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문제를 파악, 사업 논리구조(Logical Framework)의 초안을 작성한다.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분석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명시한다. 또한 공적재정위험관리평가를 실행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사업개요서(Concept Paper)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개요서는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로드맵(Road-map)을 제시하여야 하며, 소요예산 추정치와 소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개요서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은 문제제기를 통한 명확한 사업의 필요성 및 주요 이슈, 중장기 대상국 국가개발전략 및 FTF 전략, 그리고 기타 전략과의 연계성,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이슈 도출에 따른 필요한 분석의 종류, 모니터링, 평가방법 및 과거의 교훈, 지속가능성 분석 초안, 이해 관계자 명시 및 역할 정립, 필요한 예산 규모, 사업 실행 메커니즘, 사업설계팀이 선정을 통한 단계별 사업설계에 필요한 역할 및 예산 등이다. 사업개요서가 제출되면 프로젝트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위한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작성하여 미팅을 개최하며 사업설계에 필요한 분석의 종류 결정, 소요 예산 및 기간에 대한 협의, 사업 목적 명시, 주요 이슈검토, 다년도 사업 예산 등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설계팀은 개선사항을 명시한 승인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8) 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그림 4 그림 4 USAID 사업발굴을 위한 논리구조



분석 단계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세 가지의 의무적인 분석(젠더, 환경,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경제·재무 분석(비용편익분석, 수혜자분석, 재정분석, 경제적 분석, 위험관리분석), 사회적 건전성 분석, 청소년 분석, 제도적 분석, 장애인 분석, 기후변화대응 체계 분석, 분쟁 분석, 정치경제적 분석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업계획팀은 분석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인 사업심사보고서(Project Appraisal Document, PAD)를 작성하여 사업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심사보고서는 사업실행, 적용, 평가에 대한 기본구상(Baseline)으로 20-25페이지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PAD는 다양한 분석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현지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책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PAD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1) 중장기 국가개발전략과의 연계성 및 결과 틀(Results Framework), 2) 기타 공여국 사업과의 조화성 및 대상국과의 관계, 3) 주요 사업 내용, 4) 실행 계획, 5) 소요 예산 및 자금 조달 계획 요약, 6)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과 학습적 접근 방법, 7) 분석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찰, 8) 실행 조건, 계약 조건 및 필요한 조치 사항, 그리고 9)부속서 등이다. 부속서는 구체적인 논리구조 체계, 주요 사업내용의 추가 설명, 세부 예산서, 세부 실행계획 등의 세부적인 추가 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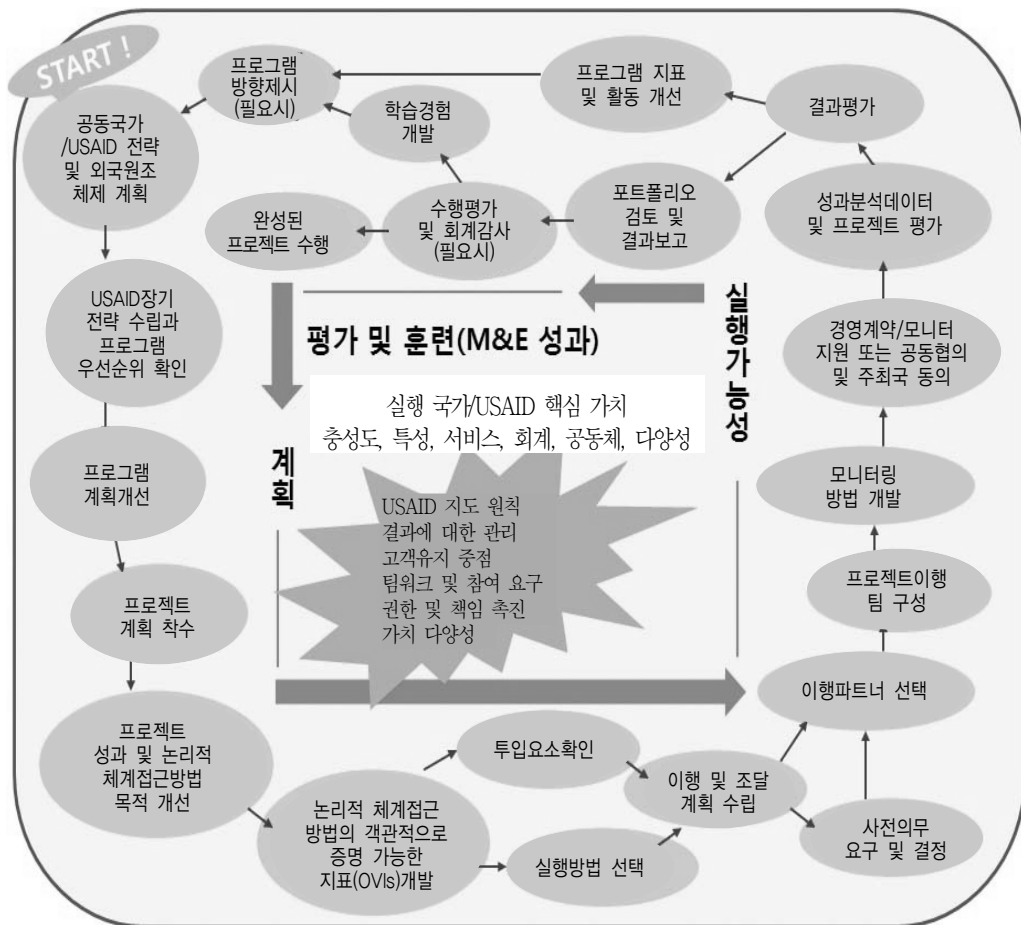
사업심사보고서는 각 관계 부서에 배포되고 관계자가 참여하여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이슈페이퍼 검토 시 합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와 성공 가능성, 핵심 요소 명시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한다. 사업심사보고서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

여 수정·보완된 후 승인 위원회로 제출된다.

마지막으로 승인 단계에서는 협력사업 추진을 승인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예산, 사업의 타당성, 미국 국제협력정책과의 연계성, 사업 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승인위원회는 구체적인 소요기간, 대상국의 합의가 예상되는 기초적인 계약 조건, 총 예산 한도 등을 승인한다. USAID의 모든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 규모, 종류 및 내용에 상관없이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상국의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은 승인위원회로부터 대상국시스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평가

그림 5 USAID 개발협력 사업 실행 및 평가 관리 시스템



USAID 국제협력사업의 평가 목적은 1) 효과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측정하여 대상국 관계자에 공개하여 양국 간 신뢰성 강화와, 2) 모든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 적용하기 위함이다.

평가 실행은 1) 평가 계획이 협력사업 형성과정에서 포함되어, 2) 객관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3)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4) 예산, 사업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5) 대상지역의 역량을 활용, 6)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평가 절차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표의 문서화, 성별 자료, 대상국 중앙정부 참여 독려, 투입, 산출, 성과, 영향, 예산 집행 및 구조, 사실에 입각한 증거자료 수집, 사업 계획서 비교분석, 평가를 위한 가정 설정, 추천 및 개선 내용, 환류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OECD/DAC. 2006. Peer review of the United States, OECD/DAC.
 . 2011. Peer review of the United States, OECD/DAC.
- USAID, 1982. “Foo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USAID Policy Paper, USAID.
 , 2004. “USAID Agriculture Strategy: Linking Producers to Markets”, USAID Strategy Paper, USAID.
 , 2010. “USAID Policy Framework 2011-2015”, United State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2011. “Project Design Guidance”. United State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2011. “USAID Evaluation Policy”. United State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2011.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Guidance”. United State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참고사이트

<http://www.usaid.gov>
<http://www.feedthefuture.org>
<http://www.oecd.org>

● WORLD AGRICULTURE

세계 식품산업동향

외식산업

세계 외식산업의 분야별 동향 | 반현정

세계 외식산업의 현황과 특징 | 최지현

세계 외식산업의 전망 | 이동소

주요국의 외식산업 동향 | 차원규

세계 외식산업의 분야별 동향*

반 현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외식프랜차이즈⁹⁾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이후 2009년의 시장침체기를 지나 2010년에는 상당수의 거대 체인점들의 성장률이 회복되었다.

표 1 세계 프랜차이즈 매출액 순위, 2010

사업체	매출액 (백만달러)	점포 수(개)	전년대비 성장률(%)	
			매출액	점포 수
맥도날드(McDonald's Corp)	77,380.0	36,318	4.6	2.5
얌(Yum! Brands Inc)	37,731.1	40,009	5.0	1.4
버거킹(Burger King Holdings Inc)	15,263.6	12,410	1.3	2.4
스타벅스(Starbucks Corp)	14,928.5	17,520	7.3	1.5
닥터스(Doctor's Associates Inc)	14,727.4	34,552	7.9	6.6
세븐앤아이(Seven & I Holdings Co Ltd)	13,730.2	39,929	3.8	8.8
웬디스/알비스(Wendy's/Arby's Group)	11,925.5	10,039	-2.8	-1.4
던킨(Dunkin' Brands Inc)	7,433.3	17,040	3.4	6.9

* (ban0530@krei.re.kr, 02-3299-4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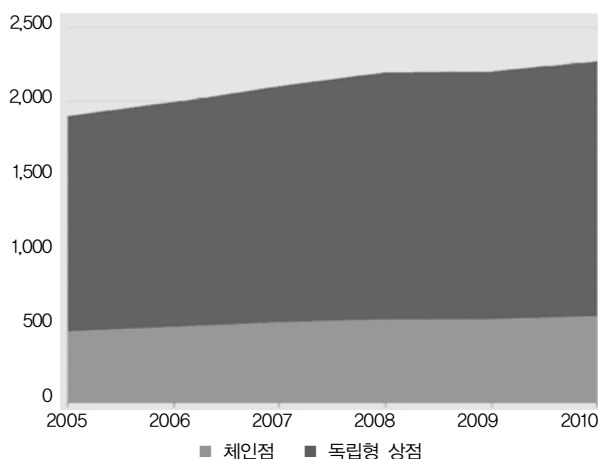
사업체	매출액 (백만달러)	점포 수(개)	전년대비 성장률(%)	
			매출액	점포 수
다든(Darden Restaurants Inc)	7,241.5	1,865	5.0	4.1
다인이쿼티(DineEquity Inc)	7,151.5	3,439	0.2	4.1
도미노피자(Domino's Pizza Inc)	6,466.3	9,385	11.0	4.3
팀 호튼스(Tim Horton's Inc)	5,601.9	3,684	5.9	2.4
헤밀리마트(Family Mart Co Ltd)	4,423.7	15,710	1.7	7.4
오에스아이(OSI Restaurant Partners Inc)	4,128.9	1,439	-0.7	-2.6
브링커(Brnker International Inc)	3,908.3	1,489	-12.6	-9.2
로슨(Lawson Inc)	3,606.1	10,283	0.4	13.6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10년 기준 독립형 상점의 매출액은 세계 외식산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와 같은 선진시장에서 독립형 상점이 체인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특히, 풀 서비스 레스토랑과 카페/바와 같은 부문의 경우 메뉴와 인테리어 등이 일률적인 브랜드 상점보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메뉴로 독립형 상점이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패스트푸드 부문에서의 외식문화도 풀 서비스 레스토랑 형태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고, 가관점/키오스크 형태의 상점이 가격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프랜차이즈 부문의 다양한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 1 세계 외식산업의 체인점과 독립형 상점의 시장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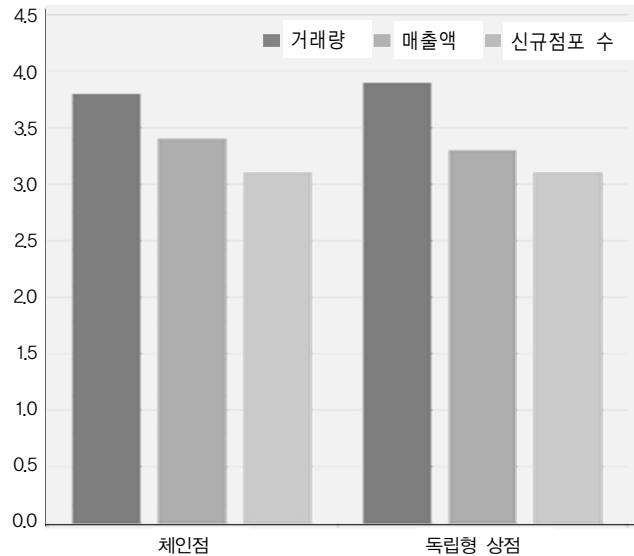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2 체인점과 독립형 상점의 매출액, 거래량, 점포수 성장률,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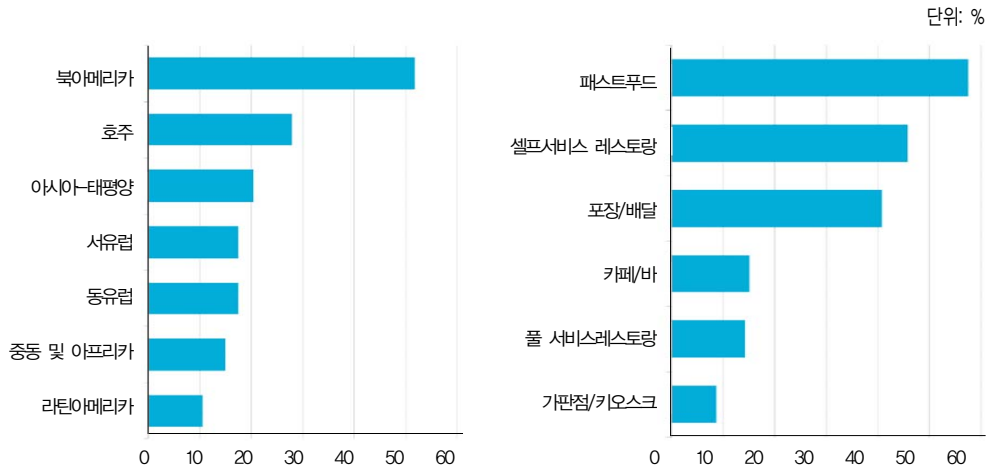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08년과 2009년의 시장침체기에는 프랜차이즈 형태 체인점의 열세와 독립형 상점의 우세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2010년에는 두 부문의 거래량, 신규점포수, 매출액이 성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체인점은 2010년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독립형 상점은 브라질 및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출이 증가하였고 서유럽, 동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매출이 감소하였다. 체인점과 독립형 상점 모두에서 거래량 증가율이 매출성장율과 신규점포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저소득시장에서의 거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선진시장에서는 비용 대비 가치가 높은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2010년 기준 매출액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북아메리카가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인 우세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호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를 통한 매출액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패스트푸드 계열의 프랜차이즈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아 패스트푸드가 프랜차이즈 형태 외식산업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는 지역별로는 북미에서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프랜차이즈 지역별, 업종별 매출액 비중, 2010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신흥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미국은 전 세계 체인점 매출의 42%를 차지하였고,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을 합치면 프랜차이즈 총 매출의 70%를 점유하는데 이는 시간에 쫓기는 소비자들이 편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하강과 회복과정은 체인점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선진시장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체는 일본과 미국 등 지역의 시장점유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감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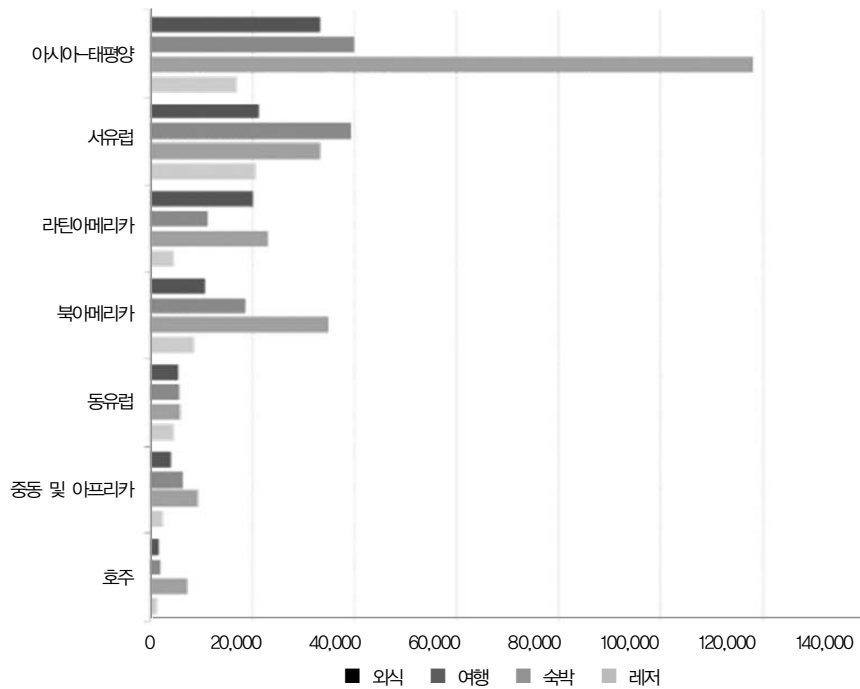
2. 세미 캡티브(Semi-Captive) 시장

외식산업을 점포의 입지(location) 형태별로 전통적인 장소(Traditional location)와 비전통적인 장소(Non-traditional location)로 구분가능 하며, 특히 숙박시설, 레저시설, 쇼핑시설 등의 내부에 입점하여 내외의 고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세미 캡티브’ 형태의 외식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기준 지역별 세미 캡티브 시장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서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숙박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와 여행부문이 모든 지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부문은 신흥시장 내 쇼핑몰 개발과 선진시장에서의 편의점

팽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반면, 여행부문은 신흥시장에서의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가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4 세미 캡티브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단위: 천 달러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지역별로 세미 캡티브 시장이 외식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동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이 각각 44.0%, 37.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미 캡티브 시장 중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음식점 신설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체인점 형태로 외식업체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쇼 핑몰 건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표 2 세미 캡티브 부문의 지역별 매출 비중, 2010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유럽	북아메리카
매출 비중(%)	44.0	37.3	25.6	23.7	21.7	15.1

자료: Consumer global foodservice overview, 2011,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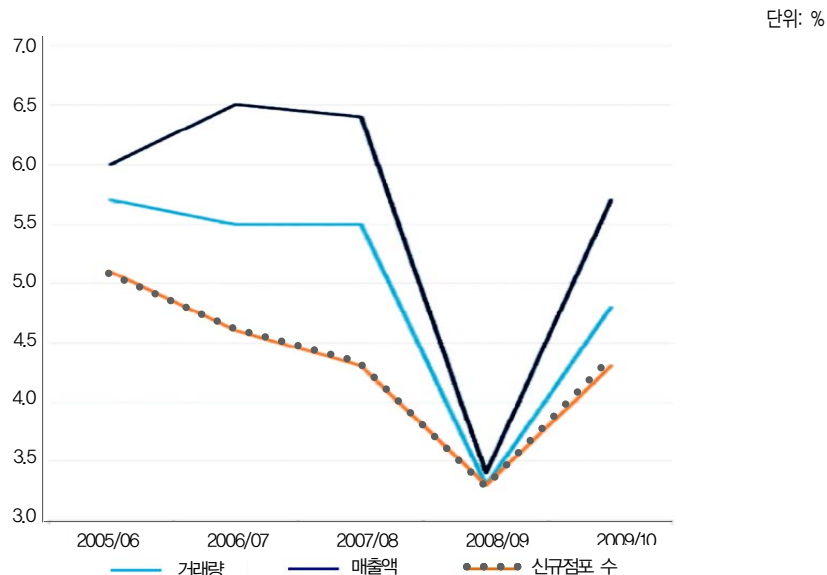
세미 캡티브 시장은 2010년~2015년 기간에 모든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여가활동과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부터 세미 캡티브 시장은 단독점포 형태의 음식점 매출액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2015년 기간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 비중은 외식 부문이 가장 높고, 여행, 숙박, 레저 순으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부문은 2010년~2015년 기간에 연평균 4.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이 건설되면서 외식 부문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패스트푸드 시장

패스트푸드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이후 신흥시장에서의 소득 향상과 고가격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패스트푸드 시장은 2009년에 비해 매출액은 약 6%, 거래량은 약 5%, 신규점포수는 약 4.5% 증가하였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는 북미 및 서유럽 등 선진국을

그림 5 패스트푸드 부문 성장 추이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

중심으로 고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과 신흥시장의 소득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기존의 외식업체와 경쟁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패스트푸드 매출액의 70%, 점포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점포의 50%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으나, 점포당 평균 매출액과 거래 당 평균단가는 1.7달러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3 지역별 패스트푸드 부문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 및 거래단가, 2010

	매출액(천 달러)	거래단가(달러)
아시아-태평양	106.4	1.7
호주	667.1	8.6
동유럽	207.0	5.0
라틴아메리카	179.2	4.1
중동 및 아프리카	231.7	2.2
북아메리카	712.6	5.3
서유럽	494.4	8.4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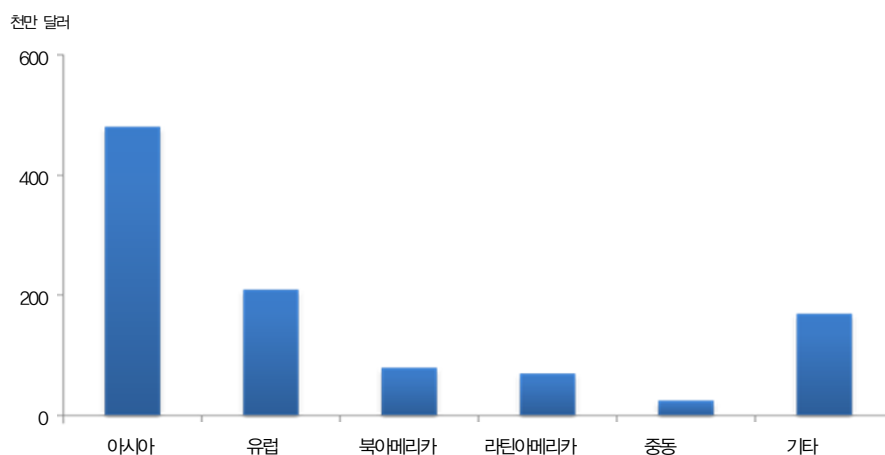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신규 사업 진출자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인도나 중국은 이미 다양한 현지 식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지역의 거래 당 평균단가는 8.4달러,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49만 4,400달러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향후 서유럽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 증가, 매장 시설의 고급화 등 북미 지역과 동일한 트렌드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패스트푸드 시장이 저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동유럽 지역은 패스트푸드 시장이 정체되어 있어 시장진출의 적기로 보인다. 또한 중동 지역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가 높은 20-30대를 주 고객층으로 삼아 패스트푸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2015년에 패스트푸드 시장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7% 성장해 2015년에 2010년 가격 기준으로 매출액이 1,4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세계 패스트푸드 시장의 매출액은 1,760억 달러로 예상된다.

4. 풀 서비스(Full service)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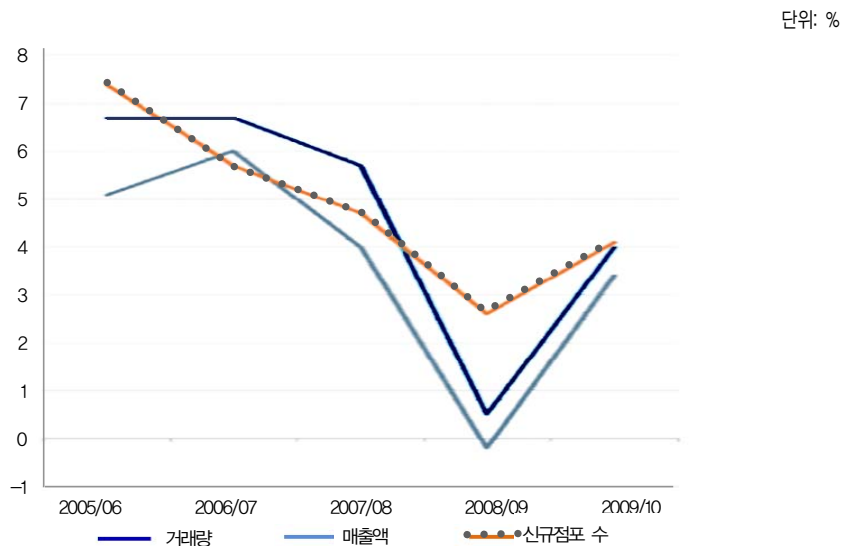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레스토랑을 방문한 고객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레스토랑을 의미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보다 편안하

그림 6 세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7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 성장 추이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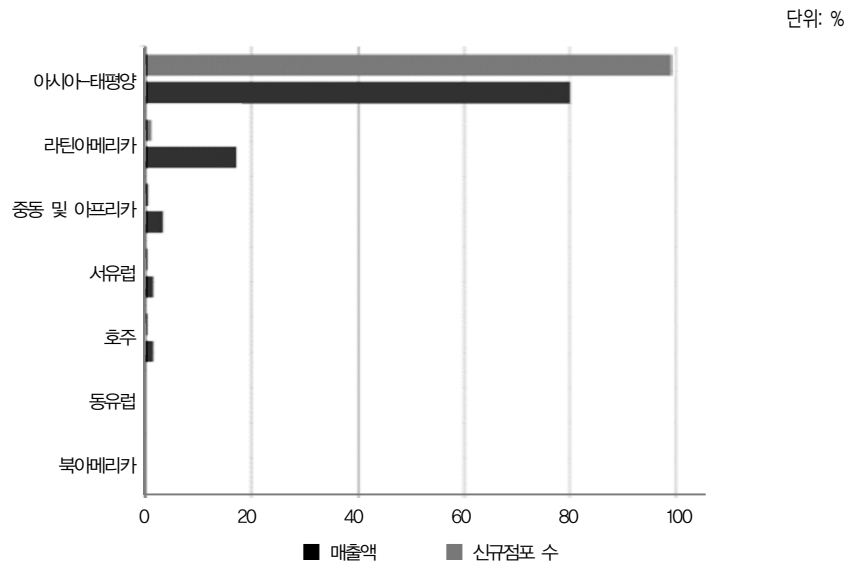
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유로모니터사(Euromonitor社)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매출액은 2009년 대비 약 3%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매출액 증가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서유럽 등 선진국은 풀 서비스 레스토랑 시장이 정체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남미 지역은 외식비 지출 증가로 풀 서비스 레스토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 그림과 같이 매년 거래량 증가율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풀 서비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확대되었으나, 1인당 거래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기준 세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시장 매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중국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각종 모임, 혼인, 장례 및 기타 사회생활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지역은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음식을 제공하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대부분이며,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제3세계 전통음식(Ethnic food)을 제공하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이다.

2005~2010년 기간에 지역별 매출액과 신규점포 증가율을 살펴보면, 북미와 서유럽

그림 8 세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성장률, 2005~2010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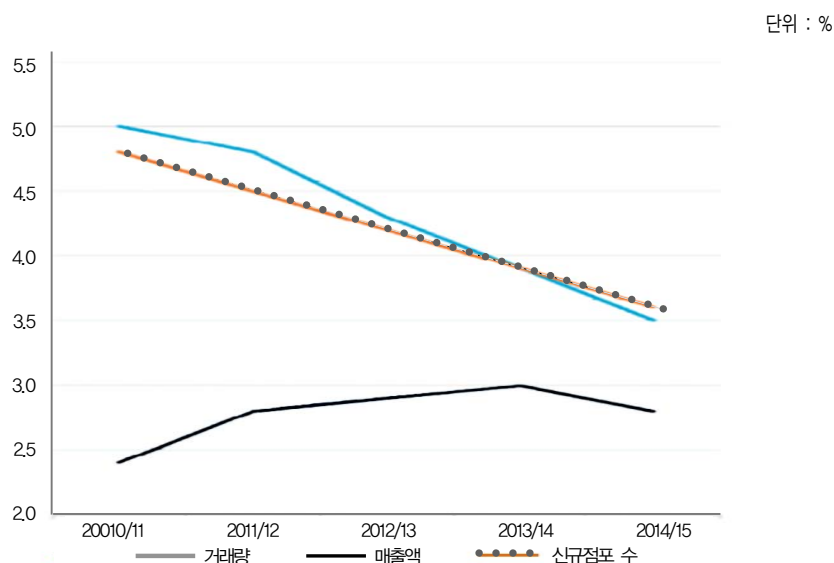
지역은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규점포 수 증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다이닝(Dining) 레스토랑이 증가해 신규점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미는 1인당 소득 증가,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닝 레스토랑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표 4 지역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평균 매출액 및 거래단가, 2010

	점포당 매출액 (천 달러)	거래단가 (달러)
북아메리카	815.8	22.5
서유럽	557.2	33.4
중동 및 아프리카	504.1	17.3
호주	408.4	34.0
라틴아메리카	252.3	14.2
동유럽	190.6	14.1
아시아 태평양	86.4	5.6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9 세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 성장률 전망, 2005~2010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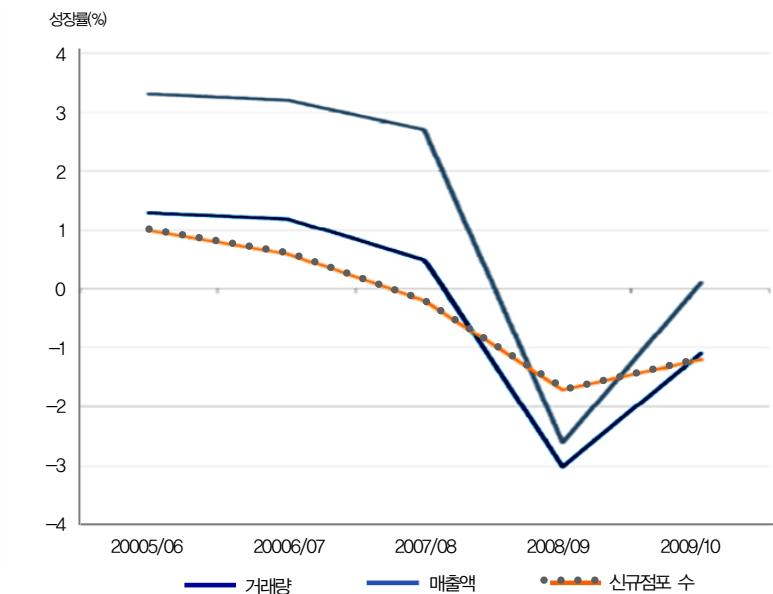
북미 지역은 점포당 매출액이 81만 5,800 달러로 가장 높은 반면, 고객 당 거래단가는 22.5달러로 유럽 지역보다 낮았다. 이는 북미 지역 고객들이 점포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캐주얼다이닝(Casual Dining) 레스토랑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반면, 서유럽 지역은 점포 규모가 작고 거래단가가 높은 소규모 고급 레스토랑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2015년 기간에 폴 서비스 레스토랑 시장을 전망해 보면, 신규점포 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수억 명의 고객이 폴 서비스 레스토랑을 정기적으로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값싼 음식을 제공하는 폴 서비스 레스토랑 점포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 성장세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출액 성장 둔화로 도심 지역에서 도심 외곽지역으로 점포를 이전하는 레스토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및 동유럽 지역은 외식업체간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5. 카페/바

카페/바 부문은 2009년에 큰 폭으로 하강을 겪었으나 2010년도에는 하강세가 약화되었으나 전반적인 회복은 없었다. 그 이유는 커피숍 부문의 활발한 성장과는 달리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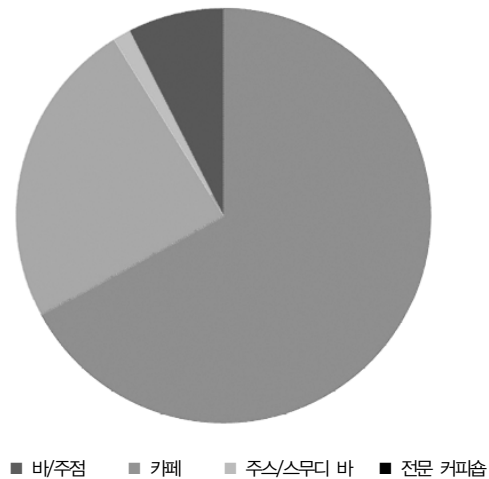
그림 10 카페/바 부문의 성장 추이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페, 바, 주점 부문에서의 실적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신흥시장의 경우 여러 부문이 성장하였으나 커피숍을 제외한 카페, 바, 주점은 성장이 미미했다. 특히, 바/주점 부문에서는 저소득시장조차 일인당 매장 비율이 높아서 대규모 상점 설립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카페/바 부문은 신규점포수 대비 매출액 증가세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고객이 수입산 맥주나 수입산 주류 등 고급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바와 주점은 또한 거래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고객 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메뉴 등에 많은 투자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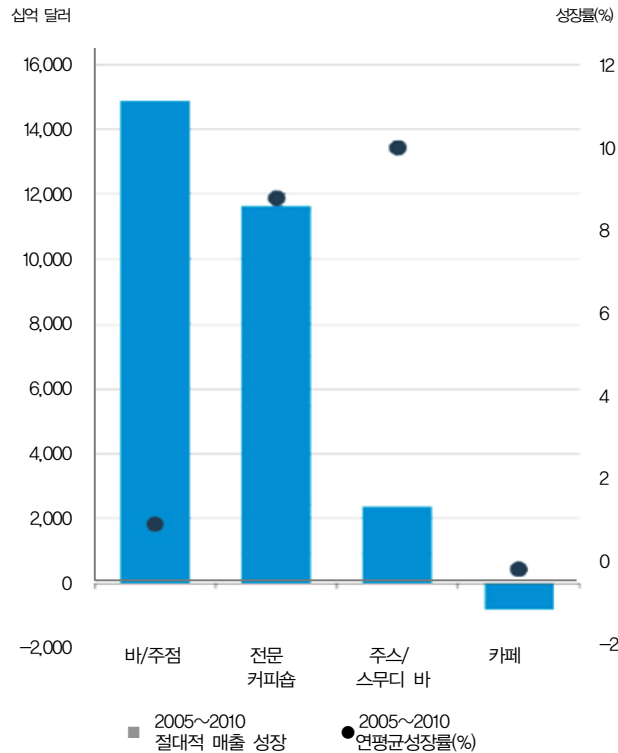
그림 11 세계 음료시장의 부문별 매출액 비중, 2010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카페/바 부문에서 아직 전통적인 카페, 바, 주점이 세계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커피숍은 매출액의 10%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전문커피숍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 커피숍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카페, 바 및 주점영역은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다. 주스/스무디 바 부문은 작은 틈새시장인데 커피숍처럼 인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선진시장에서 많은 체인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커피숍은 세계매출의 10위도 되지 않지만 2005년 이후부터 연평균 9%의 성장을 지속하여 카페, 바, 주점 부문의 성장률을 훨씬 추월하였다. 주스/스무디 바도 인상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따뜻한 기후의 캘리포니아나 호주 등 선진시장에서 건강음료로 인정받아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바와 전통적인 카페는 투자나 혁신활동이 부족하였고 성장이 최저수준이었다. 두 부문에 있어 중요한 지역인 스페인과 그리스 등

그림 12 커피숍, 바/주점 부문의 성장률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서유럽의 계속된 경제 불안으로 성장이 방해 받을 것이나 라틴아메리카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카페/바 부문의 10대 거대 기업 중에 전문 커피숍만이 세계적 존재감이 있다. 가장 큰 체인점 바 중에 5개가 영국에서만 운영 중이며 이자카야(居酒屋)체인점인 우이타미(Uotami)만이 일본에서 운영 중이다. 아직까지 어떠한 체인도 여러 시장에 걸쳐 유명한 바/주점 모델을 설립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친숙한 현지 음식과 현지 음료 문화 때문이다. 반면에, 전문 커피숍은 폭발적인 상점 설립을 추구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해 나갔으며 또한 상당수의 커피 구매가 첫 번째 방문한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구매 형태로 인해 상점 수 증가가 많았다. 전문 커피숍도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하다. 또한 세계적 체인도 점점 현지화된 커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현지 사업자와의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표 5 세계 상위 Top10 체인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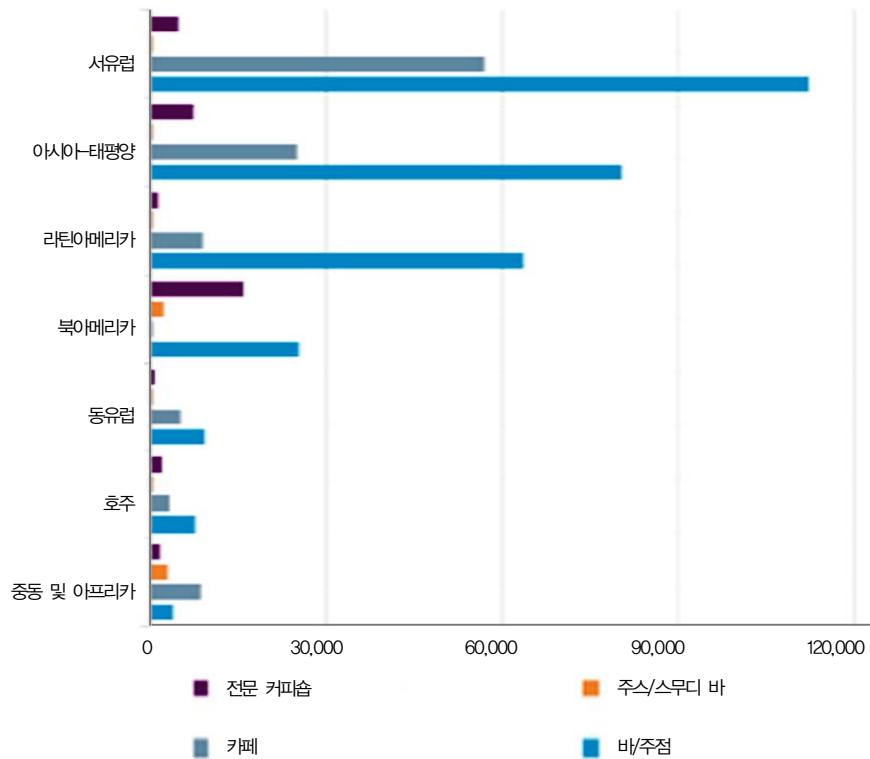
브랜드	판매량(백만 달러)
스타벅스(Starbucks)	14,697.7
JD 웨더스푼(JD Wetherspoon)	1,600.4
엔터프라이즈 인(Enterprise Inns)	1,172.9
코스타 커피(Costa coffee)	1,038.9
맥 카페(McCafe)	1,035.4
도토루 커피숍(Doutor Coffee shop)	984.7
펀치 타번스(Punch Taverns)	868.3
기네스 펍(Guinness Pubs)	792.4
마스턴스(Marston's)	785.8
오토그릴(Autogrill)	781.1
우이타미(Uotami)	750.4
다이낙(Dynac Co)	527.9

자료: Profit Foodservice:Global Industry Guide, 2012, MARKETLINE.

세계 카페/바 부문의 매출은 주로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구상의 바와 카페의 절반이상이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와 한국에 있다. 침체된 경제 여파로 스페인을 포함한 서유럽의 수요가 부정적이 되었으며 2009, 2010년 모두 성장이 급강하였다.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이 북미 수요의 대부분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성업 중인 커피숍 부문이 존재하는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선전하였다. 주스/스무디 바는 원래 선진 시장영역이지만 중동의 이집트 같은 곳에서 저렴하고 신선한 주스를 주스 바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나 서유럽의 경우 매출의 뚜렷한 감소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스페인의 긴축재정 지연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는 100억 달러 정도의 팽창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카페와 바 문화가 정착된 멕시코, 브라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 커피숍과 주스/스무디 바 부문은 예상된 성장이 달성될 것이나 카페/바 부문은 수요가 높은 서유럽 지역의 소비하락으로 성장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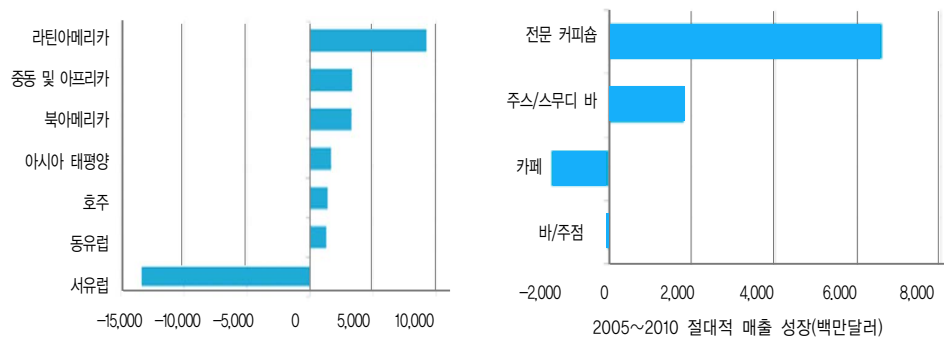
그림 13 카페/바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14 카페/바 부문의 지역별, 업종별 매출액 성장 전망, 201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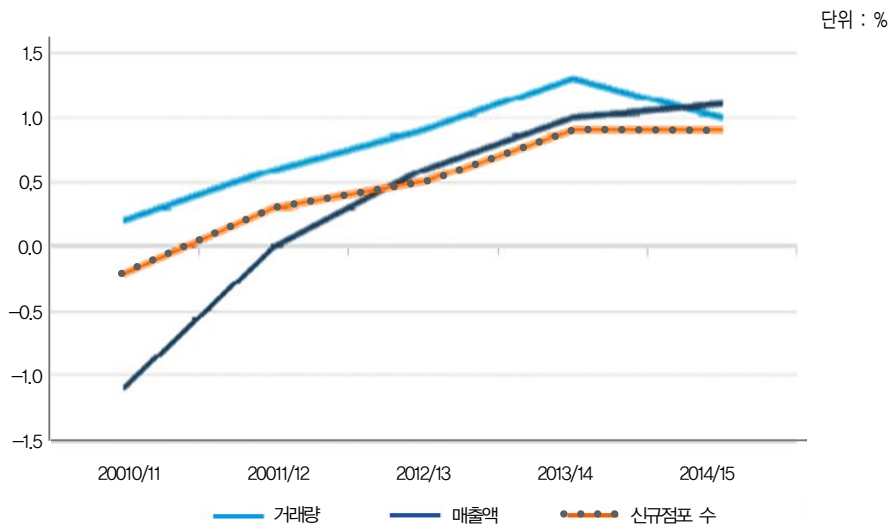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선진 시장의 수요가 시들한 반면 강한 음주 문화가 있는 아시아-태평양과 라틴아메리카 시장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주류 소비패턴이 변화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맥주, 와인과 증류주(Sprit)를 소비한다. 상점 숫자는 안정적이 될 것이나 작고, 격식 없는 상점이 현대적이며 고급적인 상점으로 대체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카페/바 부분의 수요가 높은 서유럽의 경제 붕괴로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역의 미래는 신흥시장이 좌우할 것이며, 선진시장의 운영자들은 수익성과 브랜딩에 필수적인 음료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부분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 세계 카페/바 부분의 성장률 전망, 2010~2015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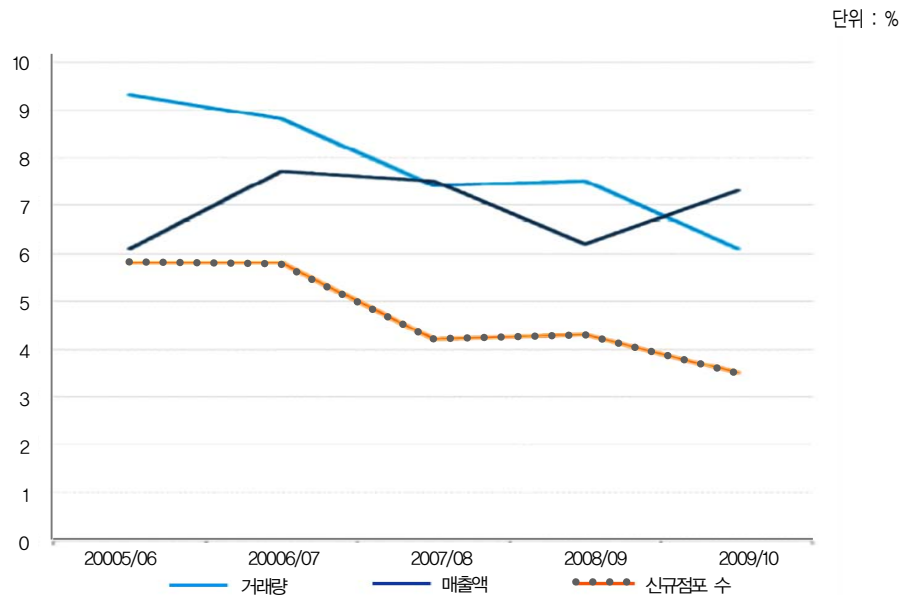
소비자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커피숍 부문에서 시장 세분화가 진행 중이다. 빠르고 가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선택으로부터 더욱 편안하고 수준 높은 분위기로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고급가구를 배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고급화 개념으로 진행 중이다. 커피숍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인도에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카페 커피 데이(Cafe Coffee Day)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단일 농장 커피(single estate coffee)를 판매하는 고급 키오스크 개념을 통합하여 친교의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급성장하고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커피숍 영역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커피와 커피 관련 상점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이런 관점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1,000개가 넘는 맥 카페를 운영 중인 맥도날드가 그러하며 버거킹과 서브웨이는 고급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기존 커피숍 영역도 제품 다양화와 잠재적 기회 제공이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버거킹에서 스타벅스의 시애틀스 베스트 커피를 판매하도록 허용하여 체인점은 믿을 수 있는 고급커피를 제공하고 스타벅스는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게 되었다. 바와 주점 부문은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염가의 현지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독립형 상점들이 다양한 수입품을 판매하는 새롭고 자금력이 풍부한 운영자들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와 서유럽 지역의 바와 주점은 풀 서비스 레스토랑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6. 가판점/키오스크

2010년 가판점/키오스크 매출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증가로 1,030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멕시코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증대로 매출액이 거래량과 상점 성장을 추월하였다.

그림 16 가판점 부문의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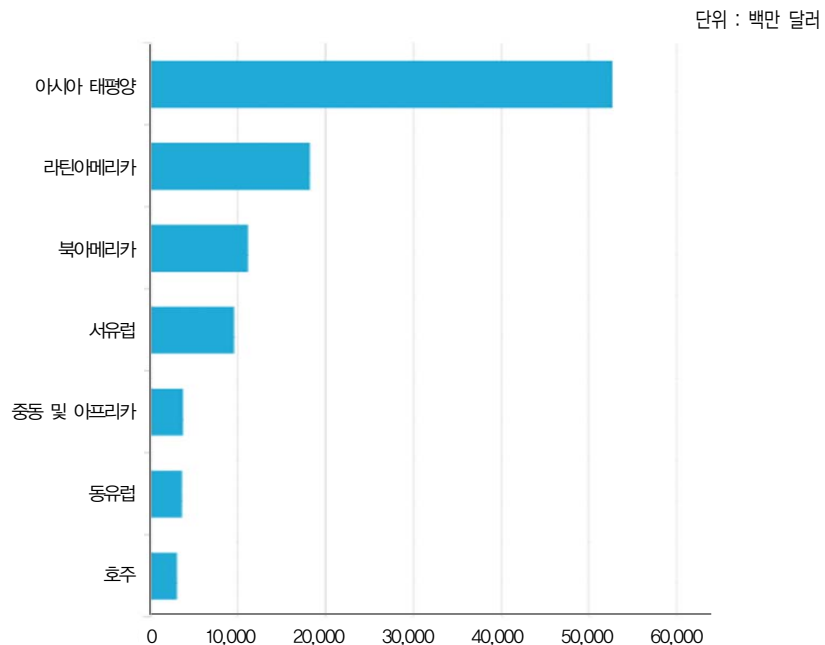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가판점이 도심지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상점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폭증하여 세계 매출이 상승한 반면 저소득 소비자(인도, 동남아시아)의 영향으로 평균 거래단가가 하향되었다. 2005~2010년 기간에 상점 수와 거래량이 꾸준히 성장하였다. 2010년 평균소비는 상향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판점은 외식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판점은 거래량 기준으로 84%, 상점 수 기준으로 67%, 매출액 기준으로 51% 성장하였다. 가판점/키오스크는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높는데 그 이유는 패스트푸드 상점의 한 끼 식사조차 사치인 계층도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상점 수와 거래량 기준으로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불법 영업에 대한 정부의 단속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나 대만 등 고소득 시장인 곳에서는 가판점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발전을 통해 소득 상승이 예상된다.

그림 17 가판점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패스트푸드점과의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가판점/키오스크는 외식분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 수요자에게는 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상점이기 때문이다. 신흥시장에서 가판점/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점과 경쟁하는 최고의 경쟁자이며 맥도날드나 KFC가 대적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빈곤층 수요자에게 접근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 거래단가는 고작 0.5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6 지역별 가판점/키오스크 부문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 및 거래단가, 2010

	매출액(달러)	거래 단가(달러)
북미	253,608	3.2
오스트랄라시아	235,742	5.6
서유럽	141,905	5.5
동유럽	38,404	1.5
라틴 아메리카	24,844	2.3
아시아 태평양	21,697	0.5
중동/아프리카	16,782	1.4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이 영역의 상점 수는 잠재적 고객의 기반을 나타낸다. 가판점/키오스크가 다른 거리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는 영역은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특히 가처분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경우 더욱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7 세계 10대 가판점/키오스크 부문의 시장점유율, 2010(상점 수 기준)

국가	시장점유율(%)
싱가포르	82.7
타이완	82.7
베트남	79.7
태국	70.2
남아프리카	66.4
멕시코	59.2
인도	58.1
베네수엘라	50.8
필리핀	47.2
인도네시아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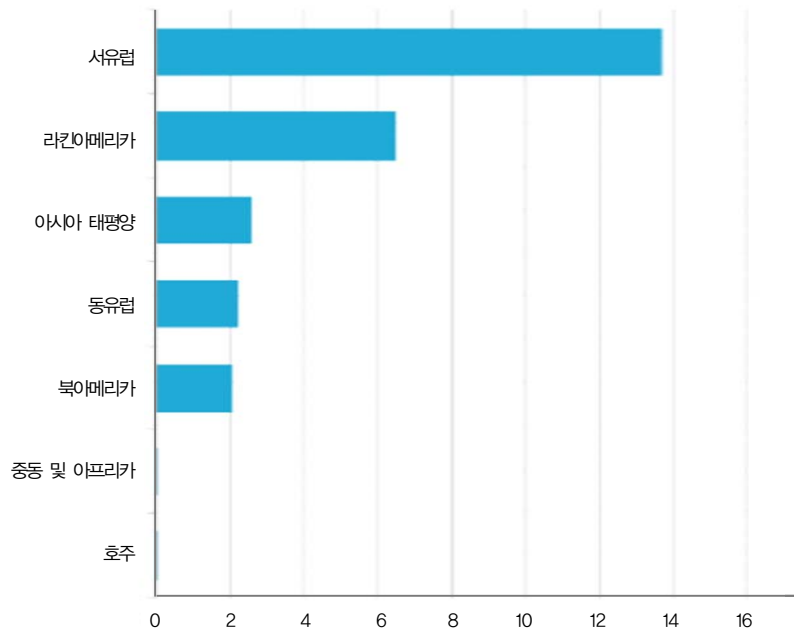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7.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2010년 기준으로 서유럽은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매출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지나 쇼핑몰에는 인기 있고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는 구내식당들이 많다. 이 영역은 넓은 장소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완전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라틴아메리카의 65억 달러의 매출은 대부분 브라질 “킬로(kilo)” 레스토랑 때문인데, 이는 무게로 가격을 측정해서 판매하는 전통 음식점이다.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단조로운 학생식당 같은 모습에서 고객 앞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시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형태의 레스토랑은 고급 쇼핑몰이나 사무용 빌딩 내에서 인기가 있으며 매출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18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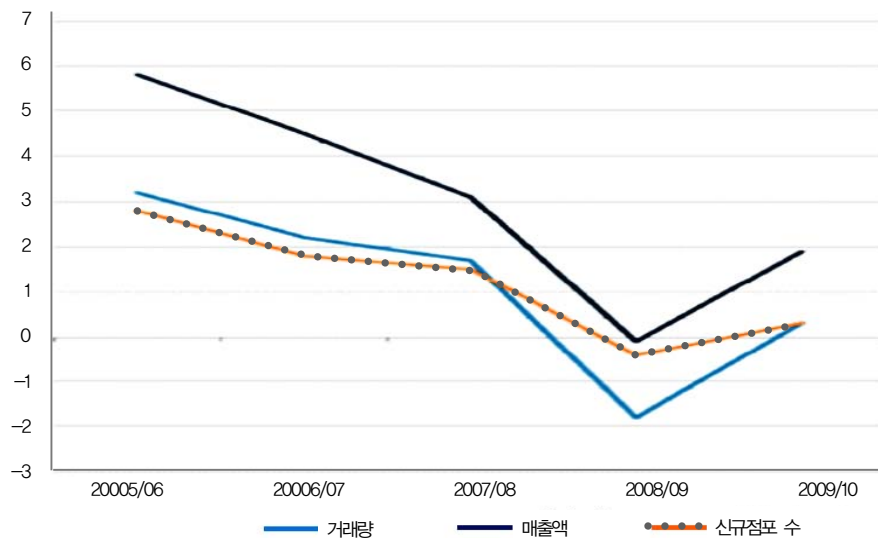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셀프서비스 레스토랑은 지난 몇 년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하여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뒤처져있었다. 2009년의 하락 이후 회복되는 신호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은 없으며 자금이 풍부한 패스트푸드점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매출 신장을 위해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서 셀프서비스 레스토랑을 고급화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유럽의 막세다 라 플레이스(Maxeda's La Place)와 이케아(IKEA)의 구내식당을 세련되게 바꾼 경우를 들 수 있다. 고급형 셀프서비스 레스토랑은 틈새 안의 틈새시장이나 어떤 지역에 서든 그런 식당을 찾는 것은 드문 편이다. 또한 노쇠해 가는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은 다른 부문과 경쟁하기에는 힘겨운 상태이므로 성장의 한계가 예상된다.

그림 19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성장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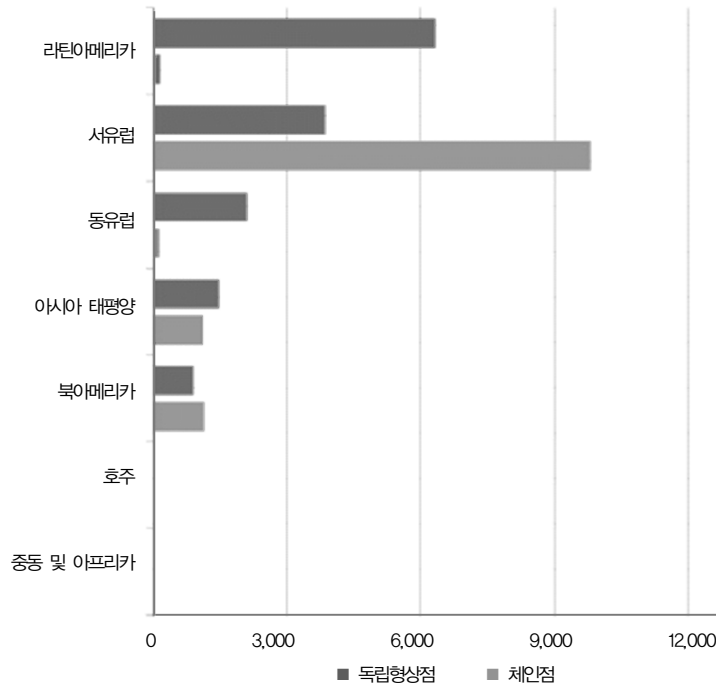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서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브랜드 있는 셀프서비스 구내식당이 드물다. 다수의 운영자들은 훌륭한 대표 음식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주로 가격과 다양성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쇼핑몰이나 사무용 빌딩에 있는 구내식당들은 표준화된 메뉴보다는 장소에 맞추어 음식들을 제공한다. 또한 식당이 소유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체인점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반면에 서유럽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예를 들면, “탱크&라스트 앤 프런치 (Tank&Rast and Flunch)”라는 브랜드는 자신의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다른 지역에 셀프서비스 레스토랑을 만들었으며 IKEA, 테스코(Tesco) 및 카지노(Casino)

등 쇼핑몰도 고객유치를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최근 북미 지역에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나, 아직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브랜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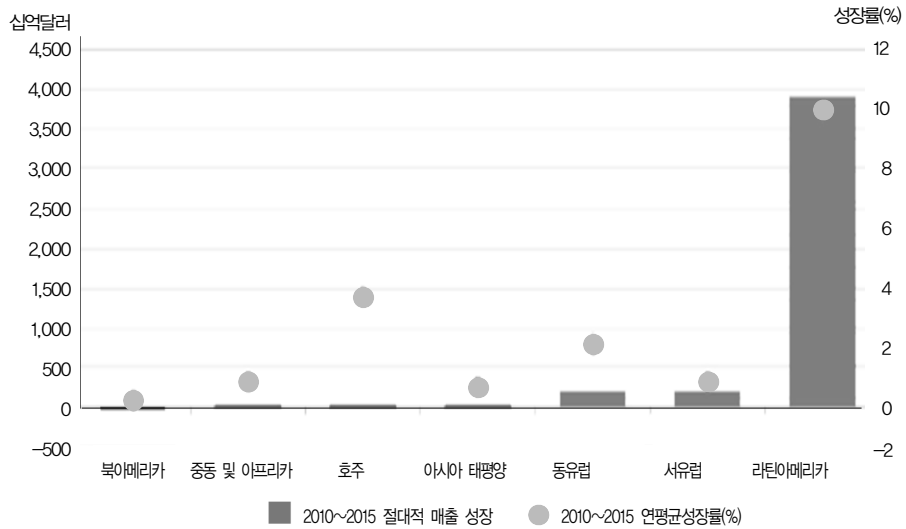
그림 20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라틴아메리카의 매출은 “킬로(kilo)” 레스토랑이 있는 브라질의 덕분에 향후 연평균 10%의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고소득 고객들이 수준 높은 메뉴와 상점을 선호하기에 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유럽과 북미 지역의 부진으로 전반적으로는 성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과 다양화 측면에서 개선하고 있지만, 이 부문은 다양한 메뉴와 빠른 서비스로 무장한 패스트푸드점과 풀 서비스 레스토랑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편안한 분위기와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캐주얼 레스토랑의 인기로 셀프서비스 레스토랑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그림 21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성장률 전망, 2010~2015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참고문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1.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Marketline. 2012.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세계 외식산업의 현황과 특징*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세계 외식산업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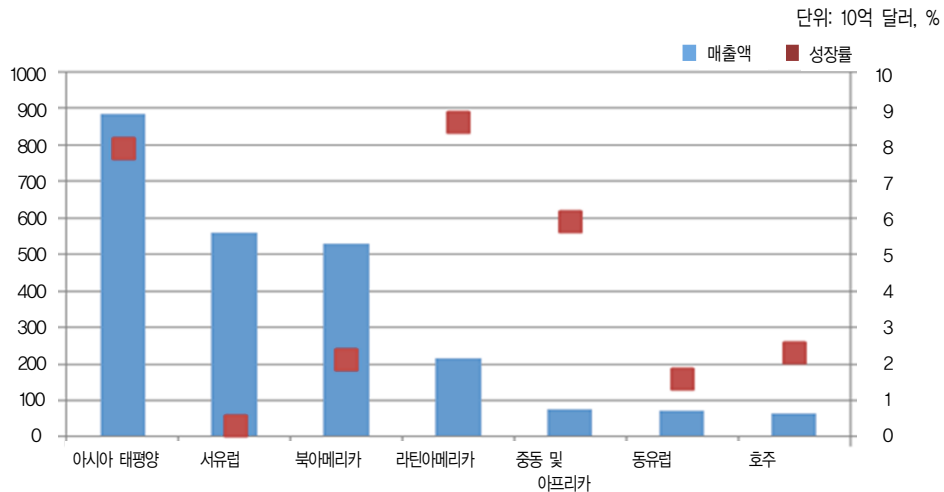
유로모니터사(Euromonitor社)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외식산업은 2010년 기준 2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액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8%의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동 기간 라틴아메리카의 연평균 성장률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9%, 유럽이 0.7%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북미는 유럽과 비슷한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라틴아메리카는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2010년 기준 지역별 외식산업의 매출액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체 시장의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시장인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이 다음을 잇고 있다. 7.9%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과 세계 외식소비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외식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매출규모면에서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는 성장률 측면에서 이미 아시아-태평양을 추월하였다. 세계 외식산업은 이미 성숙되고 포화된 북미와

* (jihchoi@krei.re.kr 02-3299-4316)

서유럽의 저성장 선진시장과 중국, 인도 등 막대한 인구와 소득증가로 함께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고성장 신흥시장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지역별 외식산업 매출액 및 성장률, 2010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10년 기준 주요 국가별 외식산업의 판매액을 보면 여전히 미국이 436.9십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신흥시장인 중국이 333.4십억 달러로 2위로 급부상했고 일본이 240.5십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 주요 10개국의 외식산업 매출액 규모, 2010

단위 : 십억 달러

국가	매출액
미 국	436.9
중 국	333.4
일 본	240.5
브 라 질	128.2
스 페인	110.5
이탈리아	101.8
인 도	87.4
영 국	83.4
프 랑스	62.1
한 국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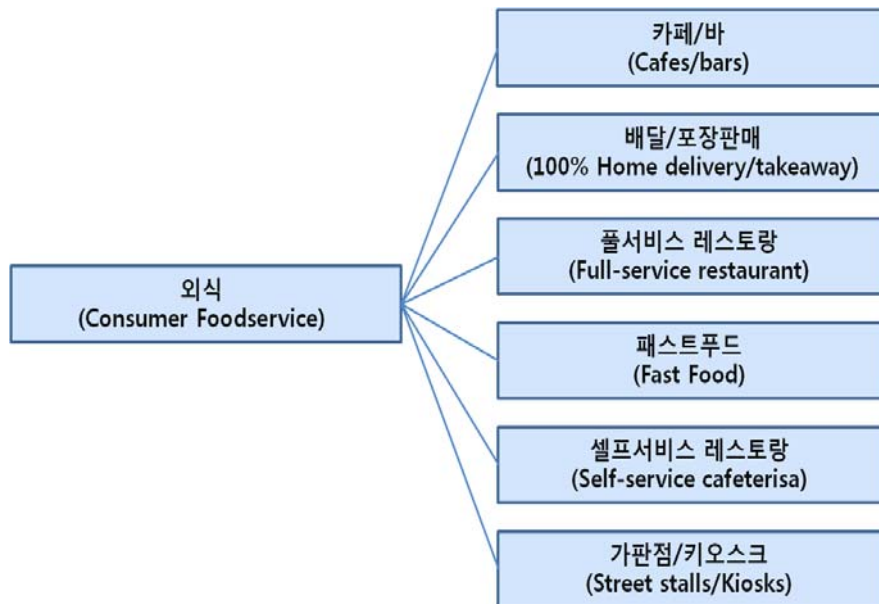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세계 외식소비의 주요 10개국에 중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속해 있고, 일본과 한국의 1인당 소비수준을 고려해보면 중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도 여전히 큰 성장잠재력이 있어 향후 외식산업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이 안정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는 남아미의 주요 시장이 되고 있다.

2. 세계 외식산업의 분류¹⁾

외식산업은 크게 카페/바(cafes/bars), 배달/포장판매(100% home delivery/takeaway), 풀서비스 레스토랑(full-service restaurants), 패스트푸드(Fastfoods), 셀프서비스 레스토랑(Self-service cafeterias), 가판점/키오스크(Street stalls/Kiosk)의 여섯 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그림 2 외식산업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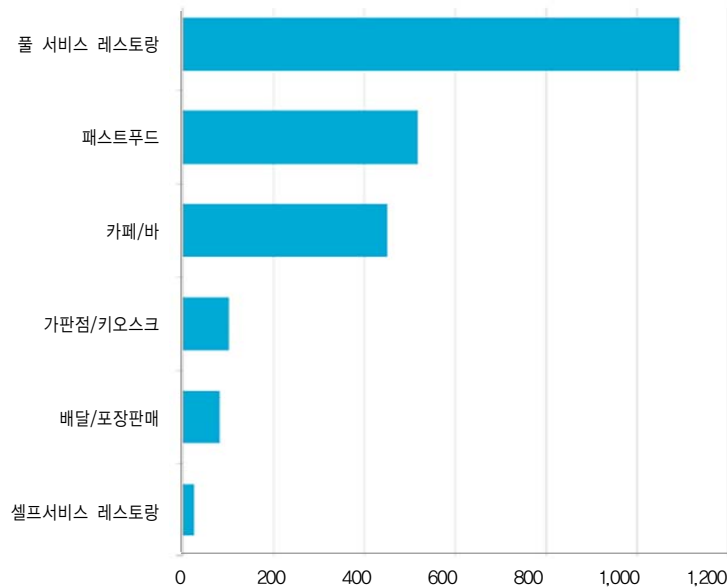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1) 본 소절에서의 외식산업 분류는 유로모니터사(Euromonitor社)의 분류체계를 따른 것임.

세계 외식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차지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카페/바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세계 외식산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식당이 여전히 식생활문화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있어서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사회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외식산업에서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타 부문에 비해 당분간 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외식산업 부문별 매출액,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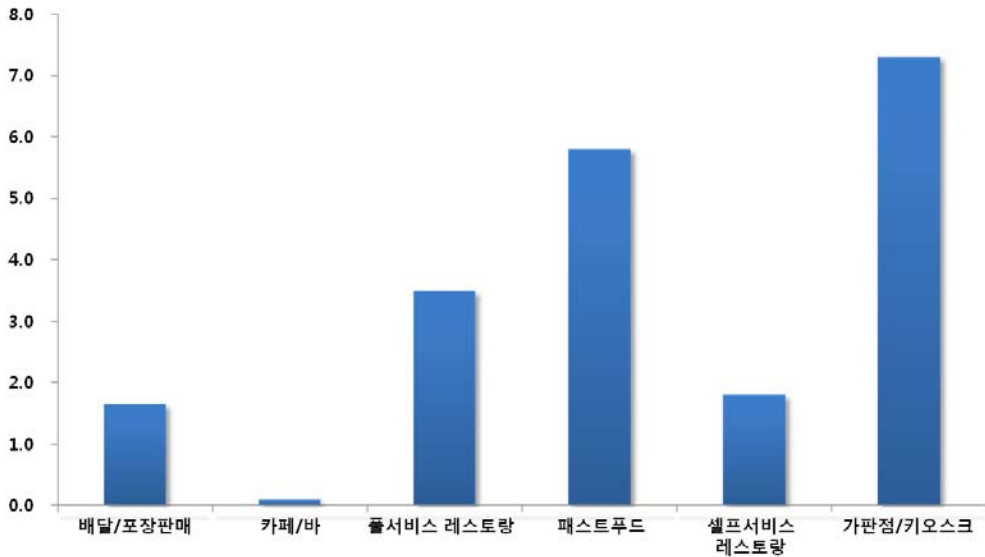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09년 대비 2010년에 외식산업에서의 부문별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가판점/키오스크가 7%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패스트푸드가 6%에 달하는 성장률을 나타냈다. 최근 소비자들은 식품섭취의 간편화, 시간절약 등을 위해 패스트푸드, 편의식품,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의 저렴함과 신속성이 앞으로의 외식산업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풀 서비스 레스토랑 또한 3%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외식산업 부문별 매출액 성장률, 2009/2010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3. 다섯 가지 요인(Five Forces) 모델로 살펴본 외식산업의 구조²⁾

산업분석 및 시장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가 1980년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이라는 저서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요인(Five Forces) 분석틀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인 모델은 산업의 경쟁강도와 수익성 및 산업의 구조적 매력도를 결정하는 5가지 경쟁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포터 교수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특정 산업의 수익성 및 매력도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섯 가지 요인(구매자의 힘, 공급자의 힘, 대체재의 위협, 신규진입자의 위협, 내부경쟁의 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세계 영리 외식산업의 시장구조도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외식산업은 레스토랑, 카페,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주요 구매자는 개인 소비자들, 주요 공급자는 식품 도매업자와 유통업자로 볼 수 있다.

2) 본 소절은 주로 MARKETLINE의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2012)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표 2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산업구조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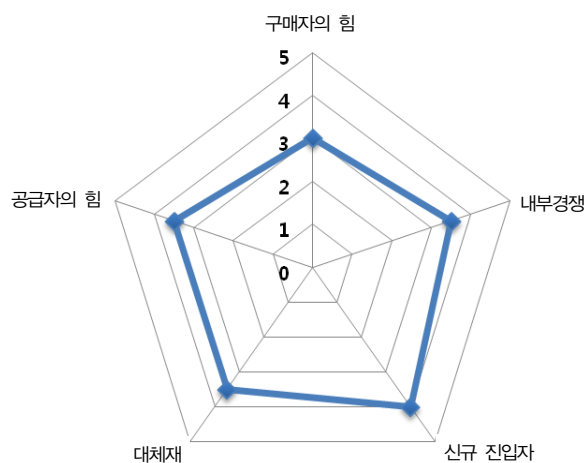
다섯 가지 요인	각 요인별 세부 결정 요소
구매자의 힘	후방통합, 구매자독립성, 구매자의 규모, 재정적 능력, 전환비용, 과점 위험, 가격민감성, 제품 중요도, 전환경향, 비차별화된 제품 등
공급자의 힘	차별화된 재화, 전방통합, 품질/비용의 중요성, 대체 생산요소 미비, 과점 위험, 기업 중요도, 기업독립성, 공급자의 규모, 전환비용 등
대체재의 위협	유용한 대안, 저렴한 대안, 낮은 전환비용 등
신규진입자의 위협	유통망 접근성, 기존기업의 목인, 지적재산권 관련성, 규제, 고정비용, 전환비용, 시장 성장성, 규모의 중요성, 공급자 접근성, 비차별화된 제품, 브랜드 등
내부경쟁 강도	경쟁자의 규모, 확대 용이성, 퇴출장벽, 다양성, 전환비용, 고정비용, 기업의 숫자, 기업의 유사성, 저장비용, 비차별화된 제품, 제로섬 게임 등

자료 : 김규호, 세계 농식품 산업 현황과 구조(2012) 재인용.

3.1. 종업

외식산업은 외식산업 업체 간 차별화가 별로 없고,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존재로 경쟁이 심화된다. 외식산업의 구매자들은 재정적 역량이 별로 없는 개인 소비자들이지만, 아주 적은 전환비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급자의 힘은 많은 수의 고객을 가진 거대한 사업체일수록 강력하며 특별한 협상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시장의 신규진입자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식품안전성과 최저임금 관련 규제, 대기업

그림 5 외식산업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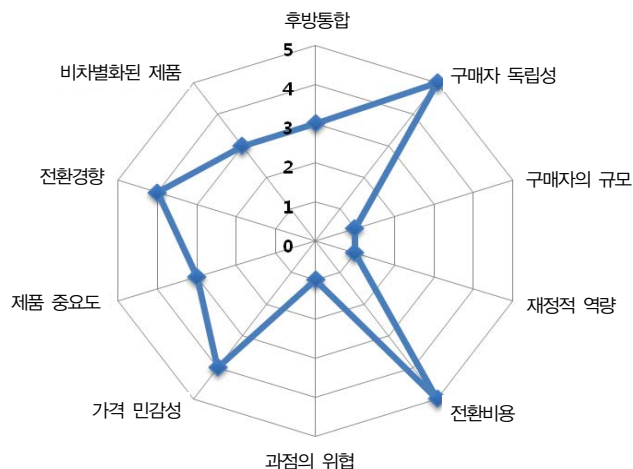
자료: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2012, MARKETLINE.

의 존재에 의해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시장의 신규진입자를 유인할 수도 있다. 외식산업 부문의 대체재에는 가정에서 만드는 요리, 다른 여가 활동과 소매상으로부터의 식품 구입이 있다. 상대적으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것과 퇴출비용이 낮다는 것은 경쟁을 다소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유사성을 가진 많은 경쟁자들에 의해 심화된다.

3.2. 구매자의 힘(Buyer power)

구매자들은 가격 인하 및 품질 제고 압력을 통하여 또는 판매 경쟁자간 수익성을 악화시키도록 조정하면서 산업과 경쟁한다. 구매자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데에는 구매자들이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가와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들의 상대적인 교섭능력이 중요하다. 구매자의 힘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후방통합, 구매자 독립성, 구매자의 규모, 재정적 역량, 전환비용, 과정의 위협, 가격 민감성, 제품 중요도, 전환경향, 비(非)차별화된 제품 등이 있다. 세계 외식산업 부문의 구매자들은 개별적인 소비자들로 많은 숫자 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재정적 역량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한 고객의 영향은 대체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래량은 낮지만 마진이 높은 판매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프리미엄 가격 판매(premium-price), 비체인 레스토랑(non-chain restaurants)이 있을 수 있다.

그림 6 외식산업에서 구매자의 힘에 대한 세부 결정 요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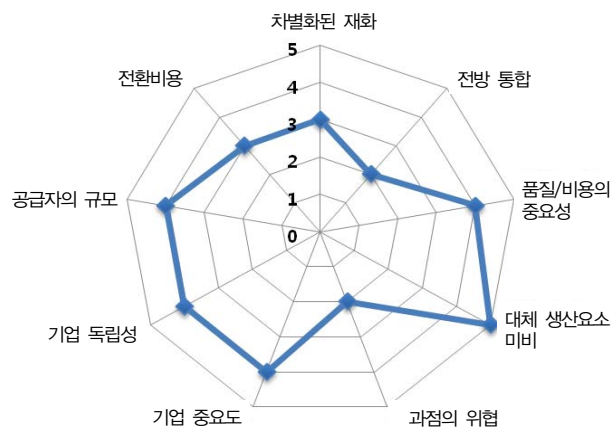
자료: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2012, MARKETLINE.

구매자의 재정적 역량의 부족은 협상력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하나의 외식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전환함으로써 비용의 감소시켜 이익을 얻는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음식을 요리함으로써 후방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식산업은 엄격히 말해서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외식산업의 기업들은 브랜드 구축, 특히 중저가 시장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맥도날드는 개별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광고에 대한 지출을 제외해도 총 7억 8,150만 달러를 광고에 지출했다. 이러한 금액은 한 해에 회사가 얻는 순이익의 15% 정도와 맞먹는 액수이다. 다든(Darden)은 2011년에 순수입의 70% 이상인 3억 4,02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러한 브랜드 구축은 소비자들에게 외식산업이 단순히 식품의 기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편의성, 사회적 기능과 같은 식품 그 이상의 가치를 나타내도록 하여 고객 충성심을 가지게 한다. 결론적으로, 구매자의 협상력은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3.3. 공급자의 힘(Supplier power)

공급자들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려는 위협으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들은 더 이상 원가를 상승시킬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을 잠식할 수도 있다. 공급자 협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차별화된 재화, 전방통합, 품질/비용의 중요성, 대체 생산요소 미비, 과정의 위협, 기업 중요도, 기업 독립성, 공급자의 규모, 전환비용 등이 있다.

그림 7 외식산업에서 공급자의 힘에 대한 세부 결정 요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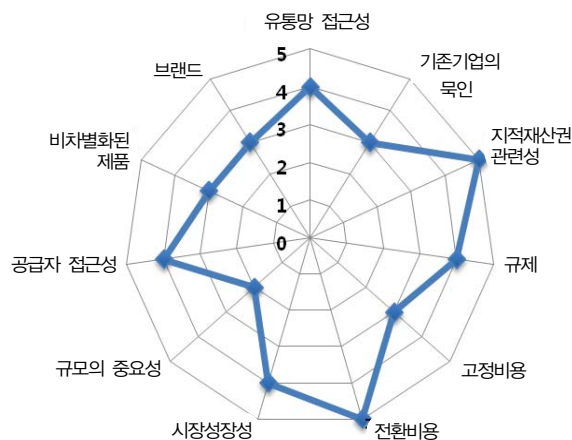
자료: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2012, MARKETLINE.

외식산업은 근로자의 임금이 운영비용의 25~30%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력 집중 산업이다. 법적 최저임금의 존재는 기업들이 다른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성을 높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외식산업은 저마진 사업인 경향이 있어서 이 분야의 기업들은 낮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거나 공급업자가 충분한 품질의 식재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전환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외식산업의 대다수 공급자들은 수많은 기업과 일하는 대기업이다. 이것은 어떤 한 계약으로 인한 사업의 손실이 전체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압력은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중요한 협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급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급자의 힘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3.4. 신규진입자(New entrants)

신규진입자는 시장점유율 및 실질적인 자원을 획득하려 하거나, 새로운 능력을 산업에 가져다준다. 신규진입자에 의하여 가격 경쟁이나 원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다. 신규 진입장벽 결정요인은 유통망 접근성, 기존기업의 묵인, 지적재산권 관련성, 규제, 고정비용, 전환비용, 시장성장성, 규모의 중요성, 공급자 접근성, 비차별화된 제품, 브랜드

그림 8 외식산업에서 신규 진입자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011



자료: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2012, MARKETLINE.

성, 비차별화 된 제품, 브랜드 등이 있다.

최근 많은 시장과 산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외식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진행 중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신규 진입이 가능한 자들에게 외식산업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게다가, 자본이 낮다는 특이성, 공급자의 수가 풍부하다는 점, 필요한 자본 지출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진정한 경쟁우위를 구축할 기업이 별로 없다는 점은 신규진입자들을 더욱 유도한다. 이러한 활성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마진이 낮은 부문에서, 신규 진입자는 맥도날드나 암브랜드와 같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존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공급업체로부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익을 얻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매우 경쟁력 있는 거래를 제안하고, 따라서 그들의 수익성을 개선시킨다.

외식산업 부문은 매우 규제가 높은 부문으로 식품 위생 문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식품 규제는 불량한 위생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엄격하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위생의 많은 부분은 장비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좋은 습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비용은 아마도 이미 적절하게 훈련되어 있는 핵심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외부화할 수 있다. 또한 외식산업은 노동 집약적이기는 하지만, 드물게 높은 보수의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임시 또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낮은 숙련도의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 세계 외식산업 부문에서 최저임금 규정이나 단체 임금 협약이 존재하는 국가들의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신규 진입자의 가능성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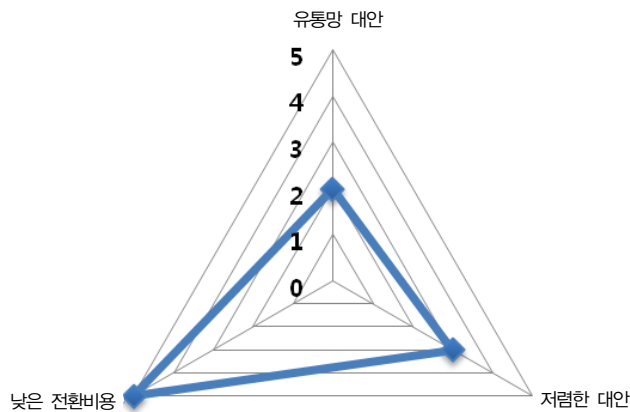
3.5. 대체재의 위협(Threat of substitutes)

대체재는 기업이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케 함으로써 기존기업의 잠재적 수익을 제한한다. 만일 산업의 수익성이 구매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면, 산업의 수익성은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즉,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진다. 대체재 위협의 결정요인은 유용한 대안, 저렴한 대안, 낮은 전환비용 등이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식은 필수적인 것은 아

니다. 소비자들의 주된 전환 비용은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과 노력이다. 가정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다. 부가적으로, 가정에서 요리하지 않은 음식, 특히 패스트푸드나 배달음식은 가정에서 요리한 것보다 고열량, 고지방, 고염분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 게다가, 간단한 식사와 포장음식의 증가는 소비자들의 정통적인 식사 횟수를 감소시키고 대신 소매관련 사업이 증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면에서 영화를 보고 극장을 가는 것과 같은 대체적인 여가 활동을 포함한 다른 대체재들은 소비자들이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사회화할 수 있다. 하나의 전략으로 식품, 음료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판매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도록 할 수 있다. 가맹업체들은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보하는 데에 투자함으로써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립적인 풀 서비스 레스토랑들은 아마도 요리의 특정 스타일의 영향에 초점을 주는 등 좀 더 개별화된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재의 위협은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그림 9 외식산업에서 대체재의 위협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011



자료: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2012, MARKET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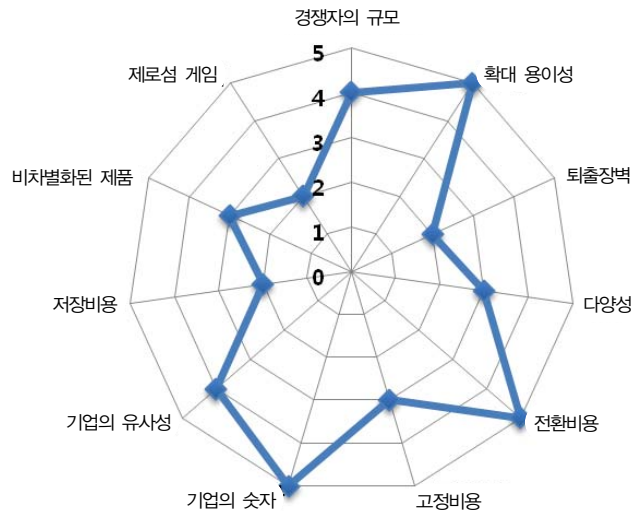
3.6. 내부경쟁의 강도(Degree of rivalry)

경쟁은 경쟁자들이 경쟁위치 개선에 대한 압력을 느끼거나, 그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일어나고, 경쟁 양상은 가격경쟁, 광고/홍보 전쟁, 제품 출시 등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강도와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산업 내에

서 이미 경쟁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기존 경쟁자)간의 경쟁관계이다. 내부경쟁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경쟁자의 규모, 확대용이성, 퇴출장벽, 다양성, 전환비용, 고정비용, 기업의 숫자, 기업의 유사성, 저장비용, 비차별화 된 제품, 제로섬 게임 등이다.

외식산업 부문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거대한 다국적 체인 몇을 제외하고는 이 부문의 많은 경쟁자들은 대개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대부분은 비슷한 가격에 유사한 제품을 제공하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수많은 회사들이 있다. 소비자들이 그들의 외식 제공자들을 바꾸는데 드는 전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업 사이에서 경쟁은 강화된다. 그러나 판매하는 음식, 시설 및 식품의 가격의 관점에서 차별화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상대적으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외식 관련 매장은 경쟁이 중복될 필요 없이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이 부문의 성장은 경쟁을 완화시킨다. 퇴출 비용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레스토랑은 소유하기보다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매몰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매장은 대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고된 직원들의 대부분은 상당한 퇴직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전반적으로 외식산업의 내부경쟁의 강도는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0 외식산업에서 내부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011



자료: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2012, MARKETLINE.

참고문헌

- 김규호. 2012. “세계 농식품 산업 현황과 구조.” 『세계농업』 제143호.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1.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Marketline. 2012.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세계 외식산업의 전망*

이 동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외식산업 전망

2010 - 2015년의 외식산업 매출 성장은 꾸준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점포수와 거래량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과 서유럽은 예측기간 말에 회복이 예상되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몇 년간은 중국과 브라질의 성장이 선진시장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이미 일인당 점포수와 거래량 모두 소득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보다 훨씬 앞서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성장하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규점포수와 거래량 증가는 정체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미개발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차별화 요소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모두 중요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성장의 주역은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성숙한 시장이지만, 이 지역의 튼튼한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매출과 점포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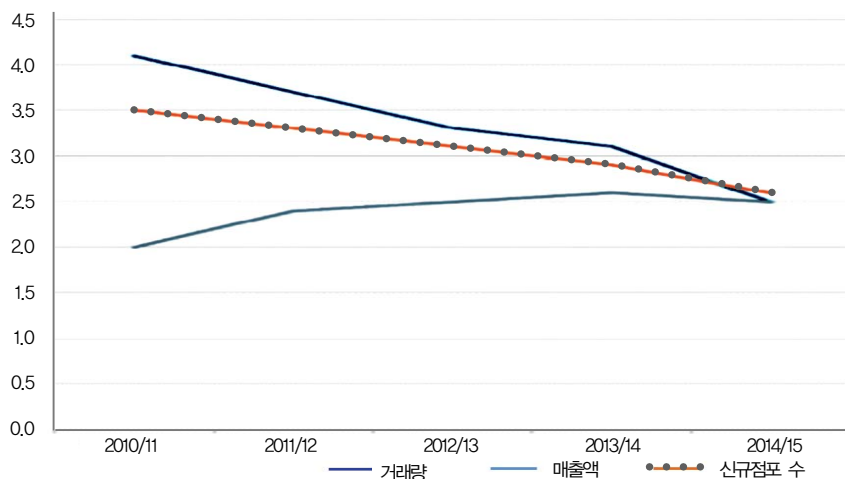
가관점/키오스크 영역 또한 아시아 지역의 영향으로 주요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 (petit211@krei.re.kr, 02-3299-4322).

신규 외식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점이며 싱가포르나 대만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는 예측기간 내내 광범위한 성장이 예상된다. 아시아 수요가 성장의 중심에 있고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강한 수요가 예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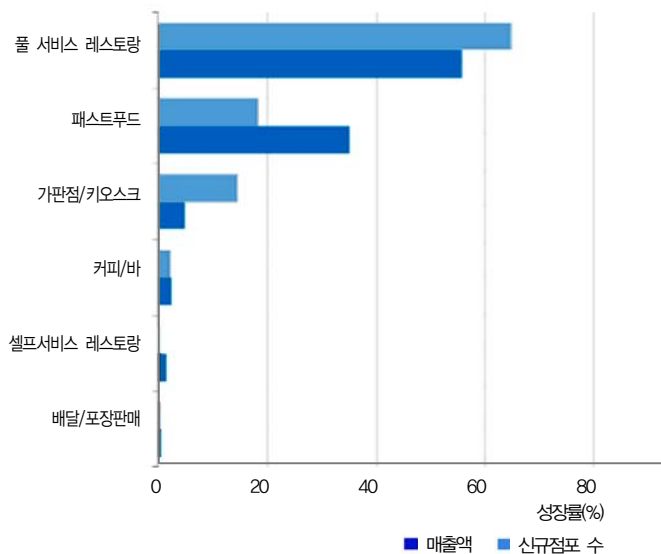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외식산업의 시장 전망, 2010~2015

단위 : %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2 세계 외식산업의 부문별 성장률 전망,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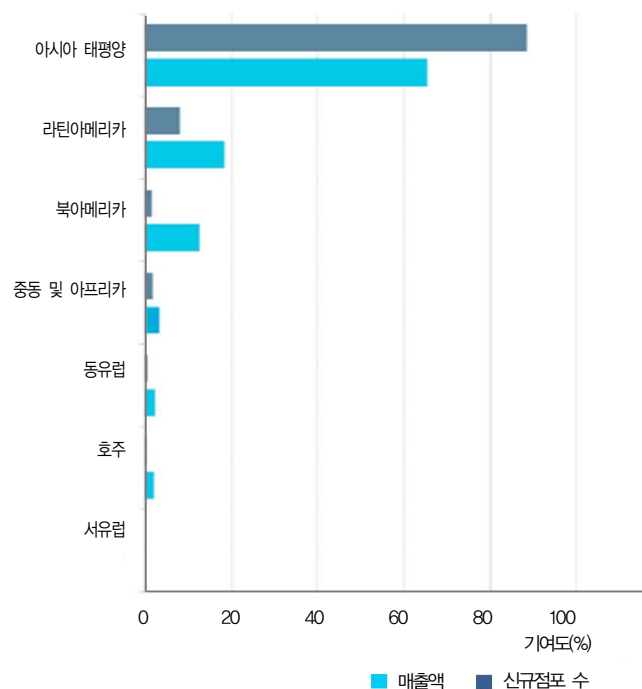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며 북미는 고급화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0 - 2015년 기간 중 세계 상점 증가의 90%와 매출성장의 2/3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이외에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페루와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의 성장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발한 내수와 보수적인 은행제도 덕분에 브라질은 불황에서 탈출하였으며 향후 5년간 성장할 것이다. 콜롬비아 또한 경제안정 덕분에 빠르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북미가 유일하다. 북미의 경우 고급화된 패스트푸드 추진을 통해 매출신장과 점유율 확보를 위해 다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세계 외식산업 성장률 지역별 기여도 전망,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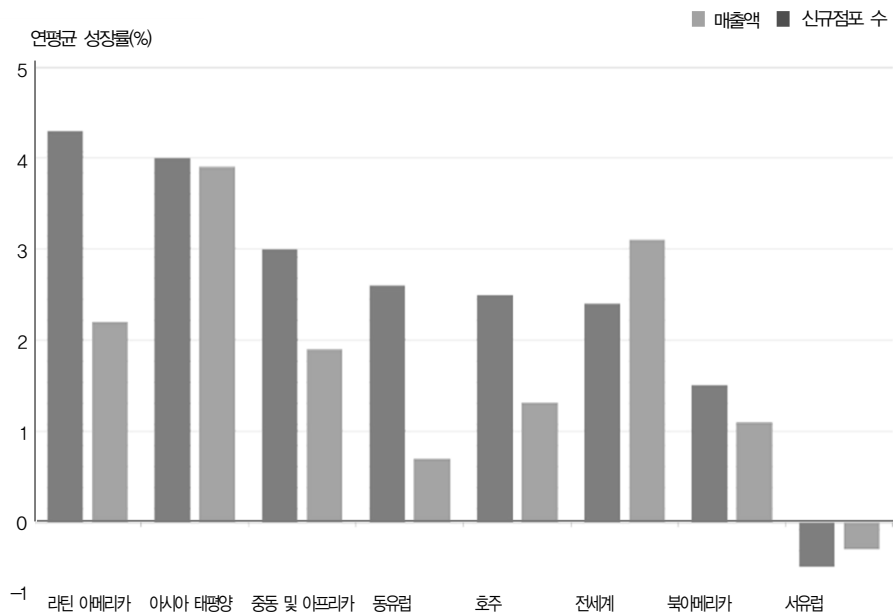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10~15년에 라틴 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성장은 세계 평균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며 세 지역 모두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지역의 매출성장은 상점성장을 초과하고 점포 당

평균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센터와 다른 소매점/오락시설은 일반적으로 체인을 세우기에 선호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점포당 평균매출은 안정적이며 다른 두 지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인데 이는 모든 소득계층의 수요를 유인하고 있는 가관점과 현지 독립형 점포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높은 매출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팽창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브라질, 콜롬비아 및 여러 시장으로부터 수요가 많아 체인점 외식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시아(Alsea)¹⁾와 아르코스 도라도스(Arcos Dorados)²⁾와 같은 프랜차이즈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진 세계적 체인점과 함께 가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은 높은 외식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지역의 정치 불안은 매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득증

그림 4 세계 외식산업의 지역별 성장률 전망, 2010~2015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 1) 알시아(Alsea)는 멕시코 프랜차이즈 업체로,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 버거킹, 캘리포니아 피자 치킨 등 다양한 브랜드의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음. 2010년 기준 매출액은 7.1억 달러, 순이익은 1.2억 달러임.
- 2) 아르코스 도라도스(Arcos Dorados)는 맥도날드의 최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2007년 맥도날드가 7억 달러에 인수함.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19개국에 1,800여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매출액은 36억 달러 수준임.

가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수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미, 서유럽 및 호주지역의 방문고객 수는 감소할 것인데 이는 높은 실업과 정부의 긴축재정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시장점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고 시간대와 가격범위의 조정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영역의 운영자들도 이를 쫓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패스트푸드와 다른 영역 간 차이점이 없어지게 되어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1.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주요국의 외식산업 동향*

차 원 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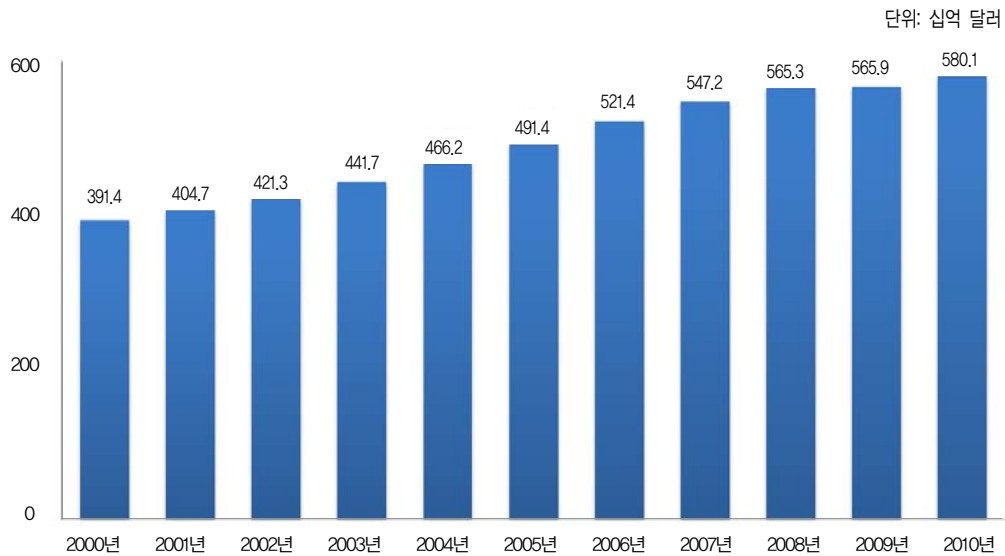
1.1. 외식산업의 규모

미국의 외식산업은 미국 내 노동시장의 9%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취업직군 중의 하나로서 2010년 소비기준 시장규모가 580.1십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외식시장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이후 외식시장의 성숙,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외식 브랜드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당분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외식산업은 산업분류에 따라 크게 상업적 음식점(Commercial restaurants), 비영리 음식점(Non-Commercial restaurants), 군대전용 음식점(Military restaurant service)으로 나누어진다. 상업적 음식점은 다시 풀 서비스 레스토랑(Full-service Restaurants),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Limited-service restaurants)으로 분류된다.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에는 카페테리아, 뷔페, 그릴뷔페와 스낵 및 음료 전문점이 포함된다. 2010년 기준 약 580십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외식산업의 전체 매출액 중 풀 서비스 레스토랑과 리미티

* 본고는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의 외식산업 발전 방안 연구의 내용을 재정리 한 것이다.
(wkcha@krei.re.kr 02-3299-4165).

그림 1 미국의 외식산업 시장규모(소비기준)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Food Expenditure Series, 2009.

주: 2010년 매출액은 추정치임. (2010 figures are projected)

드 서비스 레스토랑은 각각 184십억 달러, 164십억 달러의 매출액으로 미국 외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영리 음식점과 군대전용 음식점의 경우 각각 460억 달러, 20억 달러의 매출액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체 수는 전체 외식시장이 57만 여개로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22만개,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이 27만 여개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470만 여명, 리미티드 서비

표 1 산업분류에 따른 미국 외식산업의 시장규모

단위 : 천 달러

	2009	2010
외식 산업 총 매출액	565,774,371	580,060,112
상업적 음식점(commercial restaurants)	517,314,563	530,351,941
일반음식점(eating place)	380,475,552	388,510,737
- 풀 서비스레스토랑	181,992,532	184,176,442
-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	160,035,527	164,836,593
비영리 음식점(non-commercial restaurants)	46,372,154	47,547,226
군대전용 음식점(military restaurant service)	2,087,654	2,160,945

자료 : National Restaurant Industry, 2010 Restaurant Industry Forecast.

스 레스토랑이 413만 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995만 103명의 전체 외식시장 종사자의 89%가 상업적 음식점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사자수는 2011년 12.8백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4.1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미국 가구 당 식음료품 소비에 대한 지출액은 6,887달러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이 중 식료품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 6,443달러, 주류에 대한 지출액은 444달러이다. 식료품 소비 지출액 중 외식비 지출금액은 2003년 2,358달러에서 2008년 2,698달러로 매년 40%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미국 가구의 식음료품 소비지출 추이

단위 : 달러

식음료소비지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식료품	외식	2,358	2,434	2,634	2,694	2,668	2,698
	외식비 비중	39.1	39.1	41.4	40.7	40.5	39.2
	계	5,593	5,781	5,931	6,111	6,133	6,443
주류	주류	442	459	426	497	457	444
총계		6,035	6,240	6,357	6,608	6,590	6,887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Expending Survey, 2003~2008.

1.2. 소비시장

미국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의 외식산업운영보고서(Restaurant Industry Operation Report)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 중 1/3은 가치 지향적인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나 고객 지향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이 소비자에게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소비자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조금 비싸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비를 한다고 한다.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성인의 35%는 레스토랑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18~35세의 성인들은 절반을 넘는 55%가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외식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중 41%는 이메일 광고를 보고 새로운 레스토랑을 선택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과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등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소비자들 중 10명 중 3명은 외식업체에 배달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 54%의 성인은 가정이나 직장으로의 포장 및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최근 트렌드

미국 외식시장의 주요 트렌드로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음식 소비의 선택에 있어서도 쌀이나 파스타가 많아지고 닭고기와 같은 지방이 적은 가금류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독신가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미국의 주요 외식 기업들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 건강과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메뉴를 변화시키거나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광고에 규제를 두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Chili's의 경우 저지방 저탄수화물 메뉴 옵션을 포함하였고, KFC에서는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프라이드치킨을 제공하고 있다(Katz, 2008). 또, 맥도날드는 마케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슈퍼사이즈 프렌치프라이나 음료의 광고를 자제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요구르트

그림 2 유명 요리사 설문조사: 최신트렌드, 2011(Chef Survey: what's hot in 2011)



자료 : 미국레스토랑협회(NRA), 2011.

((yogurt), 우유, 야채나 과일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해피밀(happy meal)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외식프랜차이즈 상위 10개 기업 중 6개의 업체가 패스트푸드 업체로 외식업계의 건강 지향적이고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한 저칼로리 메뉴를 개발을 통해 외식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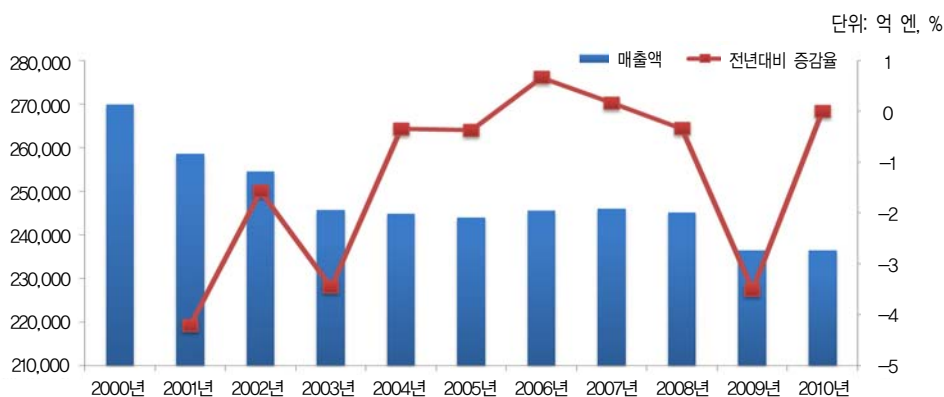
2011년 미국 레스토랑협회에서 1,500명의 유명 셰프(Chef)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트렌드 조사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 및 해산물,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 지속가능성이 있는 식품,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어린이 메뉴, 인근 지역 농장 등에서 생산한 식재료의 이용,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어린이 식품, 친환경 해산물, 음식 알레르기의 고려, 간편성과 편리함의 추구, 생산자 브랜드 식재료가 열 가지의 트렌드로 언급이 되었다.

2. 일본

2.1. 외식산업의 규모

일본의 외식산업총합조사 연구센터에 의하면 일본의 외식산업은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계속 매출이 감소하여 2010년에는 외식시장 전체 매출액¹⁾이 23조 6,540억 엔으로 전년의 2009년 대비 제자리 성장을 하였다.

그림 3 일본의 외식산업 규모 추이



자료 : (재)일본외식산업총합조사연구센터

1) 요리품 소매업 미포함.

일본 외식시장은 크게 급식부문과 식음료부문, 요리품 소매업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급식부문은 일반음식점인 레스토랑, 소바/우동집, 스시집, 국내선 기내식,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급식과 학교, 사업소, 병원 등의 급식을 하는 단체급식으로 나누어진다. 또, 식음료부문은 차(茶)전문점/이자카야(居酒屋)²⁾와 요정/바로 나누어진다. 요리품 소매업은 테이크아웃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외식산업총합조사 연구센터에서 일반 외식산업과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는 반찬전문점과 도시락전문점 등이 포함된다. 급식부문과 식음료부문, 요리품 소매업의 매출액은 2010년 기준 각각 18조 9,792억 엔, 4조 6,658억 엔, 6조 2,342억 엔으로 급식부문은 전년대비 0.5%증가한 반면 식음료부문은 1.9%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요리품 소매업은 전년대비 2.4%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표 3 일본 외식산업 부문별 매출액, 2010

단위 : 천만 엔

산업별	부문별	업종별	매출액
외식산업	급식부문	영업급식	156,919
		단체급식	32,873
	식음료부문	차전문점/이자카야	20,053
		요정/바	26,605
	요리품소매업	반찬/도시락	62,342
계			294,838

자료 : 일본외식산업총합연구센터.

표 4 일본 월평균 가계소비지출(근로자가구)

단위 : 엔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출총액	995,704	1,009,611	998,810	990,162	1,001,977	1,007,864
소비지출	326,566	331,636	329,499	320,231	323,459	324,929
－ 식료품지출	71,394	71,935	70,947	69,403	70,352	71,051
－ 식표품지출비중	21.9	21.7	21.5	21.7	21.7	21.9

주 : 2인 이상(농림어가 세대포함) 세대임. 자료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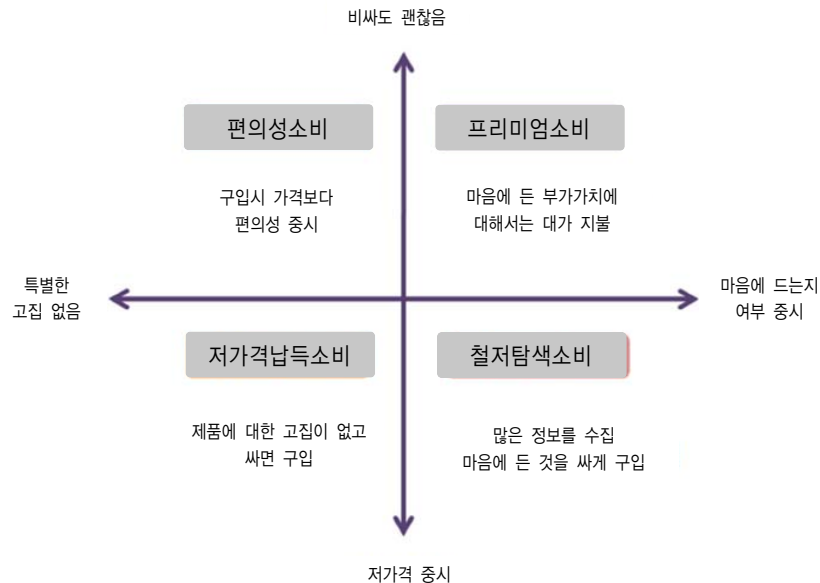
2) 술 종류와 그에 따른 간단한 요리를 제공하는 일본 음식점이다. 주로 주류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 식당과 다르다. 이자카야에서는 일본식 술인 사케를 제공하고있는 가게가 많아, 술집에 비해 요리의 종류가 많다.

일본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은 2003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1,470엔 증가하였다. 2008년 기준 일본 가계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총 32만 4,929엔으로 이 중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7만 1,051엔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비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미미한 변동을 보이며 약 22%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2. 소비시장

일본인의 소비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상품에 대해서는 비싸도 그 비용을 선뜻 지불하는 소비스타일인 ‘프리미엄 소비’, 특정 상품과 품질을 고집하면서도 저가격도 추구하여 좋은 제품을 싸게 사기위해 노력하는 ‘철저탐색 소비’, 철저탐색형과 대조적으로 상품에 대한 고집도 저가격도 중시하지 않는 대신 구입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편의성 소비’, 저가격만을 평가하는 ‘저가격 납득소비’이다. 이러한 소비스타일 중 편의성 소비는 일본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일본 내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균일하고 일정 품질 수준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

그림 4 일본인들의 4가지 소비 스타일



자료 : KOTRA 글로벌원도우.

어와 계속되는 장기불황에 일본의 소비자들은 외식소비에 있어 철저탐색 소비와 같은 저렴한 메뉴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저렴하기보다는 가격대비 서비스나 메뉴의 품질 만족도를 따져보는 ‘가치소비’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일본의 소비의식을 설명하는 ‘현절 소비’라는 말은 조금은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현명한 절약소비를 일컫는다. 이러한 소비성향과 더불어 최근의 동북아지진,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식자재 공급의 어려움으로 일본 외식기업의 매출은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3. 최근 트렌드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자들이 기존의 스테이크, 스시 등 육류 또는 해산물류 중심의 외식성향에서 벗어나 샐러드 바, 채소 샐러드 전문점 등 채소를 주재료로 한 레스토랑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층 또한 기존의 20~30대 여성에서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성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에 업계는 엄선된 계약농가로부터 공급 받은 채소만을 사용하여 단순히 몸에 좋고 맛있는 채소요리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로 신뢰를 얻고 있다. 한편, 일본의 외식업체들은 ‘나홀로족’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최근 독거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혼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같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1인 메뉴, 테이크아웃 메뉴를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의 외식트렌드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식사 간소화에 대한 욕구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후지경제에 의하면 2010년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2,445억 엔으로 전년대비 1.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환자,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도시락 배달 시장은 2010년 607억 엔으로 전년대비 4.5%가 증가하였다.

3. 중국

3.1. 외식산업의 규모

KOTRA에 의하면 중국 외식산업의 규모는 2009년 기준 1조 7998억 위안으로 이는 2008년 대비 16.8%가 성장한 수치이다. 외식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2010년에는 매출액 규모면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외식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표 5 중국 외식산업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 위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7485.0	103,455	-	154,107	179,99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2010.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2013년에는 3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 내에서 외식산업은 금융, 통신과 함께 10대 유망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불황에도 중국의 외식산업 성장은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의 외식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에 해외 브랜드 외식기업의 중국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2006년 5월까지 중국에 진출한 해외 외식기업은 214개사, 투자계약액은 3억 4,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6%가 증가하였다. 프랜차이즈는 중국 외식시장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로써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프랜차이즈 총 매출액은 2,987억 위안, 브랜드 수는 3,500여 개로 이는 전년대비 각각 23.8%, 25% 증가한 수치이며, 프랜차이즈 체인점 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이미 30만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외식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중국의 가계 소비지출도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도시가구 소비지출은 69,690억 위안으로 2005년 대비 34%증가하였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 중 음식구매에 차지하는 절대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지출 중 음식 지출 비중은 2007년 30.5%로 2005년 32%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중국의 가계지출에서 외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도시가구 소비지출비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6%로 2000년의 11.0%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6 중국의 도시가구 소비지출 추이

단위 :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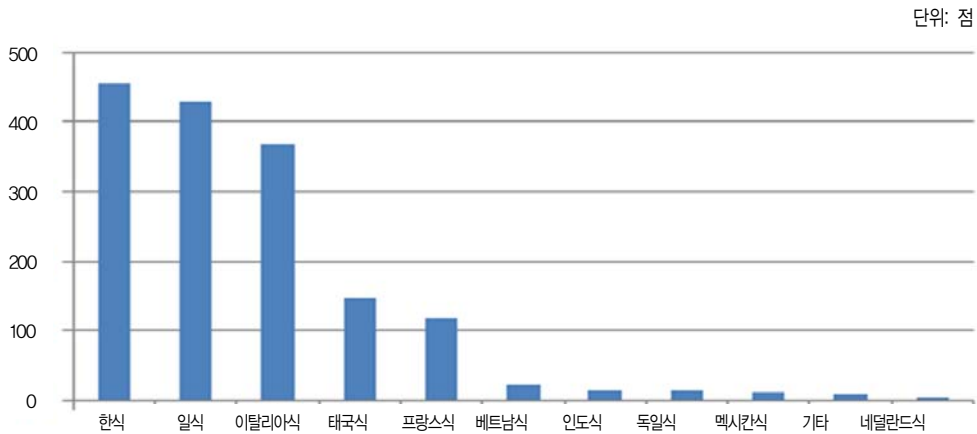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지출총액	51,989.3	59,370.2	69,690.3
- 음식지출	16,615.9	18,277.2	21,287
- 음식지출비중	32.0	30.8	30.5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소비자물가지수(2008).

3.2. 소비시장

중국의 소비환경은 경제의 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임금상승, 소득증가 등으로 인해 과시적 소비, 친환경 소비, 온라인 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또는 변화하고 있다. 특히, 멜라닌 분유, 폐식용유 등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불신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러훅족(樂活族, 웰빙족)’이 등장하는 등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무공해, 친환경 제품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외식업체에서도 유기농 식자재, 건강 지향적 메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5 중국 에스닉푸드 선호도



자료 : 한식재단 2009. 한식세계화를 위한 정보조사 및 마케팅 전략수립보고서.

한편, 한식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에스닉푸드(ethnic foo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482점을 만점으로 중국인에 대해 에스닉푸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454점으로 중국인이 가장 선호는 음식으로 선정됐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함께 일본, 이탈리아 음식이 선호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상호성이 뛰어난 블로그, 트위터 등을 이용한 e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

3.3. 최근 트렌드

중국 조리협회에서 2010년 5월에 중국 외식프랜차이즈 2만개 업체와 외식업계 관리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외식체인 100대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 상위 2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중국식 샤브샤브인 ‘훅귀(火鍋)³⁾’ 업체로 나타났다. 기존의 ‘훅

귀' 식당은 뜨거운 열기와 복잡하고 청결성이 떨어지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소비양'과 같은 대형 체인들이 들어서면서 업그레이드된 맛, 서비스, 인테리어로 중국의 대표 식당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휘귀' 업체들의 매출액이 100대 기업 총 매출액의 26.3%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외식시장의 10%의 비중에 달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외식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틈타 스타벅스를 비롯한 미국의 유명 외식브랜드가 중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통계국에 따르면 전 세계 커피 소비액이 매년 2%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국은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이며, 1인당 평균 소비액 증가속도는 매년 30%에 달한다. 이러한 중국 커피시장의 성장 속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대도시를 기점으로 체인점을 확장해 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규동(덮밥)전문점인 '요시노야(吉野家)'⁴⁾는 2008년 말까지 중국 내 200개 점포를 확장하였으며, 이탈리아 레스토랑 '사이제리아'는 2009년까지 100개의 점포 오픈하였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중국 시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외식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2011. “외식산업 발전방안 연구”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1.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Marketline. 2012. Profit Foodservice: Global Industry Guide.
National Restaurant Industry. 2010 Restaurant Industry Forecast.

3) 진하게 끓여 낸 육수에 양고기 또는 소고기를 담가 살짝 익혀 먹는 중국요리.
4) 규동(쇠고기덮밥)을 주로 파는 일본의 대형 음식 체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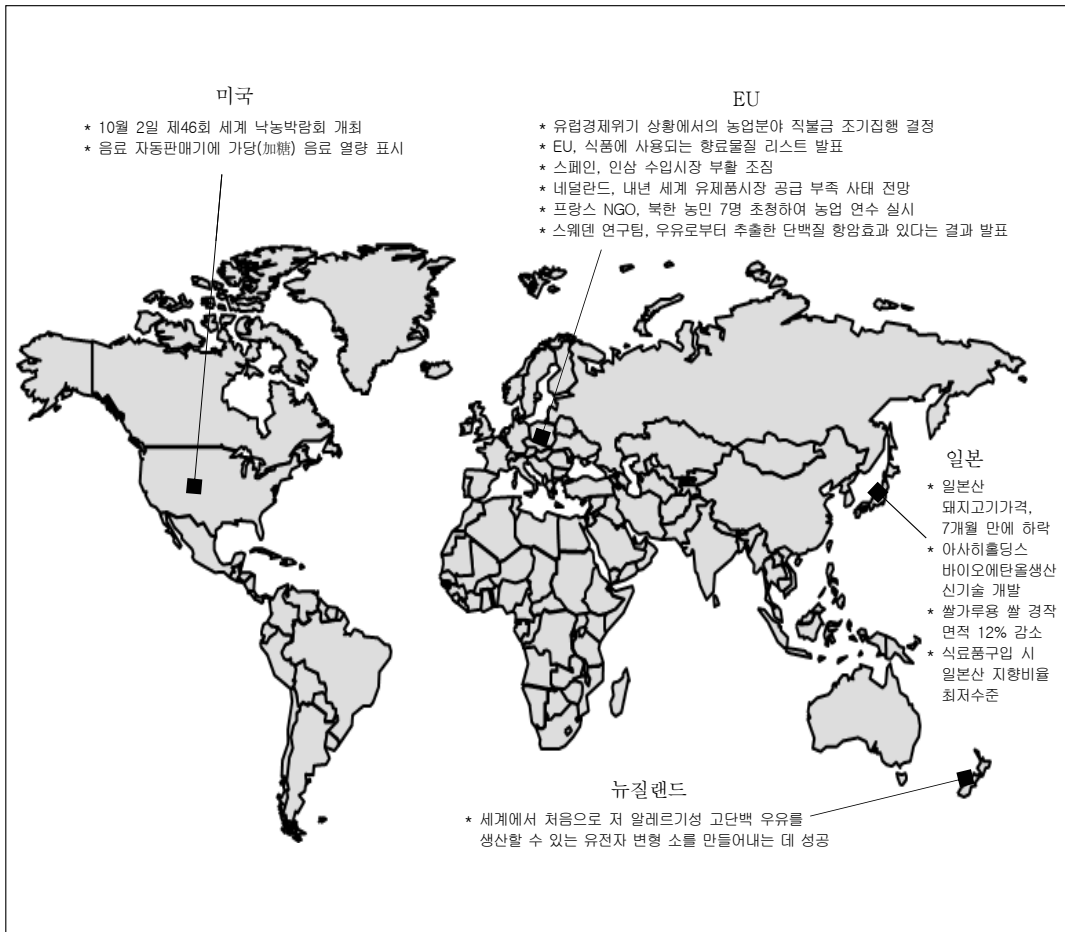
● WORLD AGRICULTURE



세계 농업 브리핑

주요 외신 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2012. 11)



1. 아시아/오세아니아

□ 일본, 일본산 돼지고기가격, 7개월 만에 하락

- 일본산 돼지고기가격의 도매가가 하락하고 있음. 지표가 되는 도쿄 식육시장의 돼지고기 도매가는 10일, 전일대비 12엔(3%) 낮아진 1kg당 394엔을 보여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개월 만에 하락함. 돼지의 생육이 좋아 출하가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 전국 도축두수는 10월 7만 1,800두(추계치)로 10월 첫째 주 평균과 도축두수에 비해 약 12% 증가함. 연휴가 끝난 후인 9일에도 7만 6,100두로 둘째 주에는 7만 마리대의 높은 수준의 출하가 계속되고 있음. 도매회사측은 ‘기온저하로 식욕이 왕성해진 돼지의 체중이 늘어나 시장출하증가로 이어졌다’고 언급함.
- 소비자조도 계속되어 슈퍼 등 판매점에서는 특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산 돼지고기는 일본산을 밀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다가, 닭고기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그 영향으로 일본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음.
- 작년에도 10월 하순에 300엔대 전반까지 도매가가 하락하였으며, 향후 도매가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0.11)

□ 뉴질랜드, 유전자변형 低알레르기 우유 생산

-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 알레르기성 고단백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함.
- 뉴질랜드 농업연구소(AgResearch)가 이룩한 이 성과는 1일 나온 영향력 있는 미국 과학원 학회지에 소개되었으며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고이즈 레이블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2일 언론인터뷰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단백질이 덜 들어간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음.
- 연구팀의 스테판 와그너 박사는 금번 연구를 통해 사람의 젖에는 들어 있지 않으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우유 유장 단백질인 베타-락토글로불린(BLG)의 양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함. 또한 유아들의 2~3%는 우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있으며 BLG 알레르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연구팀은 먼저 RNA 개입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해 생쥐를 모델로 실험한 다음 유전자 변형 암송아지 ‘데이지’를 만들어냈으며 데이지는 송아지의 젖샘에 영향을 주는 합성 세포를 어미소에 주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힘. 연구팀은 그 후 호르몬 요법으로 11개월짜리인 데이지가 젖을 생산할 수 있게 함.
- 와그너 박사는 자연적인 젖 분비를 시작할 때까지 2년 동안 지체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분비 축진을 통해 우유를 생산한 뒤 분석했다며 데이지가 만들어낸 우유는 BLG 단백질 함량이 검출할 수 없을 만큼 적게 들어 있는 반면 건락소 단백질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와그너 박사는 특정 우유 단백질 때문에 2~3%의 유아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얻은 성과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데이지가 만들어내는 우유에서는 이 단백질의 함량이 96%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또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단백질을 완전해 없애버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왔다고 지적하며 데이지가 희귀한 선천성 질병으로 꼬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연구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할 것이지만 유전자 변형 때문에 생긴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 뉴질랜드 말라간 연구소의 그레이엄 르 그로스 교수는 이번 성과는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우유 알레르기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함.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04)

□ 일본, 아사히올딩스 바이오에탄올생산 신기술 개발

- 10월 9일 아사히그룹홀딩스와 규슈·오키나와농업연구센터는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한 설탕의 양을 높이는 새로운 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함. 설탕의 정제효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당회사들이 경원시해온 사탕수수의 재배를 시작하여 바이오에탄올의 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사히그룹은 이번 신기술의 2015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여 기술개선을 진행함과 동시에 제당회사에 출자 등 사업화도 검토하고 있음.
- 금번 신기술은 설탕을 정제한 후 남는 폐당밀을 사용하여 에탄올을 제조하는 통상공정과는 반대로 에탄올을 먼저 만드는 것이 특징임. 특수효모를 사용하여 설탕의 제조를 방해하는 '환원당'만을 에탄올화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설탕의 생산성이 향상됨.
- 이에 따라 재배효율은 높지만 환원당을 많이 포함하는 사탕수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수요에 맞춘 에탄올과 설탕생산량의 조정도 용이해질 것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0.10)

□ 일본, 쌀가루용 쌀 경작면적 12% 감소

- 농림수산성은 17일, 호별소득보상제도를 토대로 2012년산 신규 수요 쌀 등의 경작면적을 공표함. 이 가운데 쌀가루용 쌀은 6,365ha로 전년대비 12% 감소함. 농림수산성은 금년 3월에 2012년산 쌀 생산량이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쌀가루용 쌀은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빵이나 파스타의 원료인 소맥을 대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음. 식품 업체나 대형소매회사를 중심으로 제품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 농림수산성에서는 금년 수요가의 재고조정으로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판매가 부진하여 쌀가루용 쌀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어 농가의 경작 의욕이 저하되고 있음. 산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식용 쌀과 비교하여 가격 차이가 거의 없으며, 소맥과는 다른 쌀의 기능성을 홍보하는 등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0.18)

□ 일본, 식료품구입 시 일본산지양비율 최저수준

- 일본정책금융공사가 실시한 2012년도 상반기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일본인이 일본 국내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에 일본산인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의 비율이 과거최저인 70.6%로 나타났다고 공표함.
- 조사는 2008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하였으며, 동 하반기에 85.3%라는 최고기록을 나타냈으나, 그 후에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임. 2010년도 하반기에는 73.4%까지 낮아진 후 일시적으로 약간 높아졌으나 금번 조사에서 최저수준을 갱신함.
- 외식할 때에 일본산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도 25.1%로 과거최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용환경이 좋지 않은 20, 30대 젊은이들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격이 수입품보다 10% 이상 가격이 높아도 일본산을 선택한다는 사람의 비율도 51.2%로 과거최저기록을 보임. 조사는 7월 상순, 인터넷상에서 실시되었으며 20~70대 남녀 총 2,000명이 응답하였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0.12)

2. 아메리카/중동

□ 미국, 10월 2일 제46회 세계 낙농박람회 개최

- 세계 최대 낙농박람회인 제46회 세계 낙농 박람회 (World Dairy Expo)가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됨.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7개 품종의 약 2,500여두의 젖소가 출품될 예정인데 세계 90여 개국 이상에서 6만 5,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됨.
- 지구상 낙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선함을 널리 선보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조사료 품질 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는 물론 가상 목장체험, 다양한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임.
- 특히 전시관에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85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여 새로운 낙농기 자재를 선보일 예정이며 금년에만 150개 업체가 새롭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04)

□ 미국, 음료 자동판매기에 가당(加糖) 음료 열량 표시

- 미국 음료업계를 대표하는 음료협회(ABA)는 8일, 내년 초부터 미국 내 일부 지역 관공서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가당 음료 열량(칼로리)을 표시할 방침이라고 밝힘.
- 세계 최대 음료회사인 코카콜라와 펩시코(PepsiCo, Inc.)를 비롯한 음료업계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관공서 내 자판기 버튼에 저칼로리 음료를 권장하는 메시지와 해당 가당 음료의 열량을 함께 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한 음식 서비스 업체 및 자판기 소유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 조치를 추후 미국 전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함.
- 음료업계의 금번 조치는 최근 미국인들의 열량 섭취량 증가와 폭발적인 비만 확산에 따른 것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P) 통계에서 현재 미국 성인의 35% 이상과 미성년자의 약 17%, 총 9,000만 명 정도가 비만으로 분류되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0.17)

3. 유럽

□ 유럽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농업분야 직불금 조기집행 결정

- 유럽경제위기로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직접지불금(direct payment)의 50%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함. 지급시기를 12월 1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함.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직접지불금 집행에 부정 또는 오류가 있었던 몇몇 회원국으로부터 2억 1,500만 유로의 직접지불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 이는 현재 진행되는 유럽 지역의 경제위기 및 불안정한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매년 직접지불금은 12월 1일에 지급되지만 올해는 금액의 50%를 10월 16일(2013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지급하기로 함. 현재까지 10여개 회원국이 집행위에 직불금 조기지급 요청함.
- 생산연계 직불금(coupled payments)을 유지하고 있는 신규 회원국에는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관련 직불금(beef and veal payments)의 80%까지 조기 지급을 허용함. 지난 5월말 지진피해를 입은 북부 이탈리아지역(Emillia Romagna, Lombardia and Veneto regions)에는 8월부터 직불금 조기 지급을 허용함.
- 회원국들은 농업분야 직접지불금의 집행 책임(예를 들면 직불금 수급자격 확인 등)이 있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집행실태에 대해 연간 100여 차례 감사를 수행함. 만일 회원국에서 직불금 집행상의 문제나 하자가 있을 경우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대해 직불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회원국들로부터 총 2억 1,500만 유로의 직불금 환수를 결정함.
-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으로부터 올리브 오일 펀드를 환수하기로 한 결정을 2011년에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에서 취소함에 따라 스페인에 1억 1,070만 유로를 배상하기로 함.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2.09.24)

□ 스페인, 인삼 수입시장 부활 조짐

- 인삼이 스페인 일반 소비자에게 처음 소개된 시기는 약 80년대 중반, 현지에서는 ‘인삼뽕’이 일어났음. 80년대 중반 이후 동양문화가 스페인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며 자연스레 인삼차와 같은 제품들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중

심으로 유통되기 시작함.

- 특히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90년대 중 한 때 인삼 붐이 일어났음. 이후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열기가 다소 주춤함.
 -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이는 인삼제품의 효능이 각자의 체질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현지 소비특성상 건강보조식품에는 순환주기가 있어 소비자들이 인삼 대신 다른 식품을 찾아 나섰기 때문임.
- 최근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의 인삼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임. 과거에는 스페인 내에서의 인삼소비는 인삼차, 인삼캡슐 등과 같은 완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인삼이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식품, 피로회복제, 에너지 드링크 등에 걸쳐 각종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즉 현지 소비자들은 인삼이 주가 된 제품보다는 인삼이 첨가된 제품에 대해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음.
- 현지 소비 확대와 함께 2010년 이후 인삼 수입 회복세 조짐을 보이고 있음. 스페인의 인삼 수입은 2009년에 66만 유로를 기록하며 절정에 달하였음. 이후 경기침체가 시작되며 2010년 인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약 39% 감소하며 41만 유로에 머물렀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수입규모가 꾸준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특히 2012년 1~7월 중 수입액은 약 55만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79%의 신장세를 보였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09.30)

□ 네덜란드, 내년 세계 유제품시장 공급 부족 사태 전망

- 네덜란드의 최대 농업은행인 라보뱅크(Labo Bank)는 최근 내년도 세계 유제품 시장이 공급부족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함.
- 식품농업연구자문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낮은 우유가격, 비싼 곡물가격 및 불안정한 기후 등으로 주요 수출국들의 생산이 줄어들어 유제품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함.
- 특히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과거 4년 만에 처음으로 유제품 수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주요 수입국인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의 경기 여건이 예년 같이 좋지는 않지만 수입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시장에서의 유제품 가격 인상

은 불가피한 것으로 호주, 뉴질랜드산 기준 내년 상반기 탈지분유가격은 톤당 3,300~3,8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12)

□ 프랑스 NGO, 북한 농민 7명 초청하여 농업 연수 실시

- 유럽 민간 구호단체가 북한 농민 7명을 초청하여 염소 사육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였음.
- 프랑스의 민간구호단체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e Urgence)는 8일 공개한 소식지에 북한의 4개 협동농장에서 선발한 농민 7명을 초청했다고 보도함.
- 프랑스 연수 책임자는 북한 농민들이 프랑스 서부 지역 되세브르 농장에서 열흘 동안 머물면서 프랑스 농민들로부터 염소 사육법과 염소젖으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교육을 받았다고 언급함.
- 프랑스 연수 책임자는 북한의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 사육에 종사하는 200여명의 농민에게 프랑스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수를 통해 북한 어린이 1만 5,000여명에게 고농축 단백질인 요구르트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편, ‘프리미어 위장스’는 유럽연합으로부터 120만 유로를 지원 받아 올해 2월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북한 어린이에게 제공할 요구르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황해남도과 평안남북도에 염소목장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09)

□ 스웨덴 연구팀, 우유로부터 추출한 단백질 양양효과 있어

- 스웨덴 룬드대학 식품공학과의 스티나 오레드손 교수 연구팀은 학술저널 ‘Journal of Dairy Science’ 10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한 단백질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속도를 유의할만한 수준으로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항암효과 측면에서 우유의 효용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대장암 세포들에 자외선을 조사(照査)한 후 우유에서 추출된 ‘락토페리신4-14’(lactoferricin4-14) 단백질로 처리한 결과, 세포주기 중 ‘S기’(synthesis phase)가 연장되면서 DNA 손상이 감소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함.
 - DNA 손상이란 DNA 사슬이 파괴되었음을 지칭하는 개념임.

- 동 보고서의 제목은 ‘사람의 대장암 세포들을 자외선에 조사한 후 락토페린 추출 펩타이드로 처리했을 때 나타난 DNA 손상 감소효과’이며, 대장암 세포들에 자외선을 조사(照査)하여 DNA 손상을 유발한 뒤 이 세포들이 삽입되어 있는 시험관 가운데 한곳에만 2.0 μ M 용량의 락토페리신 4-14 단백질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금번 시험을 진행하였음.
- 뒤이어 연구팀은 유전자 손상 정량분석법(comet assay)을 사용하여 시험관 내 세포들에서 나타난 DNA 손상도를 측정하였음.
- 그 결과 락토페리신 4-14을 투여한 시험관 내부의 암세포들은 그렇지 않은 시험관 내 암세포들에 비하여 손상된 DNA 수가 유의할만한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에 올레드손 교수팀은 락토페리신 4-14을 투여했던 시험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DNA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플랩 엔도뉴클레아제-1(flap endonuclease-1; 핵산내부가수분해효소)의 수치가 증가한 반면 세포괴사에 관여하는 B-세포 림프종 2-관련 X 단백질의 수치는 감소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음. 아울러 손상된 DNA를 효율적으로 회복시키는 감마-H2AX 단백질의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올레드손 교수는 우유 속 락토페리신 4-14의 항암효과에 기인해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08)

□ EU,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물질 리스트 발표

-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향료물질(flavouring substances)의 목록을 담은 새 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872/2012)을 채택(2010.10.1)하였음.
- 향후 동 규정 부록 I Part A에 포함된 향료물질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positive list system), 식품업계의 적응기간을 위해 2013년 4월 22일부터 적용됨.
- EU집행위원회는 향료물질 외에 다른 유형의 향료(flavourings)에 대한 경과 조치(transitional measures)를 담은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No 873/2012)도 채택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됨.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2.10.12)

4. 국제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 출범

- 지난 6월 20일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정상회의(Rio+20) 계기 서명된 「GGGI 설립협정」의 효력이 10월 18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GGGI는 국제기구로 출범하게 됨.
- 서명국 중 세 번째 국가가 비준문서 원본을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한 후 설립협정이 발효, 국제기구로 전환됨. 국제기구로 출범하는 GGGI는 18개 서명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3일, 24일 양일간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
- 서명국은 한국, 호주, 덴마크, 카타르, 코스타리카,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영국, 파푸아뉴기니, UAE, 노르웨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키리바시,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등 18개 국가임.
- 향후 GGGI가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녹색성장의 ‘Think and Act Tank’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명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 자료: 외교통상부(2012.10.17)

자료 작성: 이해은 연구원, 최양규 인턴 연구원

M 45-147 세계농업 제147호 (2012. 11)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2년 11월

발 행 2012년 11월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